

인권정보자료실
R1.1.18

인권하루소식

제2007호 ~ 제2124호

합본 18호
(2002년 1월 ~ 6월)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제주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시라 후 리나
사기 진정되고 있다. 4·3의 진실 규명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시라 후 리나
사기 진정되고 있다. 4·3의 진실 규명
4·3에 대한 조명이 밝아진다. 연관 4·3에 관한
이시 여는 해 보다도 훨씬 앞선 시점 시라 후 리나
사기 진정되고 있다. 4·3의 진실 규명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2002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8

인권
정보
자료
실



인권정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1일(수)

제 20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발전소조의 파업후, 청평양수발전소는 지하발전소의 출입구의 셔터를 밖에서 잠근 채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해 수용소를 방불케 하고있다.

29일 오후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 입구에 설치된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밖의 초소에서 셔터를 열 수 있게 돼 있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지하발전 시설은 이 출입문으로부터 경사 5.7도 각도 1.3km 길이의 터널을 내려가야 있다. 발전소 조 청평양수 유영상 지부장은 "이는 파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2월 25일 파업 돌입 이후부터 셔터를 내리는 일이 잦아지다가 현재는 근무자의 교대시간 및 점심시간에만 출입문이 개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지하발전소는 주요 시설로 제한구역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왜 파업 이후 갑자기 통제가 강화됐냐고 묻자, 회사측에서는 "불순분자가 침입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 해고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임을 내비쳤다. 청평발전소에서는 파업과 관련해 유 지부장 등 7명이 현재 해고된 상태.

이같은 회사측의 출입문 통제에 대해 노조에서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출입문을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지부장은 "지하발전소 근무자들이 마치 감옥에서 일하는 것 같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지하발전소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한 명은 "간헐있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자도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느낌"이라고

말어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영국 변호사는 "입구를 밖에서 봉쇄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감금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아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 화재가 나는 등 유사 시 피할 수 있는 통로를 밖에서만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 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겹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에도 회사측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통제와 노조활동 방해가 심각하다. 지난 25일 노조에서는 구속됐다 풀려

난 동료의 환영 행사 차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42명의 조합원 중 해고자 7명 외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8명에 불과했다. 회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간담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며 "참석하면 나중에 안 좋을 것"이라고 불참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조합원은 "여기(간담회에) 오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사측은 간담회 시간 중에도 모든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사업소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전치만 노조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징계 및 해고를 무기로 조합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주영)

클릭 인권정보자료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02-774-8774) 등/ 2002 / 252쪽
노동현장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는 한 해 2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명이다. 전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속출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작업장. 이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고는 그동안 '산업재해'라는 용어로 불리었다. 즉 산업재해란 공장의 화재나 폭발 같은 산업장의 재해를 강조해온 대신 노동자의 육신의 손상이나 삶과 죽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 민중의료연합은 이제 산업재해를 '노동재해'로 산업안전보건을 '노동안전보건'으로 용어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현장 속에서 노동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책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노동자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교안집으로 시작해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공간을 만드는 일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가능하다는 것.
1부는 노동보건운동의 역사와 이념, 한국 노동안전보건제도의 문제점을 다루었고, 2부는 노동보건 현장활동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3부는 건강검진 사업과 작업환경 측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활동방안에 역점을 두었다. 4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요양 상담사업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으며, 5부는 불안정노동자의 건강문제와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은아)

소수투하동인

올라 빈소005

(호2015005 - 호3805005)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호주에서는 장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직접 운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사가 운전할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의 관료화를 점잖게 풍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 등 25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그동안 아껴왔던 비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주적 절차는 어디로?

먼저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편집장은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편집장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재연"됐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관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편집장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차별조사 및 구제활동 실적은 실로 참담했다. 4월 10일 현재 접수된 진정사안은 1천5백44건, 먼진정정이 1백35건이었지만, 당시까지 국가인권위가 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 이후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과 두 건의 긴급구제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인권위의 의지부족과 관료적 마인드로 인해 가능한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의 비공개주의인가?

이어 발제에 나선 한상희 교수는 주로 법과 시행령의 한계에 비판을 집중

했다. 법 제32조 1항은 △재판·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만, 국가인권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부당하나,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현행법이 권리구제의 중복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또 한 교수는 "국가인권위는 자체가 국가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전선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국가기관에 포위된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우호적 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인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단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국가인권위는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한 교수의 진단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포정에 있는 사항 등에게까지 비공개 가능성을 확장하는 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정보공개법 제7조의 정보공개 예외사유보다 더욱 더 강한 장벽"이라고 혹평했다.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세번째 발제자는 제천시 장애인차별사건의 진정인 김용의 교수(서울대 의학)였다. 김 교수는 "내가 구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별다른 구제조치 없이 차별이었다는 판단만 내린 국가인권위를 비꼬았다. 김 교수는 이어 "국가인권위는 제천시장에게 사과를 '권고'할 수도 있었으나 그마저도 안 했고, 위증에 대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조사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끝으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현재의 국가인권위 구조는 의사결정과 집행이 분리돼 있다"며, "인권위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인권위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려고만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게 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인권위 유구무언

발제가 끝나자,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국가인권위 위원과 사무총장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인권위원 박노현 교수(방송통신대 법학)는 대외적 공개성에 대해 "일론적·총론적 수준의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좋은 것도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부족함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유시훈 인권위원도 "위원회 내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영애 사무총장은 "직제령이 통과된 것이 2월 중순이고 현재까지 1백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들이 참석자들의 비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계속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해 왔다"며, "그러한 덕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신뢰하지 못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상임활동가는 "현재 국가인권위가 처한 어려움은 시민사회와의 신뢰회복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출범과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해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를 바라보는 인권사회단체들의 감지 않은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로써 국가인권위가 인권사회단체들의 재찍을 달게 받아들여 이전보다 더욱 분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2일(목)

제 20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 협박

1일 제112주년 노동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공원. 비 개인 파란 하늘 아래 장애·이주·실업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한 함찬 몸짓이 시작됐다. 이제껏 노동운동의 주변인처럼 여겨져 온 이들이지만 '불안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2002 Mayday' 행사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노동자는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신명나는 목소리에 맞춰 들쭉 들쭉 지어 해방축을 추는데, 피부색이 다르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만 다를 뿐 노동자들 사이엔 구분이 없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공공근로나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실업노동자들은 '남행열차'의 가사를 바꿔 실업의 고통을 노래했다. "비내리는 대한민국 실업자문제 지역 주민 슬퍼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일자리도 흐르네~"

장애인 노동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순서가 됐다. 2~3개의 계단도 휠체어가 올라가기엔 힘겹다. 어디선가 급히 구해온 나무판으로 측석에서 장애인용 경사로가 만들어졌다. "반토막 몸통이로 살아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마라" 나란히 무대 위에 선 장애인 노동자들이 들고 있는 종이선전물엔 이렇게 적혀 있다. 한 여성장애인은 "소외됐던 장애인 문제를 노동자들과 함께 알리고 투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카르라 씨(가명)는 가수 연영석 씨와 함께 '에이 씨,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나갈 줄 아냐'란 노래를 불렀다. 원래 이 노래

는 정리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은 포크송의 노래.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3D 업종에서 인간대우 못 받으며 뼈빠지게 일 해 온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노래였다. 정부는 '불법채류 종합방대책'을 세워, 힘들게 일 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하고 1년 안에 이 땅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르라 씨는 노래의 맨 마지막에 말했다. "못 가!"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은 문화집회를 마치며 "장애·이주·실업·여성·비정규 노동자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나오, 우리의 동지여, 형제자매"라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노동절 본 대회는 앞서 열린 불안정노동자들의 문화집회와 달리 그다지 활기 없이 진행됐다. 지난 4월 2일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온 민주노총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짐작케 해줬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복귀 이후 회사측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 집회 참가율도 저조했다. 울산화력 발전소에서 온 한 조합원은 "어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노동절 집회에 가는 사람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협박했다"며 "그래서 많이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 집회에 회사 사람들이 와서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까지 찍어갈 거라고 했다"며 "그나마 울산은 상황이 좋은 편인데, 다른 발전소들은 더 노조 활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휴일에 집회 참가마저 가로막는 전근대적 노조 탄압이 노동절 1백12들을 맞은 오늘날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주영]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제58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철호 씨가 유엔인권위를 최종 결산하는 소식을 제네바에서 보내와, 이틀에 걸쳐 심는다.<편집자 주>

지난 달 26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일룩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파행적 운영과 논의의 정치화로 사상 '최악의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주간 라말라, 예닌 등 팔레스타인 주요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사건들이 국제뉴스를 뒤덮는 동안 인권위에서도 이에 관련한 논쟁이 압도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논쟁이 전체회의의 50%가 넘는 시간을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특별회의를 거쳐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나 이스라엘의 비자발급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회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격론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격을 비판하고 인권고등판무관의 조사단 방문을 촉구하는 결의안(E/CN.4/2002/L.116)을 파키스탄 주도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면에서 계속)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멕시코, 대테러조치의 인권침해 방지 결의안 철회

민간단체, 유엔인권위의 불투명한 회의진행에 회의

(⇒1면에서 이어짐) 9.11 사태이후 테러방지조치를 이유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도 이번 유엔인권위의 주된 초점 중 하나였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인권고등판무관은 수차례 각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유엔인권위가 관련된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민변 등 민간단체들도 각국의 테러방지법이 안고 오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반복했다.

결의안 철회 배후, 미국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대테러조치에 따른 인권침해의 방지에 관한 결의안(E/CN.4/2002/L.110)이 제출됐으나, 마지막 날 제안국 멕시코가 스스로 결의안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프랑스 등 일부국가와 대다수 민간단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철회의 배후에는 미국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유엔인권위원회는 파행적 운영이 극에 달한 회의였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둘째 주부터 급작스럽게 회의시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바람에 회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 되었다. 결국 발언시간 축소, 민간단체 발언 취소 등의 파행적인 조치를 통해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회기 내내 일정이 뒤죽박죽되는 바람에 각 주제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는 아예 불가능했다. 특히 논의의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주제별·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특별보고관의 발언거부로 취소됐다.

회기 내내 "회의는 끝나야 한다"?

이러한 회의시간단축과 파행운영을 가장 환영하는 회의 참가자들은 당연 정부대표들이었다. 한편 폴란드 출신 야쿠보르스키 의장은 회기 내내 회의의 내용에는 관심도 없이 '회의는 끝

나야 한다'고만 반복하다가, 마지막 날 하루종일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고 반복해 주위의 실소를 자아냈다.

파행 운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민간단체였다. 회의 초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들과 중국, 수단,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LMG)'의 주도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하게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발언시간 축소에 더해 심지어 아예 '발언봉쇄'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어렵게 제네바까지 온 제3세계 민간단체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각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가장 활발했던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의제에서 민간단체의 발언이 취소됐던 것이다.

민간단체 참여권 제한, 제도화 우려

하지만 연대 형성의 실패로 민간단체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참여권 제한이 앞으로 '제도화'될 거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어용 민간단체(Government Organised NGO)들의 전횡이 갈수록 심해져 민간단체 사회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현상도 보였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부에서 지원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은 자무-카쉬미르 분쟁지역에 관한 발언에서 자국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단체 간에 서로 비난하는 꼴불견을 보였다. 또한 일부 중국 단체들은 자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양일변도로 일관하는 반면, 파룬공 신도들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이러한 단체들이 정부가 민간단체 참여를 제한하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회원국에서 탈락한 채 진행된 회의

였다. 미국은 예년까지 중요한 결의안에 대해 출판 트집을 잡았던 데 비해, 올해엔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짧게 밝혔을 뿐 거의 활동이 없었다. 하지만 과테말라가 미국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 주위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수많은 논의와 결의안 표결 과정의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별보고관 "상시방문허용"해야

유엔인권위의 파행적 운영과 정치화를 지켜보며 주요 민간단체들은 유엔인권위 회원국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법률가위원회(ICJ), 국제인권연맹(FIDH) 등 이른바 주요 인권 단체들은 공동 발언문에서 '유엔인권위 회원국이라면 스스로 지명한 특별보고관이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는 "상시방문허용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 일본, 중국, 쿠바, 콩고 민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등 회원국 중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35개국을 열거하면서 비난을 가했다. 한편 53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주요 6개 국제인권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고서 제출 등 가입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유엔인권위 회원국에 대한 자격조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사결정 투명성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국가별 혹은 주제별 상황보고와 정부대표와 민간단체 대표의 일반토론을 거쳐서 관련된 결의안이 마련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진행의 순서이다.

그러나 실제 결의안은 정부대표에게 비공개회의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특별보고관과 일반토론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유엔인권위의 회의진행에 대해 한 민간단체 대표는 '유엔인권위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제네바:김철효) (⇒마지막화는 내일자에)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흐름과 쟁점

1. 이스라엘이 저지른 학살의 피비린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팍) 자치지역으로의 침공을 확대(4.1), 베들레헨의 예수탄생교회에도 총격을 가했고 구급차의 진입도 봉쇄했다.(4.3~4.4) 메리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팍에 자신을 통과해 줄 것을 유엔인권위에 요청했고(4.2), 인권위는 고등판무관의 팍 파견을 결의(4.5)한데 이어, 이의 팍 점령과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4.15) 유엔특사는 이스라엘이 침공한 예년에 대해 "곳곳이 파괴됐고 시체부패로 인해 교악한 냄새가 코를 지른다"며 증언했지만, (4.18) 이는 "학살은 없었다"고 발뺌했으며(4.19) 끝내 예년 난민촌에서의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을 거부했다.(4.30)

2. 한국의 노동기본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료(4.2)한 후, 회사측은 3백48명을 해고하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를 강요(4.7~)하는 등 노조탄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또 산자부는 현재의 산별 노조의 해체를 유도하고 노조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진행하도록 회사에 지침을 내렸다.(4.21~) 심지어 사측은 노동자들의 노동절 집회 참가까지 가로막았다.(4.30) 철도노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철도청이 파업참가자 6명을 파면(4.1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2)

3.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몽고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총 66개국에 됐다. 7월 1일부터 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을 갖게 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설정...1년 출국 준비기간 주겠다(3.25~5.25)/ 법무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 밝혀(4.19) 이주노동자 집회는 무산됐다.(4.21) 이주노동자 2명,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와 주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4.28)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14),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다"며 실질적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4.16) 나아가 25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어, 인권위 설립 및 운영과정의 비민주성과 관료화에 대해 비판했다.(4/30)

6. 심각한 노동자 산재, 가린다고 가려지나?

대우조선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산재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규도를 줄이려 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4.4) 이에 민변 등이 진상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 신청 방해가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4.19) 보건의료단체들은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4.24) 한편, 집배원들이 하루평균 14.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지난 5년간 17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4.24)

논평

-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4.13)
·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4.20)
·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재의 오판(4.27)

인권이야기

- 누가 국가인권위를 흔드는가?(4.2/이창호)
·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4.9/육이은)
·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4.16/이우갑)
·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4.23/권두섭)

인권정보자료

-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4.3)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4.11)
· '떨거둥이' 참간호(4.18)
·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4.24)

울림

- 노란 들판(4.5)

연재

- 유엔인권위 소식 ③(4.4) ④(4.5) ⑤(4.10) ⑥(4.17) ⑦(4.19) ⑧(4.24)

기고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 이스라엘·스위스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4.5)
· 구급단 병역거부자들, 유엔인권위에 통보가능(4.10)
· 유엔인권위 한국참가단, 종횡무진(4.12)

기획

-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4.13)
·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공소시효 배제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4.3)

중요 판결·처분 및 소송

- 서울행정법원, 98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창주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 상해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공무상 재해' 인정(4.3)
· 창원지법 진주지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간디학교 교장에 선고유예(4.17)
·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에 대해 합헌결정(4.25)
·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한 군행형법 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4.2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3일(금)
제 20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어린이는 5월에만 보호·육성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이한동 국무총리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후 정부가 1일 확정 발표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어린이날 즈음에 의해 되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최근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경찰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동원하는 등 어린이를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변호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자체에 폭력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정부가 일반적인 규범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방패막이로?

또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씨는 "어떤 부모가 아이를 집회에서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나"며 "정부의 대책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화가 이동수 씨는 "아이들을 어디

말길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집회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부모가 아이랑 집회에 참가하는 걸 막으려면, 아예 정부가 나서서 집회장 주변마다 탁아소를 만들라"고 말했다.

정부, 걸쳐레식 대책 되풀이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다른 내용들은 새로운 것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번 정부 대책 중 "어린이 권리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지표를 개발한다"는 내용은 이미 6년 전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이다.

또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비껴나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담사들은 "정부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 현장에서 어린이 상담과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예방교육부터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어린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특수교육 개념 및 장애 범주를 확장해 장애 어린이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특수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통합교육 속에서 장애어린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만화 사랑방

이동수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끝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들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실도

(→어제 자에서 이어짐)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CN.4/2002/L.12)의 표결 과정에서 캐나다의 더번 회의의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며,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수의 지지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은 기권). 이 워킹그룹은 아프리카인이 식민지와 노예제로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게 된다.

'건강권' 특별보고관 임명

지난 200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위원회가 '도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에 관한 일반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유엔인권위는 올해 이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브라질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E/CN.4/2002/L.47)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각국의 상황 등에 대해 조사, 보고하게 된다.

유엔사회권 포럼, 올 여름에

지난 5년 간 유엔인권소위가 제안해 왔으나 인권위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던 유엔사회권포럼이 올해부터 소위원회 회의(7월말 시작) 전에 이를 간 열리게 된다. 사회권포럼은 세계화의 맥락에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토론을 위한 것으로 '빈곤과 인권'을 올해의 주제로 하고 있다.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WTO) 등 지금까지 국제인권 논의의 바깥에 존재해 왔던 국제경제기구의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역거부권 관련 결의안 통과

98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관한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토론에서 싱가포르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나, 참관국인 관계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빠르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8)을 중국, 보츠와나 등의 연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헌법판소에 계류 중'

이라고 발언했으며,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문방지국제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지난 10여년 간 논의되어 왔던 고문방지국제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초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인도 범죄'인 고문의 의혹이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국제조사단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 초안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되며, 20개국의 가입과 함께 발표된다. 표결 과정에서 인권후진국 그룹인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LMG)'이 반대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주권침해를 핑계로 반대했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본회의는 지난 26일 막을 내렸으나, 그 후속작업은 한해 동안 계속된다. '소수자권리', '구조조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현대판 노예제' 등에 관한 워킹그룹들이 한해 동안 열리게 된다. 또한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자의적 구금' 등의 주제별, 버마,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별 특별보고관의 조사 작업도 일년 동안 진행된다. 올해엔 특별히 인권위의 파행진행과 관련 '운영에 관한 의장단 특별회의'도 계획됐다. 한편 유엔 인권위의 하부단위인 인권소위원회는 7월 말부터 3주간 열리게 된다. (제네바·김철호)

(→1면에서 이어짐)

또한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를 강구"한다고 밝혔는데, 어린이가 심리적 유기 상태에 방치되기 쉽다는 문제가 지적돼 온 시설수용 역시 정부 방안 중 하나로 나와 비판을 받았다.

한편, 민들레 쉼터의 최효정 사회복지사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별도로 보호해야 할 어린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 등을 지원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5월마다 되풀이되는 걸쳐레 식 대책 발표보다는 어린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주영)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한 층 더 땅과 가까워졌습니다.

성북구 삼선교 쪽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가 명륜동 사무실 5층에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사무공간은 3층으로 한 층 내려왔습니다. 4층은 이미 있던 인권정보자료실 외에 회의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사와 공간 변경 등으로 인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도 인권지킴이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4일(토)

제 20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코피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고 말한다. 비두 씨와 같이 한국 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약 26만 명.

최근 정부는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고 최장 1년간의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자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조합원들은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1년의 시간을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체류심사과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처에서는 "기간을 1년이나 준 것도 큰 시혜다. 1년 내에 모든 불법체류자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조차도 모두 1년 뒤에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한 필리핀 노동자는 "1년이라도 단속 걱정 없이 일하려고 신고는 하지만, 1년 뒤엔 신고한 사업장에

서 도망 가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주노동자들의 분위기를 전한다. 결국 현재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일 뿐, 대안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사해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상화 정책국장은 "많은 수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우선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논평〉 '어린이 보호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확정·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추진'된다면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각계 의견수렴, 추진주체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발표'에 앞서 과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종합대책'의 면면을 볼 때 그런 면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층분성과 구체성에서 볼 때 내용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은 이미 96년부터 유엔과 민간단체가 권고했던 내용이고, 복지와 관련된 내용에선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있어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머리'적으로 '집회나 시위시 어린이 동원제한 추진'을 내걸었다. 집회와 시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보장돼있는 기본권이며, 그 자체가 불온성과 폭력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사진찍기를 즐겨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어린이 동원의 천재가 아니던가. 집회나 시위 참가는 어린이에게 자연스런 시민권 학습의 장이며, 부모의 교육 양식의 하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건 고려해야 할 점은 어린이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신중하게 고려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이란 미명하에 부모와 자녀의 동행을 "시위 동원"으로 둔갑시키는 당국은 그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해온 관련 행사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의 추진 책임을 진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의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96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와 '아동복지위원회'를, 2000년에는 '아동권리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아예 존재한 바 없거나 폐지되거나 그 활동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과연 이번에 만들어지는 협의회가 정부가 이전에 언급했던 조직과 무슨 차별성이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을 포괄하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구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어린이 인권을 5월에 한당주의로 얘기하려는 태도를 버리자. 어린이 인권을 위해 일하는 많은 전문가와 민간단체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정말 책임지고 추진할 정부 단위를 명확히 하는 일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②

전쟁과 인권

올해 인권영화제 작품선정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상영작의 규모는 국내외를 합해 35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으로 모아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류를 파괴해왔다. 대부분의 전쟁이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실상은 권력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것일 뿐 가장 큰 피해는 민중들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선정된 영화 중 '전쟁과 인권'으로 묶이는 작품은 모두 일곱 편이다.

〈아프간 전쟁 Jung: in the land of the Mujaheddins〉은 지난 2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지쳐있는 아프간 민중들에 대해 말한다. Jung은 달리 언어로 전쟁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자주 쓰인다. 1999년 탈레반 집권기, 이태리 출신의 의과 의사 지노는 아프간 북부에 응급병원을 설립한다. 작품은 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들을 통해 전쟁과 기아 그리고 폭력에 시달려온 아프간 민중들의 참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 작품과 더불어 북부동맹의 총사령관이었던 마수드의 생전을 담은 〈마수드 아프간〉은 아프간의 전사상황과 그에 얽힌 외세의 개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9.11이 일어난 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영상물 〈9.11〉도 상영된다. 사건 직후 카메라는 뉴욕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시민들의 반응을 담았다. 충격과 경악은 깊은 반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아랍인들에 대한 보복 테러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작품은 이러한 전운을 포착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 소말리아에서 저지른 침략행위를 상기시켜 미국의 참혹을 촉구한다.

걸프전이 미국 민중들에게 미친 악영향을 말하는 작품 〈후세인의 미친

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 진정한 의미의 미국독립영화라고 평가받는 이 작품은 3시간이 넘는 장편 드라마. 후세인 부인은 멕시코계 미국 시민이다. 영화의 배경은 걸프전 발발 직후. 그녀의 두 남편은 하교 후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후세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혹한 죽임을 당한 것. 비운의 이름을 남겨준 아버지는 어이없게도 이집트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두 이야기와 평행선을 이룬다. 하나는 반전 운동에 가담하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와 나머지는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의 후유증을 다룬 것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살인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는 영화 〈처음 살인〉은 시종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을 죽여 본 경험'을 날같이 밝힌다. 작품은 전쟁이란 인간의 악마적 속성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부추기는 '살인기계'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전쟁을 빠뜨리지 않고 필름에 담은 전쟁 사진작가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전쟁사진작가〉의 주인공 제임스 나트웨이는 코소보,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등지로 우리를 초대해 그곳의 비극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패륜행위를 고백하는 〈일본군 악마〉도 전쟁의 반인륜성에 대해 소스라치게 한다. (김정아)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본청 6층 사무차장실을 향의 방문해,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실력 저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공무원들의 전국적인 연합체 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규제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국회사무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대외협력국 김석 씨는 "(차 위원장의 징계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행정자치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의 징계기도를 규탄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부 소속 정용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파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에 대한 징계기도가 일단 저지됨으로써, 다른 기관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7일(화)

제 20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몇 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황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개발) 직원 최태업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씨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대법원 행정처 관리과가 회사측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9일 최씨는 신원과 관련해 대법원 관리과로부터 '사면복권은 됐지만 노동단체와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최씨는 97년 한국노동청년연대라는 노동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복권된 바 있다.

명호개발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회사측은 이를 근거로 최씨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지난 달 26일 결성된 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 지부장이어서 최씨의 해고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6일 낮 4시 30분께 대법원 행정처 관리과 관계자는 "신원 조회 결과를 회사측에 통보하긴 했지만 내보내라고 한 건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어 그 관계자는 "이미 사면복권이 됐다면 개인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회사측에 알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는 질문에 "뭐라고 말하

기가 그렇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5시께 회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쪽에서 신원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통보해 와,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며, "대법원 출입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회사측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복직시키라고 하면, 수용할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시간도 채 지나

지 않은 시각, 최씨는 회사측 팀장으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쪽에서 '계속 일을 시키라'고 연락이 와서 관리사무소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해고가 예상 외의 파장을 일으키자 이에 놀란 대법원과 회사측이 부랴부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씨는 "다시 일을 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자기를 멋대로 그만두라고 했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건 분명한 황포"라며, "내가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회사와 법원 측에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임모 씨는 98년 6월 대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25인승 소형버스로 학원생들을 운송하던 중 99년 12월 집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흡인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200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동하고 임씨가 받은 돈은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으로 인정하며, 임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임씨가 △학원에서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학원에서 지정하는 차량색상과 상호, 문자를 도색 부착하고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으며 △무제한 행동시 단순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장 김기덕 변호사는 "사실상은 근로계약 체결인데 마치 자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해서 근로계약을 회피하고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최근의 추세에 쫓겨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법용)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병병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체벌이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말인가.

사실 체벌은 학교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선생님들 대부분은 스승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 아이들도 불만은 많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몇 해 전인가 체벌이 금지되었을 때다. 언제부터 교권 보호를 외쳤다고 갑자기 보수언론들이 들고 일어나 '교권 추락'이라며 난리를 쳤다. 그리고 일부 폭력교사의 심각한 폭행에 참다못해 경찰에 연락을 한 학생들을, 앞뒤 상황은 다 무시된 채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패륜아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회가 체벌만큼은 용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만해도 학교에서 두발 자유화라든지, 학생회 자율성 등을 주장할 때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던 선생님들도 체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많다.

하지만 체벌이 과연 필요한 걸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언가 잘못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아,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몸으로 때우지 뭐"다.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일상화가 되어 버리면 수단인 체벌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된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한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맞는 것을 두려워 할 뿐이라는 거다. "요즘 애들은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라고 하시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 때리지 않아서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도록 학교가 훈련 시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더군다나 체벌이 교사에게 무한정 용인된 분위기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평소 불량학생이라고 낙인찍힌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학생부실로 불려가며,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자백을 강요받으며 체벌을 당한다. 좋게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고문이다.

쿠닌과 검프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을 당하는 학급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급 학생에 비해 적개심과 공격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학습 활동에 관심이 적다고 한다. 또한 반두라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체벌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모방학습 시킨다고 한다. (송지은, 1998)

무엇보다 한 인간을 폭력으로 훈육시킨다는 발상이 올바른 것일까? 한 인간을 폭력으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권침해이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육이은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주간인권호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1. 노동자 탄압, '고마해라!'

청평양수발전소, 노동자 작업 도중 지하발전소 출입구 셔터 내리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확인(4.29)/ 발전노조, '불법파업 참가자 행동기록표' 공개... '불법행동지침에 따르는 사람'에서 '회사지시에 동참하는 사람' 등 A~C등급으로 분류(5.1)/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외유 비판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0여명 징계방침(5.3)/ 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의 차봉천 위원장 징계기도 지지(5.3)

2. 의문사, 밝혀지는 의문들

의문사위, 고 최종길 교수 사건 관련 "중징 수사과 지시에 의해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 확보"...경비원도 상부의 지시로 인한 거짓 폭력당 실토(4.30)/ 일 법의학자 가미야마 시게타로 박사, "고 김준배 씨 구타에 의한 사망이 확실"(5.5)

3. 인정사정 볼것없다, 미·이 막나가기

이, 유엔 예년 조사단 협력거부 결정(4.30) → 유엔, 이 협력거부로 예년 조사단 해체 결정(5.2) → 이,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병력 철수...아라파트, 연금 해제(5.2)/ 미 하원, 농업보조금 증액법안 통과...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제소 검토(5.2)

4. 정부의 팍팍 행동들

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방자해 집회 현장에서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 금지(5.1)/ 경찰, 진상규명 외면한 체 동의대 사건 관련 일당 집단 행동...검은 리본 폐용, '5·3 동의대 방화치사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막도 설치(5.3)

6.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비판 봇물(4.30)/ 112 돌 세계노동절,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임금노동조건 저하하는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주장(5.1)/ 북과공작원, 유공자 인정과 보상 요구 사발시위(5.2)/ 10기 한총련 출범식, 한총련 합법화 위한 이적 규정 철회 요구(5.3~5)

○ 중요 판결

중앙환경정쟁조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쟁의로 인한 해고는 부당"(5.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KBS의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방영 불가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열린채널' 측이 편성권한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아래 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세상이 제작,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작품은 지난해 '한국독립당연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행자부 공무원의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으나 연출자 측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편성 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제목 '~찢어라'를 순화하라?

앞서 제작단체인 진보네트워킹센터는 운영협의회로부터 1월 25일과 3월 15일 두 차례 내용 수정을 요청받고, 방송용임을 감안해 작품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미 몇 장면을 수정했다. 즉 △비속어가 나오는 장면은 처음에는 '뽀' 소리로 대체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삭제했고 △공무원 이름은 익명처리하고 화면을 뿌옇게 처리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 소지를 없앴 것이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킹센터는 "제목 중 '~찢어라'의 순화 요청은 1차 수정 요

청 때 없다가 갑자기 추가된 것인데다 창작자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기중 변호사도 "~찢어라"는 제목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방송심의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제목의 '순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했다.

또 진보네트워킹센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장면은 주민등록제도의 태생과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이

므로 "운영협의회 측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장면이 논리적 타당성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면 삭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은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 1962년도에 제정됐고 197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열 손가락 지문 감제날인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제작단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는 연출자 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으며 끝내 방송 편성 불가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킹센터는 6일 성명을 내 "열린채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할 것"을 KBS '열린채널'에 요구했다. (→ 2면에서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http://minbyun.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minbyun.jinbo.net> 사이트에 들어가면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관련 소식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등에 관한 각각의 보고서도 모아져 있어, 이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인권상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실태와 테러방지법 관련 내용 등 민변과 평화인권연대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 내 인권이슈를 다루고 있는 발언문도 만날 수 있다.

-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2/73 (한국관련부분 26쪽, 102항), A/56/253 (한국관련부분 17쪽, 63항)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 E/CN.4/2002/WP.2
 - 민간단체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케이커, 아시아법률자문센터 등)
 - 결의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CN.4/2002/L.62) 종교적 불관용 (E/CN.4/2002/L.56)
- 2. 테러방지법
 - 민간단체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반대국제기구 등)

한편, 58차 유엔인권위 6주간의 주요 논의를 추적할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기사모음은 곧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자료실에 올려질 예정이다. (최은아)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팔레 월슨)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제28차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가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위원회 중 하나인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베냉 등의 정부보고서와 민간단체의 대응보고서가 검토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영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 대표단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수단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유럽인권법정의 결정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체벌'의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는 어린이 관련 민간단체들이 체벌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1979년에 '손재깍방지법안'을 도입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스웨덴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아동복지회 (Save the Children)'의 영국지부가 최근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어린이 체벌은 미국, 영국, 카메룬,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등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한국은 97%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98년 유럽인권법정은 양아버지에게 심각한 구타를 당한 영국의 한 15세 어린이가 영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체벌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영국정부가 이 어린이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시민정치적권에 관한 위원회(HRC)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라고 규정했으며,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7년 보고서에서 "체벌은 고문의 일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네바:김철효)

여러분의 작은 뜻이 인권영화제를 만듭니다.

제6회 인권영화제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아트선재센터와 아트큐브 두 곳에서 열립니다. '인권영화'를 통해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고 때로는 것들을 많이 잃기를 바랍니다. 후원 문의 (02-741-5363)

정부 글리백 약가 논의, 환자는 뒷전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기존 정부고시가 1만7천8백62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가와 환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백 약가를 '정부고시가 었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혈병 환자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백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7일 성명을 내 "환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백 약가를 인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정부고시가를 따를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만성 백혈병 환자들은 한달 약값만으로 월 2백만원, 보험적용대상인 급성기 환자들은 월 60~98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대위는 "정부고시가는 제조원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약값과 타협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이번 심의에서 1캡슐당 2만4천500원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노바티스사에 제조원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근거해 약가를 책정해야 하고, 노바티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약가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글리백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8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제2차 약제전문위원회에 앞서 3시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에서 '글리백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또 이 작품의 연출자인 이마리오 씨는 "제목과 내용을 바꾸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방영 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열린채널'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검열행위'라고 비판했다. '열린채널'은 국민의 제작 참여를 보장하면서 기존 공중파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을 담아낸다는 취지로 방송법 제69조 6항에 의해 지난 해 초 만들어져 지난 해 5월 5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열린채널' 운영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시민단체 쪽 위원 중 한 명인 영상미디어센터 이주영 실장은 "KBS는 단지 '열린채널'의 송출권만 있는 것인데, 운영협의회가 KBS시청자위원회 산하에 있는 데다 KBS 쪽 인사가 위원 9명 중 3명이나 돼 KBS의 입김이 운영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품은 운영협의회 위원 2/3의 찬성으로 방영이 결정된다.

한편,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8일 KBS 시청자위원회에 '편성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9일(목)
제 20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북한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 등 5개 정보기관으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고, 이어 ‘정보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5개월 정도 더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정보기관원들에게 폭언·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알려져 왔다.

91년 북한을 탈출해 95년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씨는 입국 즉시 대성공사로 이송되어 갖은 수모와 협박, 구타를 당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불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이는 정보기관원들이 간첩이나 범죄자의 기를 죽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0년 10월 패소했고, 이어 제기한 항소도 지난달 11일 기각됐다. 이유는 모두 ‘증거부족’. 그러나 이씨는 29일 또 다시 법원을 찾았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씨는 자신이 제시했던 증거가 정보기관원들의 가혹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너 있을 때 이씨가 대성공사에 있을 때) 내가 자주 욕도 하고 험악한 소리도 많이 했잖아.” “선생님(정보기관

원)들이 두드려 팬다고 주먹 쥐고 달려드는 놈도 있고,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나, 없나?”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4개월 쯤 지나 대성공사 시절 담당부장이었던 김석중 씨와 통화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김씨는 ‘자신이 이씨에게 폭언을 했고 정보기관원들이 북한이주자들을 두드려 팬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녹취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됐었다.

또한 이씨는 97년 2월 국가정보원 청사로 불려 들어가 서진화로부터 가슴, 뺨 등을 구타당한 사실이 있다.

앞서 이씨가 한국일보 등에 ‘북한이주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리가 문제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트집을 잡은 것. 이와 관련 당시 이씨를 담당했던 이명재 형사가 이때의 구타사실을 시인하는 녹취내용도 증거자료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김용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녹취록의) 기재내용 중 김석중의 진술부분은 그 진성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명재의 진술부분...만으로는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형사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말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받아들이지 못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그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열려

“감옥에 갇혀 있는 1천6백여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이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8일 낮 서울 대학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열렸다. 30여 개 사회단체가 소속된 ‘연대회의’와 전국학생회협의회(아래 전학협), 21세기진보학생연합, 사회당 학생위원회 등 학생운동 단위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캠페인에서는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 (→ 뒷면에 법 골자 소개 참조)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6월중으로 국회에 관련입법을 청원할 계획이며, 5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져 왔던 ‘병역거부권 실현운동’이 대학사회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전학협 등 학생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인의 목소리를 모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들은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8일부터 시작된 거리캠페인 외에도 5월 한달 간 대체복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오는 22일엔 ‘국방부 인간띠 잇기 행사’, 24일엔 자전거 대행진과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창조)

“민주화운동 왜곡 말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5·3 동의대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8일 오전 44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와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 계승연대는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제의 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는 지난 달 27일, 89년의 동의대 사건 및 전교조결성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경찰과 교원단체에서 각각 크게 반발했고, 몇몇 언론들은 ‘경찰살상 사건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전교조 아닌 나머지는 반민주행위자냐’며 이들 반발에 동조하는 기사를 썼다.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도서관에서 사학 비리 척결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됐던 경찰들 가운데 7명이 원인 모를 폭발사고에 사망했다는 것. 당시 정부와 언론은 학생들에게 경찰사망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려 했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 중 46명이 징역2년부터 무기징역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1천4백65명의 교사가 해직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승연대의 오종렬 상임대표는 “동의대 학생들을 살인범, 전교조를 불순한 의도를 지닌 교단 분열 세력으로 여론몰이 하던 13년전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동의대사건 관련 부산 범시민대책위 대표 이정희 씨는 “당시 관련 학생들과 사망한 경찰들은 모두 군사 독재정권의 희생자인데, 보수 언론들은 이들이 서로 적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어 경찰청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당시 전경들은 무모한 진압작전 때문에 희생된 것이며, 이는 민주화운

동을 탄압하고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됐다”며 오히려 경찰은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기까지 했던 윤창호 씨는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도 전경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찰들은 폭발사고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당시 화재감식 전문가의 확인감정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농성 중이던 학생들과 경찰 간의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있던 상황에서 전경들은 매트리스, 소화약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서관에 투입돼, 무모한 진압작전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다.

집회 이후, 권오현 회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은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일부에서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한편 이팔호 경찰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의대사건 연루자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칭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정부 공식기관인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니 만큼 경찰이나 관련 기관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연대회의에서 준비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한다.

-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 등을 포괄하도록 한다.

- 대체복무 신청기간은 징병검사 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로 두며, 이미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집이 필요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 (문의 : 02-719-9086 평화인권연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후원하실 분 (구좌 : 조흥은행 355-04-495957, 예금주 최정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10일(금)
제 20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테러 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도 모호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청 경비국 경비2계장은 시위대가 △사재폭탄을 준비한다거나 △화염방사기로 건물을 방화한다거나 △도검으로 살상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적인 시위를 넘어서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불법시위의 진압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분사기와 최루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비2계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의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며, "고무탄은 인가된 진압체포장비"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고무탄을 쓸 수 있는 다목적발사기가 대테러장비로 분류되어 있다. 대테러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등 경찰특공대의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특수장비로, 불법시위에 대해 일선경찰이 사용하는 진압장비와 엄격히 구별된다.

결국 '테러상황'에서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현장'에서까지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경비2계장은 "한국에서

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과격해 지더라도 화염병과 투석 시위 혹은 쇠파이프 시위"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고무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무탄 사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과격시위와 테러상황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은 지난 3월 북파 공작원 출신 2백여 명이 벌인 격렬 시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당시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한 채 화염방사기가 설치된 LPG가스에 불을 붙이며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한 연사는 식칼로 자신의 가슴과 왼팔을 그어 자해하기도 했다. 화염방사기와 도검(식칼)이 등장한 이날 집회는 경찰 쪽에서 우려하는 테러상황과 흡사했다.

그런데 당시 정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 북파공작 특수임무동지회 노세현 씨는 "진짜 테러를 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겠냐"며, "우리들의 요구를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 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이 과격시위를 뿌리뽑겠다고 고무탄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고무탄 사용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민중연대 주재준 조직국장은 "집회가 과격해지는 문제는 고무탄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의 '고무탄 사용' 이야기에 대해 "일부 시위에서 벌어졌던 돌발적인 상(⇒ 2면으로 이어짐)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약한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균 56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렇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교사 1명이 30명의 아이를 돌보는 등 아이들이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정부가 유아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니 부모의 보육비 부담만 커져간 다. 이기숙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

가 전국의 학부모 2천1백5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22만원에서 33만원의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3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41.2%나 됐다. 결국 아이들은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육을 받게 되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보육비 부담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곤 한다. 실제 관악구의 한 구립 보육시설에서 작년 한해동안 근무했던 김모(27살, 여)씨는 "근무 기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2만여개나 되는 보육시설 중 6.7%인 국공립시설만 1년에 한번 예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공대위 발족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12일째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2일째 접어들어 9일, '(가)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기여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은 공대위 결성 선언문을 통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8일부터 이주노동자 두 명이 추가로 농성에 참여하면서, 농성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4명으로 늘었다. 비두 씨는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는 노동자지만 노동3권이 없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권이 없다"며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버즈라 씨는 "95년 1월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었고 이후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시키겠다고 해 시작된 이번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운동의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공대위 계획과 관련,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지부장은 단속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출입국관리소 앞 선전전 △긴급토론회 △이주노동자 10만인 서명운동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을 뿐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문제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지난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여성부와 공동으로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데다 보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률이 28%에 머무르는 등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 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 확충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도입 △국가부담률 50% 증액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 1면 '고무탄' 기사에서 이어짐)

황을 발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테러의 우려가 있으면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위협만으로도 통상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상기시키며, "이번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검청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 초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두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다. 2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했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아래 관리규칙)’을 변경했는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탈락자에 대해서는 2회(4년)의 재계약 후 퇴거시킨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89년부터 93년 사이 건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에는 이후에 수급권에서 탈락해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달리 내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관리규칙에 따르면, 수급권 탈락가구는 늦어도 2006년 12월까지의 별 다른 주거 대책이 없어도 영구임대주택을 내놔야 할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가구의 비율은 서울 지역만 볼 때 영구임대주택 전체 입주가구의 47%에 달한다. 서울시 주택국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수급권자들을 원활히 입주시키기 위해서”라고 규칙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견 옳은 방향인 듯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종균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적한다. 2002년 1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노원구 하계9단지 167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급권에서 탈락한 52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57.6

만원으로 산동네나 비닐하우스촌 등 다른 빈곤지역의 소득수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수급권 탈락가구는 수급권자보다는 좀 낫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활형편이 열악해 이들을 퇴거시키는 것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모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급권에서 탈락한 사람

들이 청약 저축에 가입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92년부터 영구임대주택에 살아온 박수만 씨는 “청약저축에 가입한다고 해도 최소 2년, 3백만원을 부어야 추천자격을 얻게되고, 보증금도 비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조치는 이제 가까스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숙자로 만들겠다는 거”라며 답답해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는 평균 보증금 3백만원, 월 임대료 5.4만원, (→2면에서 계속)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세종로에는 “서울은 세계를 환영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테두리로 처리된 만국기에는 영토와 인종을 불문하고 차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길을 옮겨 명동성당으로 가보자. 불법체류 신고를 위해 인간 사슬이 늘어진 문래동에 가보자. 거기에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열혈이 넘겨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새벽부터 하루종일 줄을 서야하는 수천 명의 고달픈 얼굴들이 있다. 불법체류자 26만명, 그들은 이 줄 속에 끼었다가 1년 내에 돌아가든가 다시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

95년 1월 명동성당에는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태리지 마세요’를 외치는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이 있었다. 9일간의 농성을 통해 산재, 체불임금, 폭행, 성폭행, 감금 등 ‘얼굴 뜨거운’ 인권침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국의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 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7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같은 장면을 되풀이해 보고 있다. ‘필요’로 해서 일을 시키면서 ‘합법적인 노동’은 안 된다고 하고, ‘불법체류자’이니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 한국인데도 떠나지 못해 강제출구에 벌벌 떠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6만개의 기계를 내버리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1년 내에 26만 명의 사람을 내버리겠다는 당국의 계획 앞에서 ‘쫓겨라 앉아’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가난한 세계’를 명시하고 있다.

차라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를 흉대한다”, “대한민국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자는 필요치 않다”라고 홍보하라. 그렇게 홍보할 것이 못된다면 정책을 바꿔라. 1년 내 모든 불법체류자를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일 뿐 대안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업주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에는 불법이 있을 수 없다.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같은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올해 인권영화제의 작품선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국내 10편과 해외 25편. 지난주 언급했듯 올해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이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을 말한다’를 마련했다. 팔-이간의 유혈사태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지금, 인권영화제의 시선을 팔레스타인 민중에게서 거둘 수 없다는 뜻이다. 작년 이시포커스에서 상영되었던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 <나지 알 알리> <정착민들>과 더불어 웨스트 뱅크 지역의 5명의 어린이들의 일상을 담은 <뉴스타임>과 예루살렘, 가자, 라말라 등 5개 지역의 팔레스타인 청년감독들이 전하는 <팔레스타인에서 온 5개의 인권소식> 등 두 편을 보태어 상영한다.

재소자들의 인권을 말하는 두 편의 영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잔 세련슨이 나레이션을 맡은 <아티카의 유령들>은 1971년 뉴욕 근교의 아티카 섬에서 일어난 교도소 내 반란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있는 작품이다.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은 당시 록펠러 주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재소자 29명과 교도관 10명이 사망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를 단 9분 동안 점거했지만 군대진압은 4일 동안 계속되었고 1천 6백발의 총탄이 난사되었다. 사건은 30년이 흐른 지난해 비로소 진실의

햇볕을 보기 시작했다. 사건 30주년을 기념해 미국 전역에서 약 12만명이 진상규명 시위에 참여했으며 당시 반란에 참여했던 빅 블랙 등 재소자를 중심으로 법적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영화는 관련자 인터뷰는 물론 미공개 자료 등을 통해 아티카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억울함을 폭로하고 있다.

<처벌의 이유> 역시 재소자의 열악한 인권을 규명하는 영화. 미국을 비롯 호주, 남아공에서는 갈수록 감옥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범죄 예방보다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더욱이 국영감옥은 다국적 기업의 민영감옥으로 탈바꿈하며 재소자들은 현대판 노예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감옥 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작품이다.

동성애자의 인권 또한 이번 영화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비 밀크의 시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록 엠스타인이 나치의 동성애 탄압에 카메라의 앵글을 맞췄다. 1920년 베를린 동성애자들의 예전이였다. 하지만 나치 점령후 형법 175조가 제발 효되면서 베를린에선 참혹한 동성애 청소가 시작된다. 10만 명이 체포되어 감옥과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들

중 살아 나온 사람은 고작 4천명. 작품은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치의 죄악을 심판대에 올려놓는다.

<서던 컴포트>는 성전환자에 대한 가슴 아픈 영상 보고서. 조지아 출신의 로버트는 KKK의 가입 권유를 받을 정도로 남성다운(?) 이. 그는 수년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했다. 물라와 사랑에 빠진 그는 태어나 가장 행복한 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난소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그와 그의 성전환자 친구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감싸고 있는 이 작품은 성전환자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치라고 일깨운다. 동성애 부부의 부모되기를 고찰하는 <대디 앤 파파> 역시 두 작품과 더불어 동성애자들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말한다. [김정아]

(→1면에서 이어짐)

관리비 7만원 수준인데 비해, 92년부터 93년 사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이 1천만원 가량 된다.

이에 영구임대주택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와 같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내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한 수급권자 등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 및 영구임대주택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난 달 4월 26일 발족한 (가칭) 「전국 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서울시의 ‘관리규칙’ 변경 철회 △포괄적인 주거빈곤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법 제정 등의 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이때 공공임대주택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된 모든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의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배분, 관리되도록 하면서 부담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 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일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정씨를 시위대로 생각해 곤봉과 방패로 구타했다. 그 결과 정씨는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금이 가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이 본인과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시위현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 과실을 정씨에게 묻은 것. 또 정씨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법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14일(화)

제 20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소송 제기

장애인 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의 49세를 맞아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해 12월 8일 고 최옥란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년 12월 1일자로 결정, 공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최 씨가 아이의 양육권 및 최저생계비 수급권 문제 등을 비판해 자살을 시도, 지난 3월 26일 사망함에 따라 자동으로 헌법소원의 내용이 소실됐다.

이에 최 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이승연 씨가 14일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게 됐다. 이 씨는 역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67세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3인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78만6천8백27원으로 의료비·교육비 등을 제하면 순수 현금급여액은 69만2천7백22원이다. 이 씨 가족과 같이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가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은 반영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평균 15만7천9백원의 추가 생계비가 더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는

소장에서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권 조항 역시 위반했다"며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다시 개정,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헌법소원 외에도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주영)

선관위, 지문날인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다음달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나름의 현실적 방안을 내놨다.

지난 달 25일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해 주민증이 없어 관공서가 발행하는 어떠한 신분증도 갖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했다. 이는 지난 달 16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가 '투표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해 질의한데 따른 회답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이 시작된 99년 이후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 등 대체신분증마저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의 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에 주민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가 아닌데도 사

실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선관위의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있어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 조치"라고 평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0년 총선 전엔 '아무런 신분증도 없는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한편, 13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란 존재하지 않고 관련 법령도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행자부는 "아무런 다른 신분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현식 씨는 "수시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인 주민등록등본에 현장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붙여 관인 하나 찍는 것이 안 된다는 건 법률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도 "행자부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① 경찰, 제발 좀 변해라!

바야흐로 오늘날은 '큰 이야기'의 시대를 넘어서서 '작은 이야기'의 시대이다. 결국 세상의 변화가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작은 손짓 발짓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생각해 보면 '작은 이야기'는 변화를 갈망하는 시작, 동기가기도하고 변화가 실현된 기쁨을 함께 체험하는 완성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는 언뜻 보면 치사하고 속좁아 보이지만 큰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현실을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위상의 올바른 정립도 간절하지만 실제 인권의 변화를 실감하는 곳은 길거리에서다. 특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치사한 권력 '경찰'의 변화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정립보다 더 절실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내가 사는 곳은 정선군 '고한'이다. 카지노가 생긴 덕분에 부쩍 찾는 사람이 많아진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웬만한 군사 작전 지역을 지나는 것보다 더 삼엄한 검문검색을 거쳐야 한다. 정선군 남면이라는 곳부터 고한까지의 거리는 시간으로 대략 30분, 이 30분 동안 평상시에는 세 곳의 검문소를 거쳐야하고 특히면 다섯 번 쯤의 검문을 받아야한다.

또 고한에서 태백이라는 바로 옆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7~8분의 거리를 두고 두 곳의 검문을 거쳐야한다. 중간에 다른 갈림길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이은 검문의 이유를 물으면 '소속 경찰서가 다르기 때문'이란단다.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 기차역에 내리면 시골역에 내린 정취를 즐길 새도 없이 줄줄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인물검사를 받아야한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며 얼마전 이 곳을 찾았던 수녀님들도 검문을 받았다.

길에서건 역에서건 그런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 중에 소속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나도 한번 검문 사유를 물었다가 같이 차에 탔던 다른 이들과 다 주민등록증을 까 보여야 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항의하고 저항하다가 이제는 체념해서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미리 신분증을 준비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검문의 이유를 물으면 기소중지 어쩌고 얼버무리지만 실제 검문의 이유는 '실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전 지역신문에는 검거 실적이 우수한 파출소의 시상 소식이 크게 실렸다. 특히나 연초에 이 곳 경찰 서장이 바뀌면서 부쩍 더 심해졌다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다.

경찰의 변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안에서 밖에서 경찰의 변화를 노래해 왔던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라는 야유를 받아가며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는 무시를 당하며며 그만큼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좀 변화가 될 만도 하련만 여전히 시민들의 작은 인권에는 관심도 없고,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몽매의 시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경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제발 좀.

(이우갑 : 고한 성당의 주임신부)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호도말고 진실규명에 힘써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0여개 사회단체, "5·3 동맹 사건과 전교조 결성 등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왜곡말라"며 기자회견 및 경찰청 앞 항의집회 가져, 또 동맹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5.8)
- 약속을 넘어 이행으로**
유엔어린이특별총회, 미국 유엔본부에서 개막 (5.8) / 앞으로 10년 간 세계 아동들을 빈곤과 기아, 질병, 전쟁 위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이 담긴 '아동을 위한 세계의 준비' 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막 (5.10)
- 3국행 만이 대안?**
지난해 6월 일가족 6명과 한국 온 탈북자 장길수 군의 다른 친인척 5명, 중국 선양서 일본 총영사관 진입시도, 중국 공안에 붙잡혀 (5.8) / 미국 총영사관에 3명의 탈북자 진입 (5.8-9) 베이징 캐나다대사관에 2명 진입 (5.11)
- 필요한 일손, 불법채력 언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 (5.9) /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발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 및 합법화' 요구 (5.9)
- 창살 대신 자유의 햇살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 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서울 대학로에서 30여개 사회단체 주축로 열려, 병역법의 개정과 대체복무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병행, 5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캠페인 진행하기로 (5.8)
- 집회시위 포획작전 계속**
경찰, '일부 과격시위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5.9) / 그러나 '일반적 시위를 넘어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측 주장의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테러상황 경계도 모호해 최근 계속돼온 집회시위 제한 시도라는 의구심 자아내 (5.9)
- 약값도 비싼데 건강보험법 너마져**
국립암센터 심포지엄, 현행 건강보험법상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처방할 경우 그 병원과 의사는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게돼, 현행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보험재정의 안정만을 고려한 나머지 암치료와 관련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성토 (5.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경찰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이나 인터넷 상의 논쟁글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제망으로 거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씨를 집결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광범한 내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전 씨가 본인의 과거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논쟁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전 씨가 1999년 9월 재판 당시 작성한 최후진술문을 문제삼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99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러한 전 씨의 전과는 사면됐고 집행유예 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다.

또 경찰은 월간 잡지 <열린 주장과 대안>, <다함께>에 실린 글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가 기고한 글은 △병역 비리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업톤 싱클레어 소설 <정글>에 대한 서평이다.

인터넷 '다함께' 성공회대 카페에 올린 △부시방한 반대 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세미나 발제문 △매주 작성한 집회 일정과 집회 참여 권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서의 집회는 공개리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 설치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모두 첨부돼 있었다고 전 씨는 변호사와의 접견 과정에서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최후진술문이나 다른 사람과의 논쟁글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해집고 이를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일정을 공고하는 것까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현재 경찰은 전 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기소 내용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전 씨의 집시법 위반의 증거로 지난 해 2월 24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고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를 재판 과정에서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현재 전 씨는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이주영]

책 읽기 『비전향장기수-0.5평에 관한 한반도』

최정기 지음/ 책세상 펴냄/ 2002년/ 252쪽

비전향장기수들이 겪어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감옥의 실상을 소개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비전향장기수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10명의 출소장기수들과 3명의 교도관들의 진술에 기초해 비전향장기수의 수형 생활을 생생하게 재구성했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감옥 체제를 구체적인 현장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비전향장기수는 최고 복역기간 44년, 평균 복역기간 28년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되고, 절대적인 침묵과 계속되는 전향공작으로 인간으로서의 건지기 힘든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서도 물론이고 정치범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장 최하층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는 흔히 '감옥 속의 감옥'으로 묘사될 만큼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한국의 감옥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옥 바깥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의 역할도 감옥의 변화에 한몫을 했지만, 감옥 안에서의 민주화 운동도 감옥을 바꾸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필자는 주장한다. 그 과정에 참여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와 저항방식이 감옥을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은아]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 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예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송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사임명을 비롯한 준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기에 국내 비준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ICC규정의 국제기준을 위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몽골, 타지키스탄 등 세 나라만 ICC비준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한편, ICC 규정에서 가입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국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홍보단측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C에 먼저 가입한 뒤 이행입법을 만들어 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경우, ICC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행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한 활동을 마친 홍보단은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 민간단체 쪽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던 홍보단은 12일 네팔로 떠났으며, 이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국을 계속 돌아다니며, ICC의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창조]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국제민주연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베트남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박사 논문>을 공모한다. 베트남전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 규명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 마감 - 6월10일
- ◎ khis21@nowmuri.net/팩스(02) 3673 - 5627
- ◎ 담당자 : 김숙경(02 - 3675 - 5810)
- ◎ 대상, 주제,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www.khis.or.kr) 참조

말레이시아, 테러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하티르 수상이 '반테러 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구속된 안와르 전 부수상을 포함한 정치적 수인들의 석방 없이는 미-말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기 위해" 이번 말레이시아 수상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CNN에 따르면 9.11사태 이후 말레이시아군과 미군은 국제테러조직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펼치고 있으며, 테러자금이동에 관해서도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62명이 알 카에다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슬람 군사그룹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감된 상태이다.

이번 방문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엔드체릭 아시아담당 워싱턴국장은 성명서에서 "마하티르 수상은 사회안전법에 의한 정치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테러전쟁을 악용하고 있다. 부시정권은 이러한 기회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안전법 철폐 등 말레이시아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마하티르 수상이 사법부 독립, 정치적 구속 중단, 고문 중단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서도 미 부시 대통령은 인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말레이시아 판 국가보안법인 사회안전법은 현재 장기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현재 105명이 넘게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 반대자, 종교적 소수자, 학생운동가이다.

사회안전법은 "국가안전에 위협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60일 동안 독방에 감금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 초 마하티르 수상은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수장과 함께 개인의 인권 이전에 국가의 안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아시아적 특수 상황을 강조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해,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국제인권단체 및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아시아적 가치'는 현재까지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이다. [제네바 : 김철효]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16일(목)

제 20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검찰총장 앞으로 '이적규정' 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보내, 그 답변이 주목된다.

지난 13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김 의장은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97년 이적단체 판결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강령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모든 활동을 철저히 합법적,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총련을 더 이상 이적단체로 규정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의 입장은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김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주장은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므로,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논리는 6기 이후의 한총련에

대해서도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이후 검찰과 법원은 관행처럼 이적규정을 계속 적용해 왔다.

그러나 97년 당시 이적규정의 주요 근거였던 ‘폭력적 운동방식’은 이미 현실적 근거될 수 없는 상황이며, 공안 당국이 불고늘어져 왔던 ‘연방제 강령’마저 수정된 점에 비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더 이상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월 들어 한총련 의장과 한총련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10기 한

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규정에 근거한 대대적 검거선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 얼마전 교육실습 중이던 7기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하는 등, 전격적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검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의장은 “10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총련 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철회, 구속 대의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총련은 오는 18일까지 검찰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검찰의 판단대로 한총련 이적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해제될 수 있는가?” 김 의장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 검찰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이창조)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시민사회,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적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추선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화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위의 김영소 수석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 입법의 취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와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계수 교수(울산대)는 시민사회는 운동의 동력을 테러방지법안의 완전 지지 이후에도 정보기관 개혁 내지 해체 운동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체제 개편 및 확장을 시도한 셈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과잉시키는 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정원의 예산내역이나 활동은 비공개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여러분의 작은 뜻이 인권영화제를 만듭니다.

제6회 인권영화제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아트선재센터와 아트큐브 두 곳에서 열립니다. '인권영화'를 통해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많이 잃길 바랍니다. ©후원문의(02-741-5363)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을 시간에 중학생인 성현이는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성현이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와 준비물을 종종 챙겨 가지 못해 속상한 것 빼고는 다른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보습학원 한번 다닌 적이 없는 성현이는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아직 언니나 할머니에게 말해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기도 빠듯한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술학원은 가슴속에 품어둔 실현 불가능한 꿈인 것이다. 부모가 죽거나 양육을 포기해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소년소녀가정은 매년 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이란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자 최근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이란 용어로 순화시켰다. 그러나 명칭이 가정에서 가정으로 변했을 뿐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비 보장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은 약 1만3천3백9십명에 이른다. 이 중 2천명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집에 가정위탁돼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월 6만5천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액이 전부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월계2동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업무를 맡고있는 권대성씨는 “장애, 질병, 빈곤 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가정이 많아 11명의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기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최근 사회복지 담당자가 증원되고 있는 추세지만 권씨가 담당하는 주민만 2백명이나 되고 많은 경우 직원 1인당 3백~4백명의 주민을 관리해야 하는 곳도 있다. 권씨는 “생활보장비 지급과 결식아동에 대한 저녁식사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며 “별도의 지원사업은 지역복지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허성희씨도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무료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공부방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낮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소년소녀가정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지역적 특징이라고 한다. 허씨는 “부모가 없어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끌어줄 보호자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큰 의지가 된다”고 말한다. 복지관에서는 정서적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연결해 방문학습지도 등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은 아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정도우미제도도 집안에 중환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어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일상적인 정서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고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김보영)

학생연합, 스승의 날 쏠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은 오후 3시 명동 한복관에서 지난 3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연합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상진(남, 고2)군은 “스승의 날은 교육자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방법을 되돌아보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올바른 것인지 교육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고 스승의 날에 캠페인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는 교원중증풍토라는 미명 하에 체벌이 허용되고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보충수업이 부활되는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대책은 별로 없다.

학생연합은 캠페인에서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한 폭력행위이며 지금까지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교원을 위해 학생에 대한 폭력을 합법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체벌은 반성의 기회보다는 적개심과 증오만을 불러 폭력을 가르칠 뿐”이라며 “체벌 이외의 다른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1차 권고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체벌을 교육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학생에 대한 고질적인 폭력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연합은 또 보충수업 등 강제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안정과 휴식을 취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유독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며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연간수업 시수는 OECD 가입국가의 평균 시수 935시간보다 훨씬 많은 1천2백54시간으로 세계 최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에 실시한 ‘수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라도 아침 7시 30분 이전에 강제로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54%이며 정규수업시간 이외에도 저녁 9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는 80%에 이른다. 하루 중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편 캠페인에 참여한 김OO(여, 고3)양은 “말로 타이르는 선생님도 많은데 잘못을 했다고 책을 던지거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의자를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생연합은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캠페인을 열어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비교육성과 반인권성을 알리고 체벌과 보충수업 등 강제야간자율학습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영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시민, 경찰 부당함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경찰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 시민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봉변을 당했다.

서대문구에 사는 김선주 씨는 지난 달 29일 아침 순찰차가 집 앞에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 대 거의 강제연행되다시피 파출소에 가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불과 그 몇 시간 전에 김 씨가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다. 더구나 김 씨는 이 일로 인해, 깔끔히 해결됐던 문제를 또투리 잡혀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것도 며칠 전 새로 알게 됐다.

청문감사실 민원 제기 화근

김 씨가 말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29일 새벽 김 씨는 술을 마시고 가던 중 소변이 급해 독서실 등이 있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독서실 관계자로부터 도둑으로 오인을 받았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김 씨를 믿지 못하고 연희파출소의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상대방이 김 씨의 벽살을 잡고 우격다짐을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김 씨가 항의를 하자 김도 경사는 웃기만 하고 그와 함께 온 다른 경찰은 목을 하며 '술 먹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 놓고 왜 말이 많냐'는 등 김 씨의 말을 묵살했다.

결국 김 씨는 도둑이란 오해를 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새벽 5시 40분께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김 경사 등으로 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청문

감사실은 시민이 경찰의 비리, 불친절,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신고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경찰 내부의 정화기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김 경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가 어디다 전화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윽고 아침 8시경, 김 경사 등이 김 씨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 와, '어디다 전화질이냐. 당신이 술 취해서 한 실수라고 해라'라며 파출소로 가자고 종용했다. 김 씨가 가지 않으려 하자, 김 경사 등은 사이렌을 울리고 대문을 차고 마이크로 김 씨의 이름을 불렀다.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가족들 보기 민망해 김 씨는 결국 경찰을 따라나섰다.

김 경사와 함께 온 다른 경찰은 차안에서도 계속 김 씨에게 겁을 줬고, 파출소에 도착하자 수갑을 채우려고도 했다. 김 씨가 '내가 현행범이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독서실 사람을 불러와서 너를 고발하게 하겠다'고 했다.

'술 취해서 한 실수라고 해라'

김 씨는 서대문경찰서로 옮겨진 후, 독서실 사람이 한참 형사랑 얘기하다가 가는 걸 멀리서 볼 수 있었다. 낮 12시 반쯤 형사계에서 김 씨에게 '괜히 청문감사실에 신고하면 경찰이 징계 받거나 감봉처분 받으니, 좋게 처리하자'며 '내용은 읽어 볼 거 없이 지장만 찍으라'고 해 김 씨는 지친 나머지 거기에 응했다. 그리고 이후 김 씨의 부인이 김 씨를 대신해 '모두 본인의 경솔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것을 사과한다'는 요지의 글을 쓴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동안 김 씨 부부

는 의아해하는 동네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을 해야만 했고, 김 씨는 "부당하단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며 14일 인권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털어냈다.

한편, 이에 대해 15일 김 경사는 "29일 새벽에 사과를 하라고 김 씨가 전화를 했다길래, 불쾌한 생각에 김 씨 가족들 있는데서 이야기하려고 아침에 그 집에 간 거다. 집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긴 했지만, 김 씨가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안 나와서 그랬다"며 잘못된 것이 없다는 듯 말했다. 이어 김 경사는 "독서실 사람에게 전화해 김 씨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불쾌해 해 경찰서로 나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15일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박호순 경위는 "형사계에서 김 씨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감찰에 조서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형사계에서 당시 내용도 보지 못한 채 지장을 찍은 게 '주거침입죄'에 관한 조서였던 것이다. 김 씨는 이 사실을 15일 본지 기자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박 경위는 "김 씨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 경사의 경위서를 아직 못 받았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청문감사실에 경찰의 부당행위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김 씨는 "주거침입죄" 고발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다.

서울시경 청문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단지 불친절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청문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단순한 업무상의 불친절을 뛰어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약자의 위치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02년 5월 17일(금)

제 20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16일 아침 11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출구를 나가자 서울의 어느 거리와는 달리 외국인들이 확연히 많다 싶더니 곧 길고 긴 줄을 만날 수 있었다. 자진신고를 위해 나온 이른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자진신고를 위해 나온 이주노동자들은 새벽 일찍 나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뿐더러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줄이 흐트러지면 경찰로부터 질책을 들곤 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터다. 중간중간 전경이 서서 줄을 똑바로 서라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학교 시절 권위주의적이었던 '애국조회'를 떠올리게 했다. 그래도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전경도 간혹 눈에 띄었다.

11시가 좀 넘은 시각, 문래동 자진신고 접수처 정문 앞에선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속한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위'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앞에 나온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평등한 대접을 받길 원하듯, 우리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줄 서 있는 걸 보니, 한국에 사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집회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진신고 철회 △단속 추방 중단 △노동비자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자진신고 접수처의 길 건너편엔 자진신고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각자 갈 길을 가지 않고 서 있었다. 집회를 구경하는 듯 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년 내에 나갈 순 없어요"

"감동적이에요." 식당일을 한다는 한 중국동포 여성은 집회에 대한 느낌부터 서슴없이 말했다. 그는 이날 자진신고를 위해 새벽 4시에 나왔다. 자진신고를 하는데 약 7시간이 걸린 셈인데 그는 그래도 자신은 하루만에 모

든 게 끝나 운이 좋은 거라며 "줄 서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1년 내에 집에 갈 순 없는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벌금 내야 하니까 신고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길래, 그럼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그는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안 가고 싶다"고 한다. 우리말을 잘하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답답하다는 그는 건너편의 집회에서 좀체 눈을 떼지 못했다.

"1년 뒤에 다시 비자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녜요?"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이란 출신의 이주노동자는 자진신고 후 1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한국 사람도 좋고, 일도 좋아요. 계속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이 좋았다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사실 유독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노동에 대해 시시콜콜 궁금해하는 것 역시 그들에 대한 차별일 수 있을 테다.

"1년 후 26만 이주노동자를 내보내

면,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했던 한국의 산업 부문도 휘청할 거예요. 한국사회 스스로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자신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가족 공장에서 일하는 또다른 필리핀 여성노동자는 "못 받은 임금이 많다"며 "그 만큼 더 오래 이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 보인다.

"외국인은 한국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에 계속 귀를 막고 있는 한 관련 제도나 상황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 의견에 귀 열어야

한편,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위'는 올 19일 2시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일제등록철폐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집회 때 보여줬던 것처럼 '집회에 참가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모두 단속·추방시키겠다'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발상이 또 되풀이될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에바다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17일 오후 3시경 평택시청으로 향하던 택시 운전기사가 그곳에서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었다. 경기 도 평택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아래 에바다). 올해로 6년, 오는 19일 2천일째를 맞는 소위 ‘에바다 사태’는 평택시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듯 보였다.

에바다 사태의 시작은 9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몇몇 농아원생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농성을 시작하면서, 에바다 복지회의 비리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강제노역, 의문의 죽음들, 국고 및 후원금 횡령, 친인척에 의한 족벌경영, 관청과의 유착 등등... 이에 평택지역의 사회단체들은 물론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인권·장애인단체들이 에바다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에바다 권오일 교사는 “에바다 투쟁 2천일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2천일이 되는 동안 뒤흔나고 물을 때 부끄럽기도 하다”면서 에바다 사태의 장기화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권 교사는 “하지만 이는 에바다 비리의 사슬이 얼마나 질기게 얽히고 설킨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며, “2만일이 지나도 그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비리주범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원래 ‘에바다’는 ‘열리다’는 뜻인데,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옛 비리재

단 쪽에서 에바다를 불법점거한 채 민주적 인사와 교사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풍자했다. 성경 마가복음 7 장에는 예수가 귀 먹은 자를 향해 “에바다” 하자 그의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끝으로 최근 에바다 이사가 된 한신

대 사회복지학과 남구현 교수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평택시청과 평택경찰서는 이런 비리세력을 비호하면서 합법적인 에바다 이사들의 시설 진입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사회를 옛 비리세력 측과 동수로 구성할 것만 영무세처럼 되뇌이고 있다”며, “에바다 폭력사태 배후 세력을 구속·처벌하고 폭력사태 비호하는 평택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에바다 이사회는 민주인사들이 옛 비리재단 쪽 인사들과 비교해 7:4로 압도적 (⇒ 2면으로 이어짐)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서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신분증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진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신분증에 관한 총괄책을 지고 있는 행자부는 여전히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한 위치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듯,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대체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2002년 5월 18일(토)

제 20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④

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

이번 인권영화제에서는 그동안 ‘울림’에서 소개되었던 〈겨울에서 겨울로〉, 〈철로 위의 사람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비롯해 10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한다.

빛 해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먼지의 집〉으로 탄광촌 사람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인 이미영 씨가 최근 완성한 〈먼지, 사복을 묻다〉를 상영한다. 1980년 정치적 격변기, 사복역시 술렁댄다. 막장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복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대규모파업에 돌입한다. 전작을 만들 때부터 사복에서 장기 체류하며 그곳 사람들과 거리를 좁혀온 감독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복파업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일기 형식의 내레이션을 덧붙여 작품에 대한 사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묵묵히 동참했던 서 로베르토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한사람〉 역시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을 만든 김동원 감독은 “독특한 개성과 타고난 유머, 반골 기질 때문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서신부님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많이 흔들리기도 한 ‘미운 오리새끼’와 같은 존재”라고 회상한다. 작품은 서신부를 연대기 순으로 돌아보면서 그

(⇒ 1면 ‘에바다’ 기사에서 이어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평택시청 앞 천막농성 등 치열한 투쟁 끝에 에바다 이사회에 민주인사 4명이 선임이사로 선임된 결과다. 하지만 옛 비리재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해 12월부터 청각장애 학생들을 동원해 에바다를 불법 점거해 왔다.

결의대회 후 집회참석자들은 평택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에바다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후 저녁 7시에는 평택역 앞에서 「에바다 농성 2000일 맞이 문화제 ‘에바다, 장애인시설비리 척결의 희망이 되자’」가 열려, 에바다 투쟁의 의지를 한껏 고조시켰다. (범용)

의 사상과 실천 그리고 알콜 중독이라는 인간적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찬찬히 그려낸다.

작년말 다양한 영화제를 통해 인기를 누려온 〈백큐멘터리-박동진리교〉도 국내상영작 목록을 차지한다. 작품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기회로 그에 대한 열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측을 심하게 비틀고 꼬집는 영화다. 재기 발랄함으로 보는 이를 폭소로 몰아넣었던 이 작품은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칭송에 가볍게 일격을 가한다.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비용을 감염인들에게 사후 지급해왔다.

방역과 관계자는 “원래 보험급여 항목에 국한해 전염병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며 “이제까지는 예외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에이즈 감염인들의 검사비용도 지원했으나 환자 수가 급증해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다른 전염병 환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원래 규정대로 하게 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에이즈 감염인 모임 Love4one의 박광서 씨는 “검사비용을 사후지급 받을 때도 환자들이 경제활동에 제약 받는 상태에서 미리 돈을 내야 하는 데다 비용을 제때 환급받지 못해 힘들었다”며, “그런데 그나마 있던 지원마저 중단돼 앞으로 검사를 못 받고 치료까지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씨는 이미 검사를 포기한 환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안 사람들의 바다 사랑을 말하는 작품 〈어부로 살고 싶다〉는 새만금 간척 반대 투쟁을 아름다운 영상과 대치시켜 보여준다. 엄청난 돈으로 갯벌을 쓸어버리려는 행정관료들과 맞서 부안의 옛모습 그대로를 지키려는 이곳 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은 말뚝 망둥이, 따개비, 개맛, 검은띠 불가사리 등 갯벌의 소중한 생명체들의 가치와 함께 이 작품의 주요 동력이 된다.

미군의 폭격소리가 고막을 찢는 매향리를 상기시키는 작품 〈매향리로 돌아가는 먼 길〉과 갈수록 혐소해지는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단편 〈가로막힌 자유, 집회〉 역시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 (김정아)

에이즈 감염인들이 각테일 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 등을 살펴보는 검사가 필수적이나, 이 비용은 1회 20~30만원 선으로 꽤 높은 편이다.

이에 Love4one, 보건의료단체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은 17일 서명을 내 “정부가 검사 비용 등의 사후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감염인들이 이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감염인들이 자비 부담하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7일 방역과 관계자는 “면역기능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립보건원 면역협회 연구실에서 감염인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곧 각 시도에 공문 시행할 거”라고 밝혔다. 지원 중단 이후 검사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방역과 관계자는 “감염인들의 면역기능 검사료의 보험적용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에이즈 진료비 지원예산을 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별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들은 또 그 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은 또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제도까지도 적용의 배제 혹은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동안 형성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는 것은

공소시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효배제법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현재 사회단체가 낼 수 있는 법안 중 최대치”라고 시효배제법을 평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고 ‘수지깁’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기대를 표했다.

입법청원 소식을 접한 고 ‘수지깁’ 유족 김옥림 씨는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일은 우리 가족에서 끝내야 한다”며, “국가 스스로도 죄를 지었으면 엄정하게 처벌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실 신상대 보좌관은 “현재 20명 남짓한 의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용)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제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19일 오후 3시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렸다. 현재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올 25일로 기간이 마감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신신고’ 철회 및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며 3주 넘게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집회에는 아시아 각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주여성인권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 2백7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쟁취를 위한 공동대위’의 이금연 공동대표는 “초국적 자본은 국경 없이 전세계를 넘나들며 노동력을 착취한다. 본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건 월 5-10만원의 저임금과 실업, 전쟁”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단지 명동성당 농성단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세계적 노동력 착취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차례 집회가 무산되는 경험을 한 뒤라 더욱 가슴에 묻힌 얘기가 많은 듯 했다. 애초 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는 지난 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집회에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단속하겠다고 해 열리지 못했다. 네팔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는 집회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과연 인간인가 생각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우리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 지하드 씨는 “월드컵이라고 외국인들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더러 나가라 한다”며 꼬집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더이상 불법으로 살고 싶지도, 도망가고 싶지도 않다”며 “스스로 인권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집회 후 명동일대를 행진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주방 중단 △노동비자 발급 △노동3권 보장 등의 요구를 알렸다. (이주영)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칫상을 뒤엎는 꼴’이라거나 ‘한국은 파업 때문에 골치라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심어 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늘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과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반사회적인 행위자로 낙인찍는다.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매도하는 기사 속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찾기는 힘들다.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다루는 기사를 찾기도 힘들다.

2001년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 당시에 언론은 ‘이 가뭄에 웬 파업인가’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도대체 파업과 가뭄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 한국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개 언론사는 ‘붉은 머리띠를 풀어라’(중앙일보 2001. 6. 14.), ‘항공·병원노조 잇단 파업, 온 나라가 흔들린다’(조선일보 2001. 6. 14.), ‘정부 불법파업 손 뺐나’(동아일보 2001. 6. 14.) 등을 1면 톱기사의 제목으로 뽑고 있다.

‘붉은 머리띠’는 노동자의 파업에 색깔공세를 퍼는 것이고 동아일보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요구하는 제목을 뽑고 있다. 방송도 파업이 시작된 6월 12일 KBS 9시 뉴스는 ‘경제부터 살려야’라는 제목으로 파업의 시기를 문제삼았고, MBC 역시 같은 날 뉴스데스크에서 “땀은 마르고 하늘은 막히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였다.

이처럼 언론의 눈에 비친 파업은 사회악이고 척결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노동자의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사회적 공기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언론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주장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한다면서 범정부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어용노조들을 앞장 세워 분위기를 띄우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도 월드컵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 선진국으로 정말 발돋움하고 싶은가. 그러면 이렇게 해라. 월드컵에 항공사와 호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파업은 기본권이므로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 5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로서는 차라리 파업이라도 해야 월드컵 경기 중계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관용을 가지라”고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언론과 국민들을 설득 해라.

(권두섭 씨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변호사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1. 비정규직, 그 벗어날 수 없는 선문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비정규직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517일간의 파업 종결...이들간 조합원 총회를 통해 △희망자에게 올 상반기 중 도급업체 취업 알선 △위로금 지급 등 회사가 파업 초기 내놓은 안에 합의(5.13)/ 비정규직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사 508인 선언...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5.18)

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1'
백악관, <뉴욕타임스>와 <시비에스방송>이 보도한 ‘백악관이 지난해 9·11 테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가장 일반적 형태의 보고”였다고 해명(5.16)/ 미 <시비에스방송> 앵커 낸 래더, “9·11 이후 미국 언론에는 정치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과잉 애국주의가 팽배”했고 “이런 분위기는 핵심 질문을 자제하는 일종의 자제검열 형태로 나타났다” 양심고백(5.16)

3.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의지인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스승의날 맞아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반대 캠페인(5.15)/ 교육부, 전국국어교사 모임이 집필한 <우리말 우리글> 대안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허 방침 발표...전국역사교사모임 집필한 <살아있는 한국사 1·2>도 부교재 활용못해(5.19)

4. 또 확보, 최종길 교수 타살 증거
의문사위,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단장으로부터 ‘최 교수가 타살됐다는 판단을 했지만, 당시 중정 분위기가 자살로 몰아가 사인에 대한 추가조사 등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 받아냈다고 발표(5.14)

5. 기약
10기 한총련, 검찰총장 앞으로 ‘이적규정’에 대한 공개질의(5.13)/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현행 최저생계비는 위험이라며 소송 제기(5.14)/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에도 강력 투쟁 불사’ 기자회견(5.1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조치 철회 성명(5.17)

◎ 중요판결 및 통계
통계청 ‘4월 고용동향’, 정규직 비중 줄고 일용직 늘어...장기실업자 수 1만6천명 정도로 전달보다 3천명 늘어(5.16)/ 통계청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여원으로 하위 20%의 1백4만여백원에 비해 5.4배, 지난해 4분기 5.18배보다 높아져 분배구조 악화/ 대법원, ‘검찰의 감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 근거로 한 유죄 판결 파기(5.1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22일(수)

제 20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월드컵을 열흘 앞둔 21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전재환) 소속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들이 함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노조원 1백 5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 및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구속 △정리해고 중단 및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 투쟁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캐리어사내하청지회(투쟁 4백60일), 회사의 일방적 폐업에 맞서 공장제가동을 주장하는 일진아산지회(3백37일),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동부지회 양현기공분회(2백52일), 최근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문제로 싸우고 있는 대우조선노조(48일)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1천9백84일째 고용승계투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제철고용특위(삼미특수강), 전날 한강대교 고공시위를 벌였던 시그네틱스지회(3백4일) 노조원들이 눈에 띄어 관심을 끌었다. 전재환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말하고 있는 평화월드컵, 안전월드컵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추고 기만적으로 진행되는 산재월드컵, 폭력월드컵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을 추진해온 정부가 월드컵 전에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월드컵 노사평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그네틱스지

회 김명화 노조원이 전날 한강대교 고공시위 현장을 상기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영영 올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시그네틱스지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불을 보듯 뻔한 안산공장 이전을 거부하며 영풍그룹을 상대로 파주공장에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폐쇄된 서울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다.

결의대회 이후 금속노조 정기영 부위원장 등 대표단 8명은 노동부를 방

문해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상경노숙 투쟁단’은 25일까지 각 사업장의 본사 또는 서울지사를 순회하면서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26일에는 민주노총 집회에 결합한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실 이성희 사무관은 이들 투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문제”라고 답변하며, “금속연맹과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약하다”고 “우리가 (몇몇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에 대해) 구속이 옳다고 생각해도 검찰과의 문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범용)

책 읽기

「양심적 병역거부」

한인섭, 장복희 등/ 사람생각 펴냄/ 2002년/ 394쪽

한반도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이 보고된 것은 1939년이다. 그 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간의 무관심을 깨고 2001년에는 무려 100회가 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누적 인원 1만 명에 이르는 여호와증인의 감옥행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슈를 사회 지면으로 공론화 하기에 충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즈음 지난 2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체계 속에서 살펴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들은 물론 국내외의 폭넓은 자료들이 모여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구급에서 재판, 감옥생활, 출소 후까지를 상세히 기록한 홍영일 씨의 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피해 사례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최은아)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한인섭) / 국제법, 유엔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장복희) /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김재형)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김병렬)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2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 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

인권으로 그리는 세상 인권운동가 단 존스 그림 전시회 열려

영국의 인권운동가 단 존스(Dan Jones, 61)씨의 그림 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열린다.

존스 씨는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에서 캠페인과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운동가이며, 화가와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존스 씨는 앰네스티 활동 이전에는 수십년 동안 노동운동가와 지역운동가로서 활동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동화, 시, 놀이책과 인권교육교재 등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또한 그는 런던 동부의 고용 및 노동 문제를 다루는 많은 팸플렛을 제작했다. 런던동부 섬유산업의 노동조건, 지역의 인권 역사 및 이민의 역사, 무단결석 및 비행청소년 문제, 런던과 파리의 인종차별 등 그가 다루었던 분야는 광범위하다.

존스 씨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인권운동가이다. 멀리는 70년대에 김대중, 김지하, 서승 등 당시 대표적 양심수들을 지원했고, 가깝게는 90년대에 화가 홍성담 씨나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석방 운동을 벌였다. 또 홍성담 씨의 영국 전시회를 기획하고 심사시킨 장본인이며, 한국 인권운동가들의 인권교육 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87년 6월 항쟁을 직접 목격했고, 광주 5·18 망월동 묘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존스 씨는 노동운동과 인권 캠페인을 위해 수많은 포스터와 조형물을 제작해 왔으며, 미국, 아시아, 유럽과 중동 지역 등을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화폭에 담았다. 그의 그림은 영국의 맑스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조합 본부와 지역주민 센터에 걸려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노동운동과 아동을 주제로 한 그의 그림 50여 점이 전시된다.

존스 씨의 집에 묵으며 그의 그림을 보았던 화가 홍성담 씨는 “나는 그 즈음에 ‘예술’이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림을 보고 나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존스 씨의 이번 전시회는 존스 씨와 오랜 우정을 나눈 인권운동사랑방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전시회는 제6회 인권영화제의 부대행사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의 아트큐브에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해화 전철역 전시관에서 열린다. 또한 전시회를 위해 방한하는 존스씨는 25일 ‘인권교육 워크숍’과 30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그림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류은숙)

※전시회 및 프로그램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인/권/교/육/워/크/샵

▷ 때 : 5월 25일(토) 오후 3시

▷ 곳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주제 :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활동의 경험과 교훈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지난 19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이른바 ‘검은 오월’이라 불리는 태국 민주화투쟁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학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회진보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민중들이 피를 흘린 지 10년이 지났으나 정부는 여전히 민중의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태국의 영자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태국의 인권상황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군당국 책임자는 여전히 법정에 보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국의 광주항쟁, 92년 ‘검은 오월’

태국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92년 ‘검은 오월’ 사건은 흡사 80년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9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수친다 장군이 ‘국가 안전유지 이사회’를 통해 이듬해 3월 수상으로 취임한 후, 5월 민중들은 방콕에서 열린 수십만 군중집회로 저항하였다. 이에 대한 군사정권의 대응은 직격탄 발포와 학살이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52명이 학살당했으며, 34명이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라고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직후 태국왕실의 조정으로 정권은 민간으로 이양되었으며,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그 보고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시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가족들은 책임자 불처벌을 이유로 보상금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해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에서도 실종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태국정부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다.

태국 보수화, 국제사회 우려

한편 억만장자 기업인인 현 탁신 태국수상의 보수화 경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BBC는 ‘현 정권이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등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민주화의 성과들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지난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부 유럽국가들이 태국이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을 중단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일부 비정부단체들은 국경지역 버마 피난민에 대한 발포와 습격에 대해 비난하였다. (제네바 : 김철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23일(목)

제 20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또 장애인 추락사망, 박경석 교장은 경찰서로 연행

“저 지금 버스에 탄 채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어요.” 22일 낮 2시 20분께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휴대폰 전화를 통해 말했다. 이날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제14차 ‘장애인도 버스를 타시다’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예초 1백 여명의 참석자들은 아차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답십리에 내려, 이를 전 또 한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일과 관련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19일 저녁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지체장애인 윤모 씨는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20일 새벽 2시 20분 사망했다.

민중복지연대의 이승현 씨에 따르면, 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 21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에선 ‘리프트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장애인 개인의 과실로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교장 등이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발산역의 고정형 리프트는 올해 들어 30여건의 고장신고가 기록돼 있었다. 또 사고 당시 발산역 출구 4곳에 설치된 고정형 리프트 중 나머지 3곳의 리프트는 모두 고장난 상태였다.

또 연대회의는 ‘설립 발산역 쪽의 주장대로 리프트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정형 리프트는 전동스쿠터의 무게를 견디내기 어렵고 길어도 짧아 언제나 장애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며 안전장치 또한 추락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장애인에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서울시와 지하철 관계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모든 지하철역사에 위험성이 높은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연대회의는 △공개사과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하철의 리프트 철거 및 승강기 설치 등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요구했다.

한편 낮 2시50분 경 동부서 앞에는 박 교장 등 ‘장애인도 버스를 타시다’ 참가자 10여명이 타고 있던 58번 버스가 서 있었다. 이미 박 교장은 경찰서 안으로 연행됐고, 함께 있던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버스에 내리고 있었다. 이승현 씨는 “시민으로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째 끌고 오는 게 말이 되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동부서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집행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교장은 ‘버스를 타시다’ 행사와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 교장은 “5월 안에 자진출두하기로 종로경찰서와 이야기돼 있었다”며 행사 중 갑자기 체포된 데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장애인도 자유로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시위한 게 무슨 죄냐?” 낮 3시 30분 경 동부서 앞에는 장애인들을 포함해 70여명의 ‘장애인도 버스를 타시다’ 참가자들이 갑작스런 박 교장의 체포에 항의하며 모여들었고, 잇따르는 장애인 사고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서울장애인연맹의 안형진 씨는 “최근에만 30여건의 고장신고 기록이 있는 리프트가 과연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며 “늘상 장애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 사회가 장애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교장은 이날 밤9시까지 동부서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이주영)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진정처리의 기준과 원칙 낱알이

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김창국 위원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일반적인 민원처리 기간(2주)에 준해 답신을 기

다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권사회단체들은 “향후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빚어졌던 인권단체 소외·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불신을 씻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에 걸친 전 과정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설립준비기획단의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이뤄졌고 (→ 2면에서 계속)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직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피해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 조치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 배치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관리점검 실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은 피해 학생과 여교사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고 삶을 파괴하는 패륜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 당국에 의해 피해자가 장시간 협박이나 취조를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 OO여중의 한 여교사는 지난 2월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수안보에서 있었던 교원 자체연수에서 강제로 부스춤을 추는 등 김OO 부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피해 여교사는 인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왜 술자리에 갔느냐’며 책임을 추궁당하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아야 했다.

연대모임은 또 “중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나야할 가해자들이 잠시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경정계돼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나 해당학교가 취하는 가장 전형적인 처리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서울 OO여고의 수학여행기간에 일어난 교사에 의한 여교생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도 마찬가지였

다. 학교장은 가해교사에 대해 같은 재단 학교인 OO여상으로 전출시켰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 계속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던 한 여학생의 요구는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상담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여성, 학부모,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를 설치, 진상조사를 하고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을 배치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8일 교육부에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 22일 답변서를 받았다.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교육부의 답변내용에 대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조치를 강구하는 공문을 해당학교에 발송했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성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원)

(→ 1면에서 기사 이어짐)

민주적 절차는 실종됐다는 점이 토론회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바 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 과정 역시 그 기준과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인권위원 인사청문제도를 비롯한 법개정 문제 등 향후 인권위원의 선임 시 어떤 제도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진작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의사 공개 및 방청 등에 관한 운영규칙의 개선 계획 유무 △사업 내용과 방향, 예산의 집행 등을 결정하는 절차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방안 △직원 채용의 기준 및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는 다른 관계기관의 적극적 책임과 역할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긴급구제를 요하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원칙 △이에 대한 처리 방안 △진정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및 재발방지 방안을 물었다. (이주영)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파업종료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측의 보복성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중연대, 민교협, 녹색연합 등 10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발전노동자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임금 가압류를 비롯해 서약서 강요와 일일동향 보고 등의 인권유린 행위가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이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3개 인권단체들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탄압 호소와 관련, 공동조사단을 꾸려 직접적인 현장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23일 청평양수발전소를 찾아가 사측과 노동자 양쪽을 면담하기로 했으며, 24일에 서인천·신인천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다음주에도 2-3개 사업장을 선택해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발전사업장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만큼, 이번 조사활동은 전국 각지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현장조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들이 취해진다던 그것은 중대한 인권탄압”이라며 현장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인권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24일(금)
제 21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 '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 주최로 열린 「의문사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는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계기관의 협조'라는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예초 의문사위는 이 주제와 관련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의문사위 유한범 홍보팀장은 밝혔다.

기무사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테러 활동에 대단히 바쁘다'고 답변했으며, 검찰은 '자신들은 (의문사위 활동에) 협조를 잘 하고 있어 특별히 토론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불참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은 예초 최모 형사과장을 참석시키기로 했다가, 다른 기관에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후 돌연 방침을 바꿨다.

특히 국정원은 '국정원 규정에 자기 직원이 이름을 밝히고 공개토론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핑계를 댔으나, 이는 거짓임이 쉽게 판명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에 신상범 과장을 참석시켜 법안 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테

러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국정원 등은 피진정기관일 뿐”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왜 당당히 밝히지 못하느냐”며, “이는 관계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기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문사위 김준곤 제1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협조'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강조하며, “그들은 피진정기관으로 조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의문사위가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때 피진정기관들은 보안, 개인정보유출, 사건과의 무관함 등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문사 관련 자료는 보안을 통해 얻을 국가의 이익이 없고 △의문사위도 국민의 생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이라 볼 수 없으며 △관련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피진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 상임위원은 반박했다.

한편, 유가족대책위 김두원 위원장은 “우리 유가족은 화해를 하고자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밝히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호소했다. (범용)

만
화
사
랑
방

이동수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사흘 앞둔 23일, 교육부 교원복지과 담당 사무관은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책 저지를 위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공

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집회에 참석한 교원에 대해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목전에 두고 불법집회를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은 일선학교의 학교장에게 “각급 학교에서 집회 참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전교조는 “우리 노조의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분상 단호한 조치'를 언급해 협박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

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위반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21일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육부 장관과 교원복지과 담당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23일에도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된다. 밖에 모여서 교육정책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이용환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사들의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나눠선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교육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교사대회는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인권실태 조사단', 청평발전처 방문

“움츠러든 파업복귀자”...회사측, 개별 심문 진행

장기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원들에게 회복성 인권탄압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호소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공동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1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의 첫 방문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평양수발전처. 23일 오전 8시 서울을 출발한 공동조사단은 10시 30분경 발전소 인근에 도착해, 조합원과 첫 면담을 가졌다. 이미 해고를 당한 청평지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왔던 여러 인권탄압 사례를 하나둘 털어놓았다.

42명의 청평발전처 조합원 가운데 집행 간부 7명 전원이 해고를 당했고, 이들에겐 퇴직금 가압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회사측의 감사가 이를 제 진행 중이었다. 이 감사는 해고자를 포함해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심문' 절차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한다. 감사에 이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 '몸조심·입조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고자들은 “회사측이 파업참가자마다 개인행동 성향분석 기록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적극 가담자'(A등급)와 '소극 가담자'(B), '회사측 협력자'(C) 등으로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해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자들은 또 “회사측이 해고자와 조합원들 사이의 화식자리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소한 조합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기로 했던 지난 4월 26일, 회사측이 느닷없이 '비상연락망'을 뚫었던 것. 해고자들은 이 비상연락이 “간담회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회사측

은 추후 비공식 답변을 통해 “일상적인 연락망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들과의 면담에 이어, 조사단은 오후 1시로 약속된 회사측과의 면담을 위해 발전소 정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마중 나온 줄 알았던 회사측 간부 직원은 돌연 “회사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직원들의 동요가 진정될 때까지 면담을 유보해 달라”며 공식 면담을 거절했다. 회사측은 공문을 통해 면담을 약속했었지만,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악속파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나, 공식 면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간부는 “복귀자에 대한 서약서 작성이나 개별 감사 등은 일체 본사에서 간여하는 일이므로 현장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조사단의 현장 방문을 아예 불허함에 따라,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24일 서인천·신인천 화력발전처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단 출발은 오전 8시 명동성당.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아동노동 만연 ... 초국적 스포츠 기업 고발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공 등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며 초국적기업의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된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가고 축구공을 꿰매요" 89개국 2천여 단체들로 구성된 '아동노동반대 글로벌마치' 활동가로서 24일 방한한 토코 씨는 말한다.

2000년에 발간된 '축구의 그늘'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편잡 지방에서만 축구공을 만드는 아동이 1만 명 가량 된다. 또 II.0는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방에서 1만5천명이 넘는 아동들이 축구공 바느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 축구공의 제조업체는 아디다스와 같은 초국적 기업이다.

"어두운 방에서 가죽조각을 꿰매는 일을 장시간 하다보니, 아이들은 항상 등과 목에 통증을 느끼고 실을 잡아 다니다가 손가락이 비늘어지기 십상이다. 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토코 씨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 뿐 아니라 임금도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한 집에서는 어린 세 자매가 하루 평균 4~5개의 축구공을 꿰매는데 이에 대해 받는 돈은 미화로 2달러도 안 된다. 토코 씨는 "축구공을 만드는 성인노동자에 대한 임금도 워낙 낮아, 아동들은 가족을 돕기 위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빈곤가구 아동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일을 한다면, 빈곤과 문맹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글로벌마치의 필립 씨는 "피파는 월드컵 공식 축구공 제조업체인 아디다스 등의 노동조건 및 아동노동 사용

여부에 대해 감독을 거쳤다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필립 씨는 파키스탄에서 월드컵 로고가 찍히는 홍보용 축구공을 만드는 아동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이밖에, 아시아모니터센터의 김애화 씨는 "스포츠 의류와 신발도 대부분 25

세 미만의 여성노동자들의 저임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초국적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노동착취를 행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민주연대 등 10여 단체들은 '노동자·아동 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반대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27일 10시 30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아시아 노동자와 축구공을 꿰매는 일을 했던 인도 어린이 소니아 씨가 참석해 열악한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한다. [이주영]

〈논평〉 월드컵의 광풍

'월드컵 성공'의 구호 속에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월드컵 체제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어카 하나로 한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1천미터, 선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겉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고 호령하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이나 기본권을 외면하며 '월드컵 성공'을 위해 광분하는 모습은 파시즘을 연상케 한다.

지난해 9·11 사건 후 부시정권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비이성적으로 몰아쳤다. 모든 것을 '테러 혹은 반테러'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반테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테러분자(혹은 용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불신감문·감청 등의 확대, 출입국 통제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이 제한됐다.

2차 대전 당시, 타 인종과 국가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위대한 독일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나치즘은 초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하게 제한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히틀러 1당 독재체제가 구축된 이후,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유대인 및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학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중의 기본권을 외면한 '광신적 애국주의'가 빛은 비극이었다.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현되고 제기되는 것은 월드컵 시기에도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한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힘인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단일한 목소리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사회가 전체주의 사회, 인권후진국임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놓는 창피한 일이다. 이제 정부에 묻는다. 언제까지 월드컵 기간이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할텐가? 생존과 기본권을 월드컵 이후로 미루라고 할텐가? 월드컵 이후는 또 무엇이 대기하고 있는가? 월드컵 '주문'에서 깨어나라.

2002년 5월 25일(토)

제 21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청원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회 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ICC규정과 충돌하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인권단체들이 입법청원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란 및 외환 죄 △국가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작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문에 의한 증거조작이나 사실발견의 은폐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범죄'의 경우, 은폐행위가 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썼다. 발의자로는 김덕규, 황우여 등 2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인위적으로 범죄가 은폐되는 행위도 처벌가능하게 돼 한국의 인권상황은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⑤

'진짜 전쟁 영화' - 개막작 <아프간 전쟁>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올해 인권영화제의 개막작은 <아프간 전쟁>이다. 1998년 이탈리아의 다큐멘터리 감독 페브리치오 라자레티는 종군 기자 에토레모와 함께 아프간의 현재를 필름에 담기 위해 촬영 계획을 세운다. 감독은 아프간의 최전선에 응급병원을 설립하려는 외과 의사 지노와 종군 기자와 함께 아프간 전선으로 떠난다. 감독의 필름은 1999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아프간에 도착한 후 사리카시에서 병원을 설립하려 하지만 그 해 6월 탈레반의 공격으로 사리카시는 폐허가 된다. 병원 설립은 무산되고 카메라는 폭격에 쫓겨 흩어지는 아프간 사람들과 함께 북부로 이동한다.

작품은 '진짜 전쟁영화'답게 참혹하고 끔찍하다. 무엇보다 우리를 도리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장면이 '사실'이라는 사실이다. 전선으로 이동하면서 지노는 간이 응급병원을 설치, 환자들을 치료한다. 지노와 폭격으로 팔과 다리, 얼굴의 한쪽이 날아간 사람들이 속속 후송되고 마취 없이 수술하기가 다반사다. 아프간의 많은 사람들은 팔과 다리가 없다. 전쟁이 먹어치운 무수한 팔과 다리 그리고 생명들을 카메라는 가슴 아프게 전달한다. 영화는 오랜 전쟁으로 가속화되는 기아와 탈레반 집권 이후 얼굴 없이 살아야 하는 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웅장하고 다양한 카메라 워크로 아프간의 사람들의 풍상을 표현하는 이 영화는 얼마 전 개봉되었던 영화 <칸다하르>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아프간 민중들의 상흔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일반 상영작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편이 있다.

<붉은 대기>는 프랑스 68혁명 당시 영화인들과 함께 혁명에 동참했던 크리스 마르케의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1977년 제작관을 15년후(소련 붕괴후) 재편집해 1,2부로 완성한 이 작품은 베트남전쟁부터 체 게바라의 죽음 그리고 68혁명을 재해석하고 프라하의 봄과 프랑스의 사회주의에 이어 칠레의 혁명 역사를 영상으로 고찰하는 20세기 혁명 역사에 대한 대하 영상 에세이이다.

지난 50년간 '다이아몬드 지역'으로 불리는 나미비아 동쪽 해안에는 낮은 선박 한 척이 항해하고 있다. 이 일대 바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거대 복합기업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채광선 '나미비아의 영혼'에는 나미비아인을 비롯해 남미에서 온 유인종 노동자들과 몇 명의 백인을 태우고 밤낮으로 다이아몬드를 채광하고 있다. 주급 150달러를 벌기 위해 고된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이들이 한달 동안 캐내는 다이아몬드는 약 350만 달러. <나미비아의 영혼>은 자본의 이윤추구에 동원돼 노예노동을 감수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제3세계 민중들의 삶을 다크시네마 스타일로 보여주는 수작이다.

이 외에도 다국적 제약 회사에 맞서 에이즈 치료약값 인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남아공 치료행동캠페인의 활동가 재키의 투쟁을 담은 <나의 인생>과 영국에서 극장 개봉되어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영국판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인 <불의>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 영화들이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운동"

73년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아래 중정)가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최종길(전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타살로 밝혀졌다. 27일 오전 10시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중앙정보부 차철권, 김상원 등 수사관들이 △심한 고문 등으로 소생이 불가능해진 최 교수를 7층 비상옥외계단에서 바닥으로 던졌거나, 이미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최 교수를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상당한 높이까지 운반해 아래로 던져 추락시켰거나 △바닥에 운반해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가장하기 위해 발바닥에 둔기 등으로 외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어떤 경우든 "최 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중정은 최 교수가 남산 분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간첩사실을 자백한 후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문사위는 △총치 서류의 허위작성 △간첩자백 사실의 조작 △현장훼손 및 현장검증의 생략 △고문사실의 은폐 등을 근거로, 중정의 발표 및 그 근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문사위는 "최종길은 중정의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저항했다"고 밝혔다. 현 '의문사법'에 따라 의문사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유신반대활동을 한 것과 같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 이외에 이 것과 같이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도(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위원 전원 찬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 고 최종길 교수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기자들은 고 최종길 교수의 타살사건이 조작·은폐된 조직체계에 대해 질문했으나, 의문사위는 조사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당시 이후라 중앙정보부장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 씨는 "결과발표가 미흡하지만 위원회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반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결정문은 조사권한의 한계와 누가 협조하지 않아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혔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29일 오전 10시30분 민변 사무실에서는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후 고문치사 및 사건의 은폐·조작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범용]

정부의 월드컵대화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 확인반' 운영...기본권 침해 감시

국가인권위가 월드컵 관련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총리실·경찰청·행자부·노동부·법무부에 보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권력 확립방안"은 △월드컵 기간 중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불법·폭력시위 예상 시 처음부터 진압복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집회시위가 과하게 제한되고 불법검문이 발생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밖에 경찰청은 경기장 반경 1km, 속도 및 피파 총회장 반경 600m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집회를 불허키로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집회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의 제한조치를 취하는데 그쳐야 하며,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장집회로 집회 시위의 개최를 원천봉쇄했다는 논란이 이번에는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월드컵 기간을 전후로 인권위원이 포함된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또 노동부가 월드컵 기간 동안 '노사평화선언'을 채택하도록 지도하고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①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몇 해 전 '인권영화제'에서 <대지의 소금>이라는 작품을 본 일이 있다. 1950년 뉴멕시코 지방에서 벌어졌던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을 소재로 한 극영화였다. 영화는 백인 소유 광산회사의 횡포에 분노한 멕시코계 광부들이 파업투쟁을 결행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나 영화의 시선은 파업투쟁 자체에 머물지 않고, 파업투쟁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차별과 억압의 구조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바깥에서는 자본가에 맞서 싸우던 남성노동자들이 가정에서는 아내를 억압하는 모습, 남성들의 파업투쟁은 위대하지만 수도시설의 수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찮은 불명쯤으로 치부하는 독선을 보면서, 관객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는 억압의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가면서 억압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낸다. 법원의 파업금지명령에 발목이 잡힌 남성들을 대신해 피켓을 들고나선 여성과 아이들. 그들이 잠재되어 있던 자신들의 능력과 자존심을 발견해 가는 과정은 하나의 감동이다.

또 유치장에 끌려간 아내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던 남성들이 '수도시설'의 절박함을 깨닫는 장면이 이르러 관객들의 카타르시스에 달한다. 마침내 파업투쟁마저 승리로 끝나는 이 영화는 엔딩자막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시선을 붙잡아 둘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다.

새삼 몇 해 전의 영화감상을 되짚어 보는 것은 영화 속의 뉴멕시코가 우리와 아주 먼 현실로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때나 올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때, 우리는 '가족대책위'라는 이름 아래 모인 '아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구속되거나 수배된 남편을 대신해 머리를 묶고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뉴멕시코의 아내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남편들은 투쟁하며 쓰러지고 잡혀가던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아내들은 투쟁 속에서 무엇을 남겼을까? 비록 파업을 승리로 마감하진 못했다. 그렇지만 '평등'과 '권리'의 새 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파업은 '승리'한 싸움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기름때 하나 묻히지 않으면서 노동운동과 파업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처지는 못 된다. 어쭙잡게 들어보긴 파업을 흔히 '노동자들의 학교'라 부른다던데, 그것은 파업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지의 소금>은 거기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파업은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학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파업이 진정한 인권학교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리라.

(이창조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1. '월드컵 빌미로 노동탄압 말라'

금속연맹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 무기한 상경노숙 투쟁 돌입... '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 (5.21)/ 민주노총, 106곳 3만여명 파업... '정부가 월드컵 무파업 말하면서 노동탄압 하는데 대해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 (5.22)/ 보건의료노조 41개 만6천여명 파업 돌입 후 26곳 협상타결... 사회보험노조와 경기도노조 파업 (5.23)/ 민주택시연맹, 106개 사업장 1만여명 파업 (5.24)

2. 국가법적의 천적, '시효배제'

전민특위, 함평 불감산서 유골발견... '국군, 함평 일대 주민 1천여명 대부분 총살' (5.20)/ 인권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5.21)/ 국정원·기무사 등, '의문사 진상규명 토론회' 집단 불참 (5.23)/ 이주영 의원들, 공소시효 배제조항 신설 형소법 개정안 발의 (5.24)/ 광주인권운동센터, 진도군 갈매기섬서 유골 발견... '보도연맹일 집단 학살' (5.25)/ 의문사위, 최종길 의문사 타살로 확정 (5.27)

3. 테러 수준! 미국의 북한 미워하기

미국무부 연례보고서, 15년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북한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실제적인 조처 취하지 않았다' (5.21)/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지, 부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아프리카의 '피그미', '밥상 머리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로 비유했다고 발표 (5.27)

4. 높아가는 국경, 침체받는 인권

유럽연합 '이민차단' 논의 본격화...영 블레이크 "이민에 관한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 기세 올리는 극우파 대책 성격 (5.20)/ 탈북자 4쌍,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레나 목살 밝혀 (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 (5.24)/ 정부, 탈북자 내부지침 수정... '재외공관 진입 탈북자,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 (5.24)

5. 기타 : 학교내성폭력근절을위한연대모임, 가해 교사 파면·성폭력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마련 촉구 (5.20)/ 인권단체들, 설립과정 및 운영의 민주성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공개질의 (5.21)/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대응 (5.22~)/ 인권단체들, 발전노조 인권탄압 실태 공동조사 돌입 (5.23)/ '수지 김' 유가족, 국가와 전 안기부장을 상대로 10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5.24)/ 국제민주연대·글로벌마치 등, 스포츠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및 아동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 (5.27)

◎ **중요판결** : 서울지법, 고엽제 피해 배상소송 기각 (5.23)/ 서울행정법원,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5.2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29일(수)

제 21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 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 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 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 지검으로부터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 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 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돼 올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통 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관 련 조항들(제13조와 관련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은 수 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의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 의 번호, 사용도수, 가입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위치추적, 접속지 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 의 영장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케 했고, 긴급 한 때는 자료 요청 후 사후에 검사장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 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 제13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 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자의 통신 활동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비밀비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마포경찰서장은 중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홈페

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 자의 접속로그일체, 사번, 주민번호, 연락처, 접속 IP, 접속시간 등과 전 직원의 한국전력 메일계정 일체에 관 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3항에 따른 것이었다. 현행 통 신비밀보호법 하에서는 이보다 통신비 밀의 침해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수사기 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내지는 핸드폰 이용자의 신원 및 이동경로와 활 동의 궤적들을 감시할 수 있게 돼, 헌 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 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 며, 헌법재판소 관례(헌재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에 따르면 헌법 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에는 통신 의 내용 뿐 아니라 통신을 했는지 여 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회수, 시 간, 장소 등 일체의 것이 포함된다.

이에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발전 산업노조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 2면에서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매매와 인권' 자료 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 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 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 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여성차별철폐 협약과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선언문·행동강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군산 대명동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실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방지 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 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아)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촌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 소개 (이찬진)
2.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성매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 협약(1951년 발효)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1981년 발효)
북경세계여성대회 선언문 및 행동강령 (1995년 채택)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 국의 입법사례 (김현선)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 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촉구 운동이 본격화된다. 또 이들은 지문날 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 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문날인반대 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지문날인 거부자 들은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국민의 기 본적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한받 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무만 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배신"이 라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젠 끝내자!"

이어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 는 "박정희 군사통치시절 국민을 통제 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제도는 이제 없어도 된다"며,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이 주민등록증제도를 실질 적으로 없애 가는 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회진보연대 공

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도 "(정부 가) 지문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하 나의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소 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 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 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 라 지문날인을 안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이 제한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자체 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 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모든 양심적 국민들에겐 지 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아닌 (대체) 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 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 운전면 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 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은행, 한국방 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 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

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 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 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이 있어도 투표 가 가능하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 는 "다른 대체신분증도 갖고 있지 않 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정부에서 이를 거부한 다면 항의방문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든 수 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앙선거위원회 "동사무소에서 발 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반면, 행정자치 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구체적 증명서가 아니고 관련 법령도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윤씨는 "주민등록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중 지문날인이 되어 있 는 유일한 신분증"이라며, "선거기간 이라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이로써 이 운 동이 향후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운 동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범용)

(→ 1면에서 이어짐)

알림 인권영화제 내일 개막

제6회 인권영화제가 내일(5/30)부터 시작돼 아트큐브에서는 6월 3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아트선재센터)에서는 6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35편의 인 권영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내일 저녁 7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립니다. 에바다 학교의 권오 일 선생님과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씨가 공동 사회를 맡고, '꽃다지'와 서기 상 씨가 축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개막식 후 연이어 개막작인 <아프간 전 쟁>이 상영됩니다.

단 존스 그림전시회, 5/30~6/3 아트큐브

엠네스티 영국지부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이자 화가인 단 존스의 그림전 시회는 영화제 기간동안(5/30-6/3) 아트큐브에서 열립니다. 인권과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화폭에 담긴 인권 현장을 감상하시기 바랍니 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내일 오후 5시 아트큐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성명을 내 "영장없는 IP추적과 위치 추적은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 시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 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한 감 시를 강화하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 기"를 기대했다. 또 이 변호사는 "통 신비밀은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한 법 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도 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9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박모 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5만~3백만원씩 모두 5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재중 당시 법인의 이사장 등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한편, 강제격리해 탈출할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지마을 내 인권유린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는데 이를 등한히 해 불법구타나 원고들이 불법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납치 및 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등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작업수락서 등에 비춰볼 때, "양지마을 축이 원고 등의 동의를 얻어 노역을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98년 7월 당시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이 조사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수용돼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9년까지 쇠창살이 설치된 방에서 강제구금생활을 했다. 또 수용자들은 축구공·쇼핑백·자전거 등을 만드는 공장

에서 월 1만원 가량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강제노역을 당했다. 직원들은 강제로 수용자들이 작업수락서에 무인을 찍도록 만들었고, 이에 불응하면 폭행을 가했다. 이밖에도 수용자들은 퇴소의를 밝히거나 노역을 거부할 때도 이사장 및 직원들에 의해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는 비호에 의해 은폐가 가능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99년 2월 노재중 이사장 등 직원들과 관련 공무원은 징역 1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 역시 공소 단계에서 불법납치, 강제노역 관련 해

심죄목을 제외해 인권단체들로부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98년 당시 직접 조사활동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대군 씨(현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는 "감금상태에서 쓴 작업수락서를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한 건 법원이 현실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씨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동일한 진술을 했음에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부랑인, 즉 최하층이란 것에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에 8년간 수용됐던 문모 씨는 "우리는 양지마을 수용 당시 입었던 피해 때문에 퇴소 후에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데, 판결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 감잡히다"고 말했다. 양지마을 퇴소 후 4년, 이들은 수년간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탓에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들고 가정도 파탄난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은 많은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모 씨 등 서너명은 소송결과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기도 했다.

99년 7월 민사소송 제기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나온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이런 처지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주영)

시효배제입법 여론 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성신계승국민연대, (⇒ 2면으로 이어짐)

제6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

서울아트시네마		아트큐브	
5	1:00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20 -대디 앤 파파 3:30 -서던 컴포트	5	1:00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 2:10 #나지 알 알리 3:10 #정착민들
30 (목)	5:20 +가로막힌 자유, 집회 7:00 P 「개막식」 8:00 !개막작: 아프간 전쟁	30 (목)	4:20 !9·11 5:00 P 「인권그림전시회 개막식」 5:30 #뉴스타임
5	12:00 !전쟁사진작가 1:40 #정착민들 2:50 +매항리로 돌아가는 먼 길 4:40 !9·11 5:20 !마수드 아프간 7:10 -형법 175조 8:40 -대디 앤 파파	5	12:00 !전쟁사진작가 1:50 #팔레스타인에서 온 5개의 인권소식 3:00 -신의 아이들 5:00 !일본의 악마들 7:50 -지하철 아이들
6	12:00 !후세인의 미친 노래 3:00 !전쟁사진작가 4:50 -신의 아이들 6:40 -아티카의 유령들 8:20 +먼지, 사복을 묻다	6	12:00 -대디 앤 파파 1:10 -처벌의 이유 2:10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4:00 -나미비아의 영혼 5:30 -나의 인생 7:00 -붉은 대기
1 (토)	12:00 -붉은 대기 3:10 -나미비아의 영혼 4:30 +친구 6:00 -사라진 여성들 7:20 +철로 위의 사람들 9:10 -처벌의 이유	1 (토)	12:00 !마수드 아프간 1:40 !처음 살인 3:00 -불의 4:50 -아티카의 유령들 6:30 -서던 컴포트 8:10 -형법 175조
6	12:00 #뉴스타임 1:10 #팔레스타인에서 온 5개의 인권소식 2:20 -지하철 아이들 4:10 +백큐멘터리-박동진리교 6:10 -불의 8:00 +한 사람	6	12:00 !후세인의 미친 노래 3:00 !9·11 3:40 !아프간 전쟁 5:50 -사라진 여성들 7:20 !전쟁사진작가
3 (월)	12:00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1:50 -사라진 여성들 3:20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 4:30 +겨울에서 겨울로 5:50 +어부로 살고 싶다 7:30 -나의 인생 8:50 #나지 알 알리	3 (월)	! 전쟁과 인권 # 특별프로그램 - 해외일반상영작 + 한국영화상영작 P 「개막식」 5.30(목) 저녁 7:00/ 서울아트시네마 P 「폐막식」 6. 5(수) 저녁 6:30/ 서울아트시네마 P 「인권그림전시회 개막식」 5.30(목) 오후 5:00/ 아트큐브 "모든 작품은 무료로 상영됩니다."
6	12:00 !일본의 악마들 2:50 !처음 살인 4:10 !아프간 전쟁 6:30 P 「폐막식」 7:00 +폐막작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6	

(⇒ 1면 '공소시효' 기사에서 이어짐)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회'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하고, 최종길 간첩 공작살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는 "정부는 공소시효를 배

제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혀낸 것은 과거 정권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

나,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에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은 현 정부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를 상대로 "(최종길 타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를 통해 독재정권의 과오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민변 회장 최병모 변호사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헌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최종길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이석태 변호사는 △ 재판에서 의문사위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 재판과정을 통해 타살의 진상을 더욱 더 명백히 밝히며 △ 국가에 대한 금전적 요구도 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고 최종길 씨의 아들 최광준 교수 등은 가혹행위치사 및 진상 은폐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와 당시 이후라 중정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 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조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허위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유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향후 박영두 및 최종길 사건에 대해 형사교발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와의 면담을 통해 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국회에 청원한 '시효배제 특별법'에 대해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공소시효 제도가 언제까지 국가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할지 주목된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5월 31일(금)

제 21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영풍 장영진 회장은 대화에 나서서 시그(네틱스) 문제 해결하라!”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리고 29일부터 이틀간 농성을 벌이던 시그네틱스(아래 시그) 여성노동자 네 명은 30일 오후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이번 농성을 통해 영풍그룹 한두훈 부사장, 시그네틱스 양수제 사장이 시그노조와의 면담에 응하도록 하는 작은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고농성에서 시그 노동자들은 △파주공장 이주 희망자 전원 수용 △영풍그룹 장영진 회장과 면담 등을 요구했다.

98년 반도체 조립업체인 시그네틱스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시그 노조는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등 워크아웃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임여 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 전환한다’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동시에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해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서울공장이 매각되면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 회사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1백80여명의 인원을 정리하고 지난해에는 서울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산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영풍그룹은 안산공장에 대한 투자계획도 없고 생산량도 서울 공장의 1/9에 불과하다. 즉, 안산 공장으로 간다는 건 대량해고를 의미한다. 이처럼 회사 측이 노동자들

의 파주공장 이주를 극구 거부하는 이유는 파주공장에서의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시그노조는 말한다. 실제 시그네틱스 양수제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파주에서 일하겠다는 것은 곧 노조집행부도 파주로 오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현재 파주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7백여명은 모두 용역이며 사측의 노동 착취에 저항하는 노조는 없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사측이 파주공장 이주의 이주를 전면 거부한 지난 해 7월 파업에 돌입한 후, 영풍그룹에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일인시위·목요집회·단식·한겨울 노숙농성 등 고되게

싸워왔다. 하지만 영풍그룹은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에 결코 응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측은 △용역강제를 동원한 폭력 행사 △조직원 부당해고 △임금 및 재산 가압류 △업무방해죄 고소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회사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9일 고농성을 감행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임영숙 부지회장 등 4명의 노동자들은 밤 10시 현재 강서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분산 구금된 상태다. 이번에 임 부지회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말 영풍그룹 관계자와의 면담 약속이 이뤄진 데 대해, 임은 옥 시그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부사장이라도 면담에 응하게 하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당장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끈질기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프랑스-영국간 열차 유로스타 해저 구간의 출발지점인 프랑스 칼레 해변에서는 터널을 통과해 영국으로 도망가려는 난민희망자와 프랑스 경찰간의 한바탕 추격전이 매일 아침 벌어진다. 작년 여름 처음 전세계에 그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된지 일년이 지났으나 이목을 끌 건 추격전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한 프랑스 경찰은 매일 아침 이들을 검거해 다시 칼레 난민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이 마치 ‘서틀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모로코, 중국 등지에서 흘러들어 온 난민희망자들은 프랑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난민지위획득과 난민수용소의 열악한 상황을 피해 해저철도를 따라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선 현재까지도 이민정책에 관해서만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극우파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민정책의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까지 올라 총격을 쏜 민족전선의 르퐁 후보의 주된 공약은 ‘유로화 탈퇴’와 함께 ‘이민유입 금지’였다. 네덜란드 극우보수정치인 포르투인의 암살 2주 후 열린 총선에서 극우보수당이 2위를 차지했고, 벨기에·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네오나치 정당이 연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유럽 극우보수당들의 대부분의 기초는 ‘이민유입반대’.

한편 오는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출을 앞두고 덴마크의 중도우파 라스 무센 수상은 지난 25일 ‘이민봉쇄, 사회보장 약화 등 덴마크가 최근 채택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을 다른 유럽국가들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웨덴 이민장관은 “난민희망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을 가해 논쟁이 빚어졌다.

이렇게 극우보수세력들이 이민정책 설정을 주도하는 것을 우려해, 각국

정상들도 대책을 세우는 데 분주하다. 지난주 현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페인 아즈나르 수상과 영국 블레어 수상은 다음달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이민정책 관련 문제를 정면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한편 블레어는 이와 관련해 “소말리아, 스리랑카, 터키 등에 원조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독일 슈뢰더 총리와 최근 재선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28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책임은 계속 지되, 이민유입에 대한 단속과 제한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럽연합 이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거”라고 합의했다고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전야제로 들뜬 30일 저녁 7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백여명의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이 선언됐다.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 영화제 총기획 김정아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영상을 통해 베트남전, 걸프전 그리고 아프간에서의 전쟁을 돌아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반인륜적인 고통에 몰아넣는지를 다시금 가슴아프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프로그램, ‘다시 팔레스타인을 말한다’에서 소개하는 5편의 작품도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지역 민중의 상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김 씨는 소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개막식 축사를 한 오태양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전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프간이나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영화 속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거 전 극우보수 세력과 신자유주의세력간의 이민과 난민에 관한 정책대결이 있을 거라고 관측하며, “이는 기존 이민정책의 보수화의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인권활동가는 “최근 이민정책의 보수화 경향은 9.11 테러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뿐 불법이민에 대한 근본 해결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기피·인구노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민노동자가 없다면 유럽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제네바·김철효)

이날 개막식에선 올해 상영되는 한국 영화들의 주요 장면도 잠깐 선보였다. △사북탄광 △집회의 자유 △한성CC 여성 경기보조원 △매항리 투쟁 △박정희가 남긴 것 △새만금 간척사업 △주민등록증 △철도노조 민주화 △장애인 의 일상 △서로베르트 신부 등 다양한 인권 주제를 카메라로 담은 열 편의 한국영화 중 어떤 작품이 ‘올해의 인권영화’로 선정될 지 주목을 모았다. ‘올해의 인권영화’는 6월 5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인권영화제의 또다른 상영자인 아트큐브에서는 이날 오후 5시 영국의 인권운동가 단 존스 씨의 그림전시회가 개막했다. 양심수로서 감옥 수감 중 단 존스 씨와 인연을 맺게 됐던 화가 홍성담 씨는 개막식에 참석해 “그의 그림을 보고난 후 난 내 몸뚱아리가 언제나 우리시대 고단한 삶의 현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있어야 한다는 깨우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을 비롯해 전세계의 노동운동, 인종차별문제, 어린이의 삶 등을 깊은 인권의 감수성을 녹여 그림으로 표현한 단 존스 씨의 그림들은 6월 3일까지 아트큐브에서 만날 수 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2002년 6월 24일
제 21106호
1면 1, 2면

인권하루소식

정통을, '군대병내 흡배이시 흡구행'

2개월 이용정지 결정... '지리적 배급' 폭력적 발상

【본지 특파원 서울 24일 특보】 군대병내 흡배이시 흡구행(이하 '흡배이시 흡구행')은 2002년 6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간담' 시호배제입법, 지적될 수 없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2002년 6월

(제2106호 ~ 제2124호)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인권하루소식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2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일(토)

제 21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 "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모든 군대를 없애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http://non-serviam.org>) (아래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 (아래 정통윤)가 판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통윤은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이 정통윤 심의규정 중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 조약골 씨는 "정통윤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내려 이용정지 결정을 하는 것은 폭력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대해 "징병제도의 문제점,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군대가 없으면 적(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머니, 딸들은 누가 지키느냐?' 이런 논리가 지난 50년이 넘게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해 왔지만, 그에 대한 반대담론은 한번도 없었다고 조씨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 반대쪽에 선 사람들의 논리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조씨는 "그것이 국가를 부정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

호히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정책기획팀의 선용진 씨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연장선에 있다"고 평했다. 평화인

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도 "징병제도나 군대는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돼야 인권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정통윤의 이용정지 결정을 비판했다.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스쿨넷',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그리고 이번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정통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범용]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6년이 지나 청송교도소 박영두 사망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수지김 조각간첩사건의 진실이 14년만에 드러났을 때도, 우리는 번번이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왔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정법 앞에서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

때문에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서둘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입법시도는 더 이상 미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효배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다양한 반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된 마당에,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야 있는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처벌가능한 일에 관용을 베푸는 것과 처벌의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바람직한 것은 법제도적으로 처벌의 근거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그것이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회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른 '관용'은 그 뒤의 일이다.

법률을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기존의 범죄행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대상이 아니다. 2차대전 후 전범의 단죄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소급입법 논란을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이 은폐해 왔던 진실이 언제 또 밝혀질지 모른다. 그때마다 '시효'를 핑계로 면죄부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는 한시의 지체도 허용될 수 없다.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회'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 (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 (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 (5.29) 하지만 가해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 토론회에 전원 불참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5.23) 특히 국정원은 면담요청까지 거절했다 (5.29).

2. 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떠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격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 (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했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결성으로 이어졌다. (5.9) 공대위는 서울 문래동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5.16), △자진신고 철회 △단속주방 중단 △노동비자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제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5.19) 한편,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모두 25만5천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5.25)

3. 잇을만하면 터지는 국보법 사건

'국보법 사건,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안 터지겠지?'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 (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려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인사행위였다. 또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인터넷상에 올린 논쟁글을 근거로 성공회대 전모 학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5.7) 한편, 10기 한총련은 '자신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나?'고 검찰에 공개질의를 했다. (5.13) 그러나 검찰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김형주 한총련 의장은 충북 보안수사대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 (5.28)

4. "다음 중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관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무총리실은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1) 종합대책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찰청은 "시위의 형태가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부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부 돌발적인 상황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5.9) 또 교육부는 '월드컵 직전의 불법집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며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현장 확인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5.27)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은 △불법폭력시위 예상시 처음부터 진압복 투입 △치밀한 검문과 수색 실시 △경계장 반경 1킬로미터 등 특별치안구역 설정, 집회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평

- '어린이보호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5.4)
-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5.11)
-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5.18)
- 월드컵의 광풍 (5.25)

인권이야기

-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5.7/육이은)
- 경찰, 제발 좀 배려! (5.14/이우갑)
-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5.21/권두섭)
- 파업이 가르쳐 주는 것 (5.28/이창호)

인권정보자료

- 「노동보건환경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5.1)
-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모음 (5.8)
- 「비전향 장기수 0.5평에 갇힌 한반도」 (5.15)
- 「양심적 병역거부」 (5.22)
- 「성매매와 인권」 자료 모음 (5.29)

기획 -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 ②전쟁과 인권 (5.4)
- ③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5.11)
- ④다양한 소재의 국내작품 열 편 (5.18)
- ⑤「진짜 전쟁 영화」-개막작(아프간 전쟁) (5.25)
- *제6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 (5.30)

연재 - 유엔인권위 소식

- (9)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5.2)
- (10)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들 (5.3)

해외기고

-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5.8)
- 말레이시아, 테러 핑계 기본권 침해 (5.15)
- 태국의 광우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5.22)
-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5.30)

중요 판결 및 소송

-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5.1)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5.14) / · 대법원, '검찰의 감입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 (5.19) / ·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 (5.27) / · 3년여를 끈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5.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4일(화)

제 21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지문날인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원증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문날인 거부자 중 한 사람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용산구 소재의 한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그날 오 사무국장은 동사무소 직원에게 중앙선거위의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서 중앙선거위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동사무소 직원은 일단 중앙선거위에 문의해 공문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었다. 이때 담당 계장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의 교부를 중단시켰다.

이에 담당 계장은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또 행자부의 답변에는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 양식이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위로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때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이 아닌 호적등본(법원), 납세증명원(국세청) 등을 말한다. 결국 행자부 소관의 증명서는 지문날인거부자들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뜻. 이에 따라 만들어진 신분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선거위는 '사진을 첨부한 주민등록등본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행자부는 '발급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위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이건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정권 행사라는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라며 답답해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위가 신분증으로 인정된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거부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문날인 반대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이 결과에 불복하며, 신원증명 희망자를 모

집하고 있다. 신원증명 희망자들은 오는 10~13일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을 요구하게 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운동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던 분들이 지문날인 거부에 동의하고 이 운동에 연대하는 차원으로 '지문날인 이 때 있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투표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외에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기술자격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명서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다. (법용)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운영을 계속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http://non-serviam.org>)가 지난날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는 국내 인터넷 업체인 '링크프리'를 통해 계정전송 서비스를, 링크프리는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체인 '두리네트웍'으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또 두리네트웍은 한국통신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윤은 이들 각 업체에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실제 링크프리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계정전송 서비스를 중단시키기에 앞서, 두리네트웍으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웍센터 장영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이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통윤이 검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임시 거울 홈페이지'(미러링 사이트, <http://dopehead.net/non-serviam>)가 만들어진 상태고, 진보네트웍센터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계정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용)

○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보법 위반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작년 대우차 집회 때 참가한 것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갖다 버린지 7개월이나 흘렀지만, 기억하기로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거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이 건방지게 헌법조항도 깔아뭉개고 전지윤을 끌고 갔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등학교 때 내가 배웠던 것들이 말짱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전지윤을 부당하게 잡아간 것이 틀림없다. 그럼 그 잘못된 교과서를 만든 책임을 지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그럴 리 없다. 국민을 통제하는데 국가보안법만큼 효율적인 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전지윤을 돌려달라는 시민단체와 성공회대 학생의 주장을 수렴하기는커녕 며칠 전에는 한총련 김형주 의장까지 잡아갔다.

전지윤을 잡아간 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와 민중을 위해 싸우는 좌파들을 사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지윤은 '다함께' 성공회대 지부 대표를 맡고 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또 성공회대에서 '다함께' 회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백 보 양보해서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북한이라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고발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전지윤은 옥중에서 "논리고 뭐고 없습니다. 수사관들조차 자신들이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는지 심문하다 말고 웃더군요."라고 조사 분위기를 설명했다.

하긴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는 고등학생조차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못할 짓이 뭐가 있겠나마는, 이번 일과 같은 억지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전지윤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광란에 가까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월드컵 때 외국인 보기에 안 좋다며 노점상도 때려부수고 있고, 최근 드러난 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안보 위협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다.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말고 전지윤을 돌려주기 바란다. 김형주 의장도 함께.

(육이은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주간인권호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1.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탄압의 현실

축구공 등 생산 초국적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열려 (5.27) /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관계자 면담 및 파주공장 이주' 요구 한강대교 고공농성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5.29~30) / 미국쪽, '월드컵 기간 만이라도 폭력훈련 중단' 요구하는 매항리 주민 서한 접수 거부 (5.31) / 검찰, 병원 파업 주도 차수련 위원장 등 병원노조 간부 '월드컵 행사' 상관없이 검거방침 (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중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 (5.29)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족 등,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29)

3.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건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5.28) / 한 지문날인거부자, 투표시 신원 증명용으로 주민등록증 대신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했다가 동사무소로부터 거부당해 (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5.27) /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이용 정지 (5.27) =>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돼 (5.31)

5. 대테러조치의 끝=수사기관의 나라

앰네스티, 여러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인권침해·정적탄압하고 있다고 비판 (5.28) / 미국과 EU의 대테러조치 갈수록 기관 ... 미국, FBI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도 집회 참석·인터넷 감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새 지침 발표. 유럽의회, 인터넷·전화 이용 기록 남겨 수사관이 볼 수 있게 하는 법안 승인 (5.30)

6. 기타 : 앰네스티 2002년도 연례보고서, "한국은 국가보안법 구속은 준 반면 노조 지도자 구속은 계속" 지적 (5.28) / 주한미군, 처음으로 2000년 3월의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 책임 시인 (5.30)

○ 중요 판결 및 통계 : 서울지법민사합의14부, '양자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 안 해 (5.28)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 (5.29) /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지는 위헌 판결 (6.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5일(수)

제 21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어, 이제껏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된 재평가를 재촉하고 있다.

지난 4월 제작, 6월 1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이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먼지, 사북을 묻다'에서, 관련자들은 20여년 동안 쉬쉬해왔던 고문 피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북새마을사택 부녀회장이었던 김모 씨는 "수사관들이 짓통을 좌악 잡고 끌어올리고, 발길로 찼다"며 증언했다. 또 다른 한 여성 역시 "(수사관들이) 흠뻑 벗겨놓고 짓퍽지를 잡아당겨 다 비틀고, 거드랑이 털을 뽑고 손을 묶은 채 발로 치고 때며 공 굴리듯 굴렸다"고 말했다. 손인숙 수녀는 "고문을 당한 여성들은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그 사실을 얘기 못하고 자주 짹짹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항쟁지도부였던 이원갑 씨는 고문으로 손가락·갈비·명치의 뼈가 이탈했고, 신경 씨는 왼쪽 고막이 파열됐다. 전효덕 씨는 "수사관들이 '이북에 넘어갔다'와 '자백하라'면서 수없이 두들겨팼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처음으로 군부가 관련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80년 5월 6일부터 20일째 까지 계속됐고,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을 자백하거나 강요에 의해 관련없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노연 씨는 "하지만 (수사관들

이) 밖에 나가서 고문당했다고 말하면 쥐도 새도 없이 죽는다고 했다"며 여대못 숨죽이며 살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비인간적 대우에 맞선 '노동자항쟁'

80년 4월 21일 당시 국내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광부와 그 가족 6천명은 들고 일어났다. 당시 동원탄좌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16만원(현재 41만원 가치)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회사 구관장에선 280원짜리 소주를 350

원에 파는 등 생필품을 시중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수백 내지 수천미터의 지하 막장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당시 이제기 노조 지부장은 적은 폭의 임금인상을 회사측과 담합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지부장 자리를 유지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러던 중 회사측이 임금인상과 어용노조지부장의 사퇴 요구를 무시한데다 경찰차가 집회를 위해 모인 광부노동자 중 일부를 치고 달아난 것은 '80년 4월 사북항쟁'의 불씨를 당겼다.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우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큐멘터리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료에 근거해, 이 사건이 '집단난동'이 아닌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광부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항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2면에서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실시됐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성명·연령 및 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보호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린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한다. 반면, 신상공개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은아)

- 1. 청소년 성보호 관계 법령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
-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
 - 신상공개제는 합헌임 (황성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제45호 2002/3·4)
 -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같은 책)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입장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문제가 가십거리 이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의원 김홍신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과 '호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성전환자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지닌 자를 말한다. 국회 입법정보지원과에 따르면 국내 성전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며, 지금까지 3백여 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여전히 수술 이전의 성이다. 이에 따라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수 없고 상속권 등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노동조차 할 수 없다.

가족형성·정성적 노동 등에 현 호적 걸림돌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여성을 '2'로, 남성을 '1'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취업시험에 응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성전환자의 어려움을 전했다. 설사 취업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게 임 대표의 설명. 때문에 70·80년대 성전환자들은 파출부나 식당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상당수가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성매매를 하고 있다.

김홍신 의원실 김명신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성전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은 법무부, 대법원, 행정자치부에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으나, 모두 '관련 법률이 없으며 호적변경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소송결과는 담당판사에 따라 상이하며, 지금까지 호적변경이 받아들여진 예는 4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만들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나, 호적법 개정이나 △성전환수술 및 호적정정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나 △호적의 '정정'이나, '변경'이나 등의 논점이 남아있다. 또 성전환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비서관은 "그 동안 성전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본인들 스스로가 나서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김홍신 의원실은 종교계, 법조계, 의학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인권실천시민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참여연대, 여연, 여협 등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법안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 공청회를 열고, 적어도 7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신 의원실 김학준 보좌관은 "(성전환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지만 현재 강하게 반대하는 곳이 없어서 올해 국회통과는 반반으로 본다"고 입법전망을 밝혔다.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기독교계가 유일하다. 유럽계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대한변협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명신 비서관은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이 법

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법안추진의 의의를 말했다. 국제적으로는 스웨덴이 72년, 독일이 80년, 이탈리아가 82년, 네덜란드가 85년, 터키가 88년에 성전환자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15개 주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출생기록부상 성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범용)

(⇒'사북항쟁...'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이어 항쟁 나흘째인 24일 이들은 군부와 △어용노조 지부장 사퇴 △임금인상 등 11개 항에 합의하고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군부는 6월 5일 계부터 마구잡이로 광부노동자들 및 주민들을 연행했고, 당시 택시기사였던 이희대 씨는 "광부를 검거하는 데 동원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81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폭도란 꼬리표, 이제 지워달라!”

“폭도”, ‘난동’이란 꼬리표 때문에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았다. 당시 이른바 ‘사북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년형을 살았던 신경 씨는 6일 말을 토해냈다.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일이었다. 갖은 고문당하면서 형을 살고 나니 가정이 엉망이 됐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지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숨어살았다. 폭도란 단어는 이제 지워줬으면 좋겠다.” 신경 씨 등 사북항쟁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그중 조행웅 씨는 오랜동안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이미 지난 해 12월 사망하고야 말았다.

광부노동자 출신으로서 현재 강원도도의원인 성희직 씨는 “인간 이하의 대접에 대해 몸을 던져 싸웠던 사북노동자 항쟁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사북노동자 항쟁은 계엄령 하에서 이후 노동자 투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서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6일(목)

제 21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월드컵시설 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차관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차관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부당노동행위 중단 △지엠(GM)의 경영간섭 중단 등을 요구하며 6일 현재 총파업 179일째를 맞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를 적용해, 대우차관이 신고한 '대우자동차판매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13일 오전 10시, 경기장 남문 맞은편 인도, 참석예상인원 5백명)를 불허했다. 집시법 제5조 1항 2호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

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 대우차관노조가 힐튼호텔 컨벤션B홀에서 개최 예정이던 대우차매각 본조약식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호텔내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행사장을 점거한 전례를 집회금지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관련 경기장·숙소·연습장 주변에 집회신고한 것은 월드컵행사 관련자에 대해 집단적 폭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마포경찰서의 주장이다.

과거전력 이유, 집회금지 못한다

하지만 전병덕 위원장은 "당시 우리 주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 호텔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난동을 부린 것처럼 매도하는 경찰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또 "호텔 밖에 집회신고를 미리 다 내놨는데도 경찰은 호텔 정문을 가로막고 (우리들) 무력으로 연행하고 두드려 찼다"며 오히려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과거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관례 또한 존재한다. 지난 95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개최하려 했을 때, 경찰은 '위 집회 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며 금지통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총련이 종전의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부를 판단한 후 불허의 근거를 찾는다"고 자의적인 법 운용을 지적했다. 불허의 근거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주요도로·주거지역 집회금지, 중복신고시 집회금지 조항과 함께 집시법 제5조 1항 2호

권 변호사는 또 대우차관노조의 집회불허 건과 관련 '월드컵시설 주변 특별치안구역 설치·운영 지침'도 한몫을 했을 거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월드컵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선수단 숙소 주변 및 보조경기장 반경 6백미터 이내 지역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집회 및 시위를 일절 불허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마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정보과 관계자는 5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경기장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는 집회를 불허한다는 서울시 지침도 대우차관노조의 집회를 불허한 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의 정문에서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대우차관노조 부산지부 손민웅 사무장이 경찰차에 불법연행돼 약 30분간 감금당한 사건도 있었다. 손 사무장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장 등 5명 정도가 몰려와 닭장차(전경차)로 끌고 갔다"며, "차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미국 사람도 묵고 있는 데 (시위장소를) 옮기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범용)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범죄'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창조)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복을 묻다>

제6회 인권영화제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80년 4월 사복항쟁을 다룬 이미영 감독의 <먼지, 사복을 묻다>를 선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지난 99년부터 상영되는 한국영화 중 1편을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선정해 격려해 왔다.

5일 저녁 6시 반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인권영화제 총감독 서준식 씨는 심사평에서 <“먼지, 사복을 묻다”는 80년 4월에 일어났던 ‘사복항쟁’의 진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다큐멘터리”라며, “이 작품은 당시 사복탄광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그에 대한 항쟁의 성격을 조망함으로써 과거 ‘불순분자의 사주’를 받은 ‘광부들의 집단노동’으로 일반에게 인식됐던 ‘사복항쟁’이 정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획을 그었다”고 인권영화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총감독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복 주민에 대한 당시 군부 및 경찰의 몹서리쳐지는 고문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의 치열한 참여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장 및 피해자들과 철저히 밀착하려는 감독의 진지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또 “당시 진압에 종사했던 군·경 내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 추적도 만만치 않은 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도 인권영화상 선정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서 총감독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복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의 실상을 밝혀낸 이미영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사복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당시 관련자들이 어서 ‘폭도’란 꼬리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작품을 연출한 이미영 감독은 “인권영화상 수상소식에 탄광 아저씨,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사복항쟁의 역사적 진실이 규명되고 탄광 아저씨, 아줌마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분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관련자들을 매개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인권영화제 심사에는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을 비롯해, 이승훈 교육방송 피디, 이충지 중앙대학교 영화과 교수 등 인권영화제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인권영화상 시상에 앞서, 인권영화제 내내 거의 매일 상영장을 찾았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으로 지속적인 실시 △가해자에 대한 특별 관리제도 시행 △지역단위 학부모 및 관련단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초범이나 단순범죄자인 경우 신상공개와 교육 및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자는 신상공개 뿐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선부론 논란은 삼가주길 당부하며 신상공개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황성기 교수는 현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항목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성범죄자 등록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미국 각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열성’ 관객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폐막식에서 마련됐다. 정은미 씨는 “사람들이 왜 울부짖는지, 분노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인권영화제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말했다. 박하순 씨는 ‘전쟁과 인권’이란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와 관련, “아프간·이라크·콜롬비아 등 최근의 전쟁들은 석유지배 내지 신자유주의 확산 전략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전쟁의 구조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엔 두 곳의 상영장에서 연인원 5천여 명의 관객들이 인권영화제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영]

변용재 변호사는 ‘알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인 성범죄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의 부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교사, 부모 등의 주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공개대상자가 한 동네 사람일 경우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그리고 △고용주가 취업신청자에 대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여부를 알고 싶거나 △국가가 판단할 때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동네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등으로 세분해 공개수준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현황과 구조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황교수는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이 미국사회의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의 주장은 시민 상호간의 일상적 감시,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아쉬움을 남겼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8일(토)

제 21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사건은 ○병원 7102호(신경외과 6인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4명의 환자가 올 2~3월 MRSA, VRE라는 ‘수퍼박테리아’에 집단적으로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병원은 이들 환자와 가족들에게 처음엔 그냥 염증 정도로만 이야기했다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져 가족들이 따지자, 그제서야 MRSA와 VRE에 감염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MRSA(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와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에 감염되면 고열·구토·설사 등을 수반하며, 박테리아가 혈액을 침범해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패혈증이나 혈액 자체를 썩게 만드는 균혈증으로 악화된다. 이들 균은 거의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감염 후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

죽음의 병실, 7102호

그런데 감염되기까지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이 VRE에 감염된 감모 씨를 제 때 격리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7102호에 있던 다른 환자들 모두가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즉 ‘수퍼 박테리아’에 대한 병원 쪽의 단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의 원인이라는 것. 실제 ○병원은 올 1월 9일 당시 7101호에 있던 강씨가 VRE에 감염된 사실을 처음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일만에 1인실로 격리시켰다. 강씨는 여기서 2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6일 7102호로 옮겨졌으며, 일주일 후인 2월 2일 다시 고열과 설사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달 후인 3월 15일에 다시 1인실로 격리됐다.

결과적으로 강씨가 7102호에서 치료 받는 동안,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세 환자들 모두가 MRSA와 VRE에 감염

된 셈이 됐다. 그렇기에 병원 측은 급기야 7102호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글자 그대로 7102호는 ‘죽음을 부르는 병실’이었다.

병원감염 관리체계 없어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 2면으로 이어짐)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이념대결과 전쟁, 독재와 폭압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살아왔기에 우리에게겐 유독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이 많다. 1948년 ‘여순반란’ ‘제주 4·3폭동’에서부터, 79년 ‘부마사태’, 80년 ‘광주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폭동’의 기억들은 우리 현대사의 시공을 가로지른다. 그 중엔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같이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받고 역사적 의의를 복원한 사건도 있지만, 여전히 ‘폭동’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사건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0년 봄의 ‘사복사태’다.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가 붕괴하면서, 새 질서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분출하던 80년 4월. 강원도 사복의 탄광노동자들은 비인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봉기의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계엄 아래 언론의 취재마저 통제되면서 사복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광부들의 항쟁은 ‘집단노동’으로 규정된 채 바깥 세상에 전해졌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르도록 사태의 진실은 묻혀져 왔다.

그런데 ‘사태’ 직후 겪었던 가혹한 고문과 상처로 인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사태’의 주역들이 최근 들어 비로소 증언을 시작했고,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낸 끝에 80년 사복을 ‘항쟁’으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증언과 사료에 따르면, 사복 광부들의 투쟁은 노동자를 착취해 온 회사와 어용노조뿐 아니라, 착취구조를 보장하고 비호했던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항쟁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제 ‘사복사태’ 또한 정당한 역사적 재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복항쟁이 지금껏 외면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데는 ‘백’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광부들이 그 주체였다는 사실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십수년간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일 것이다. 동시대에 발생했던 부마사태나 광주사태 모두 민주화항쟁으로서 새로이 자리매김된 것에 비할 때, 유독 사복사태에만 ‘폭동’의 오명을 남겨두는 것은 분명 불공평한 일이다. 인권의 회복을 위해 폭압적 권력에 저항했다는 본질에 있어서 만큼은 사복과 광주, 사복과 부산이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복을 더 이상 변방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광산노동자들의 투쟁이 갖는 정당한 의의를 복원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폭도’의 낙인을 지워내는 일, 그리고 사복항쟁을 우리 민주화와 인권운동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더 이상 방지할 일이 아니다.

(→ 1면 '병원감염' 기사에서 이어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내성이 강한 병원감염이 출현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MRSA와 VRE다.

○병원에서는 MRSA에 감염된 자가 이미 10여 명이고, 이 중 사망에 이른 사람도 2명이나 된다. MRSA나 VRE에 감염된 환자는 환자 이름표에 감염된 사실이 적시된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MRSA에 감염된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다"며, "하지만 환자들 스스로도 MRSA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송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감염 건수에 대해 "미국만 해도 한해 6만명이 넘게 보고된다"며, "한국에서는 한 병원당 1백~2백건 정도로 한해 4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체계가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약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 △병원감염에 대한 국가 전체의 관리체계가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약 등 서비스가 제공된 개수에 비해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인의협 우석균 정책실장은 "병원 측이 병원감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

가가 병원의 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병원감염 수치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만 해도 병원감염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국가에 배상책임 물어

항생제 내성균 격리지침에 따르면, MRSA와 VRE가 검출됐을 때 담당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격리해야 하며, 이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은 제때 격리하지도 않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병원감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환자들은 ○병원의 관할기관인 양천보건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천보건소는 ○병원의 입장만 두둔할 뿐, MRSA와 VRE 감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하여 환자들은 지난 5월 15일 ○병원을 상대로 이번 의료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동시에 "병원내 감염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나 행정지도감독을 하지 않

고 방치해 이로 인한 사망, 식물인간 상태 등을 반복 확대"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의 보복성 퇴원압력

하지만 ○병원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에 대해 오히려 '보복성' 퇴원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외과 김모 교수는 한 환자의 아들인 박모 씨에게 "병원이 소송까지 걸렀는데, (당신들은) 계속 치료하고 싶냐"며, "병원을 옮기든지, 퇴원을 하든지..." 선택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 환자들의 항의에 따라 MRSA 감염 후 청구되지 않던 치료비가 최근 다시 청구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환자들 입장에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며 병원 쪽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신현호 변호사도 "병원감염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며, "병원감염에 대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범용)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지난 3일 경북지노위(심판위원장 박중걸 공익위원)는 이서중고 이모 교사 등의 해임을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 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명령했다. 전교조 정승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분회활동 또한 합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 교사 등은 재단승인 반대운동, 전교조 활동 등을 벌였다가,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개입해온 재단으로부터 올해 2월 복종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바 있다. (범용)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1일(화)
제 21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10일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고전동록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해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뇌조리에 위치한 미군 부대 캠프 하우스 인근 공사장에서 미군제2사단 공병여단이 관리하는 2만2천9백 볼트 고압선에 감전, 청력을 잃고 양팔을 절단할 정도로 큰 화상을 입은 전 씨는 사고 발생 11개월 여만인 6일 낮 일산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전 씨는 5일 저녁 갑자기 숨을 멈춘 후 산소마스크에 의지한 채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10일 아침 7시 전 씨의 시신이 안치됐던 일산병원에서 발인을 마친 장례행렬은 미 대사관 앞에서 노제를 지내기 위해 서울 집회를 시도했으나, 이는 전경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전 씨의 가족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대신 일산병원, 전 씨의 집, 미군 제2사단기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이후 벽제화장터로 향했다.

군 측은 전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6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장례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지난 해 11월 27일 전 씨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군이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고,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울지법은 "국가는 전 씨에게 임시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치료비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주한미군은 건물 증축 시 고압전선과 건물 간에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단전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357호에서 열린다. 한편, 10일 저녁 장례위원회의 이소희 집행위원은 "미군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배상을 위해 계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가족은 미 2사단 공병대장 등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이주영)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에이즈 검사비의 국고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에이즈 관련 자문회의를 처음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국립보건원은 10일 오후 2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작년까지 'HIV/AIDS 관리지침'의 지급규정에는 '에이즈 치료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2년 HIV/AIDS 관리지침'에서 위 내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난달 1일부터 에이즈 검사비의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HIV/AIDS 감염인 모임 '러브포원'(Love4one)의 박광서 씨는 "지원방법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에이즈 검사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며 자문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국립보건원 방역과 담당 사무관은 "오늘 자문회의는 우리가 (에이즈 검사비를) 지원중단한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도였다"며 자문회의의 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앞서 이날 낮 1시30분경 국립보건원 앞에서 러브포원, 동성애자인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집회를 열고 △에이즈 검사비용 지원중단 철회 △에이즈 검사 및 치료비용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인은 현실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생계보장과 치료 및 검사비용 지원이 없으면 ...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인들과 관련 사회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재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범용)

○ 이우감의 인권이야기 ○ 창해와 일남이

나는 천주교 신부이다. 그렇지만 난 동성애에 대해 찬성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편에 찬성하는 편이다. 사실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는 오늘날만의 '이슈'는 아니다. '성서'에 기록된 역사로만 따져도 3천년 이상 미뤄져 왔던 과제다. 내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후천적 욕망을 호소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하느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였다. 그렇다. 그런 면에서 나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언젠간 바뀔 거라 생각한다. 물론 신부가 동성애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소위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 쉽기도 하다. 이미 동성애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더 말하기 어려운 문제는 일상적인 문제다. 말하자면 '가난'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자거나 함께 하자는 이야기는 3천년이 아니라 5천년이상 묵은 문제다. 굳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에 속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 '가난'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웬지 촌스럽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수없이 많은 '정치적 약속'들이 넘쳐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그 '반짝 관심'은 하늘의 무지개 같을 뿐 여전히 실제적인 가난으로 한숨을 쉬는 이들은 넘쳐나고 있다. 지금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사실 '잊혀진' 주제처럼 여겨진다.

가끔 우리동네 일남이와 창해 같은 아이들이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 이 두 형제는 탄광을 다니다 몸을 다친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그 뒤 가출해 행방을 감춘 어머니, 그리고 생계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할머니를 둔 '전형적인' 탄광촌 아이들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일남이와 창해, 보란듯이 멋진 모범 청소년이 되면 좋겠지만 미안하게도 폭행과 절도로 둘 다 이미 한차례씩 '벌'을 달고 있다. 내일도 창해는 지난 1월 오토바이를 훔쳐 탄 죄로 재판을 받으러 춘천까지 가야하고 난 그 보호자로 동행해 탄원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 그러나 난 도무지 창해를 나무라지 못하고 있다. 창해가 겪는 그 죄의식과 처벌과 고통이 분명 '창해'라고 하는 한 아이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 천년 입에 떠돌아온 '가난'이라는 문제가 촌스러워진 오늘,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오늘의 세상이 '창해'를 버려두고 심판하고 고통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문제, 양심적인 군대 징집 거부 문제, 아니 혹은 그 이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 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주제들 뒤로 자꾸 자꾸 밀려나는 창해와 일남이 같은 '가난한 이들', 이제는 시들해지고 촌스러워진 '가난'이라는 묵은 화두를 막상 앞에 두고 나면 속상해진다.

(이우감 씨는 고한성당의 주임 신부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1. 집회 금지되는 월드컵 왕국**
미국 선수단 숙소인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하던 대우자판 노동자 30분간 전경차에 감금당해 (6.3) / 대우자판노조에서 월드컵 시설 주변 67곳에 내 집회신고, 경찰에 의해 모두 금지당한 사실 밝혀져 (6.6)
- 2. 미군기지 고압선 피해자, 끝내 사망**
2000년 7월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됐던 전동록 씨 사망 (6.6) → 전국연합·민주노동당·한총련 등, 고 전동록 씨 사망 관련 주한미군 규탄집회 (6.8) / 고 전동록 씨 장례식... '주한미군의 사과와 배상' 요구 (6.10)
- 3. 인터넷 검열, 계속 한다던**
정통윤의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로 폐쇄됐던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임시거울 홈페이지 열어 검열에 항의 (6.3)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6.8)
- 4. 노동자는 괴롭다!**
'직권중재 제도 철폐하고 병원파업 대화로 해결하라' 범국민 1천인 선언 (6.7) / 시그네틱스 조합원, 파주이전 약속 이행 회사에 요구하며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6.10)
- 5. 밝혀야 할 진실, 바로 서야 할 정의**
검찰,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관련 전안기부장 장제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 (6.5) / <먼지, 사복을 묻다>, 인권영화상 선정... '사복항쟁' 진실규명 재촉 (6.5)
- 6. '자유의 여신상'이 부끄럽지도 않나?**
미 정부, 입국시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외국 방문자의 범위 확대 계획... 미 법무부, '배경 의심스러운 방문자 누구든지 이 규정 적용' (6.5)
- 7. 기탁 :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와 10기 한총련 의장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 (6.4) / ○병원, 병원에서 '수퍼 박테리아'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낸 후 '보복성' 퇴원 압력 확인 (6.7) / 교육부, '내년부터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정규수업으로 인정' 발표 (6.9) / 에이즈 검사와 지원중단 철회 촉구 집회 (6.10) / 지문날인 반대자, 참정권 보장 요구 직접행동 (6.10~13) / 동성애자 해방추진, 퀴어문화제 '무지개2002' (6.4~8)**

◎ 중요판결 및 결정

경북지노위, 전교조 교사들의 해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임으로 인정한 첫 결정... 해임교사 원직복직시키고 사과문 게시 명령 (6.3) / 대전지법, 공립학교 집단 파들림, 자치단체도 배상책임져야 (6.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2일(수)

제 21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6·13, 남의 잔치”...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아래 참정권연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장애인·재소자·재외국민·지문날인거부자·18-19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제히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대체신분증' 발급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동사무소에서 대체신분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자들 가운데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올 경우 투표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관 사항이 아니며 대체신분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해, 문화계 혁신시민연대의 정인선 씨는 "만 18-19세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

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무관심한 것이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참정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 소급입법엔 신중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오종렬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가 테러방지법 때처럼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때 청문회도 하고 의견서도 냈다"며,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린 사람을 특별법으로 풀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며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신중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공소시효 문제는 파렴치한 국가범죄를 저지르고도 뭇뭇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가인권위의 적극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국가인권위가 국회의 검토요청이 오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권단체들은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별법'을 입법 청원했고, 이주영 의원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국 김창국 위원장은 "소급효와 국가범죄의 범위 문제가 쟁점이겠지만,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월드컵 이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범용)

시그네틱스 노동자, 집단 단식농성

노조, 파주이전 약속 이행 요구 ... 회사는 꿈쩍 안해

희망자 모두의 파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320여일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어젠 밤늦도록 비가 와서 추웠어요. 하지만 배고픈 건 아직 참을 만해요." 11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만난 조합원 김소영 씨는 까칠한 얼굴로 말했다. 10일 밤엔 성당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지만, 그 곳에도 여전히 비가 들이치긴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래도 1년 전 같이 싸움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돼요." 이번 단식 농성 참가자의 숫자는 64명. 임신부나 산후 휴가 중인 사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등 30명 남짓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합원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김 씨는 "다들, 회사가 너무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 수 있냐고 얘기하죠."라며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1년 가까운 투쟁 끝에 가까스로 지난 1일 영풍그룹 관계자를 노조와의 면담에 응하게 했지만, 회사 측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면담에서 영풍그룹 한두훈 부사장은 '시그네틱스가 알아서 잘 풀어갈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시그네틱스의 양수제 사장은 '파주 이전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노조의 임은옥 교육선전국장은 전했다.

98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들은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등 고통을 분담했고 서울공장을 팔아 빚을 갚으면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회사측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2000년에 시그네틱스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이같은 약속을 계속 나몰라라 해 왔다.

지난 해 7월 23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겪은 시련은 노조간부들의 구속기소, 조합원 91명 임금 가압류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달 29일부터 이틀간의 한강대교 고공시위 이후, 임영숙 부지회장과 윤미례 사무국장 역시

구속됐다.

임은옥 교선국장은 "조합원들은 11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나마 2월 내지 3월부터 일당 만오천원 정도로 받던 실업급여도 얼마 안가 끊길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때 회사측이 강제로 철거했던 어린이집은 다시 복구됐으나, 보육교사들은 현재 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만 1세에서 6세까지의 노동자들의 어린 자녀 약 24명을 돌보고 있다.

"살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 보장하려고 싸우는데, 밥 안 먹고 농성하는 건 모순인 것 같죠?" 임 교선국장은 그만큼 절박하다고 했다. 회사 측은 꿈쩍

도 안 하니,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다. "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파주공장 이전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 고용 안정되고..."라고 말하는 조합원 김 씨의 얼굴에 비 갠 후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었다. (이주영)

(=>1면 '...투표배제 계층 많아' 기사 이어짐)

회사가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등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장애우 유권자단'은 투표참여 외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세 현장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홍보물 제작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창조)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목과 앉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거칠고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 눈빛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미 우리의 신분(천주교 수녀)을 알고서도 제차 묻는 수사관들의 말투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유치장의 화장실은 낮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철창 밖의 감시자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다." 민영미, 최승경 수녀가 지난 5월 14일 소파개정을 위한 집회도중 연행돼 중앙경찰서에서 겪은 일이다.

"구로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성 조합원에게 마치 큰 죄를 진 사람처럼 크게 욕박지르며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자경찰을 불러 온 몸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기며 양팔을 벌리고 몸 수색을 철저히 하고 나서 생리종인 여성을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적으로 시켜 참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았다." 4월 2일 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구로경찰서에서 겪은 일이다.

이렇듯 최근 집회에 공권력이 남용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들의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고발하며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운동이 종교·여성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11일 11시 천주교여성공동체, 시그네틱스 노동조합, 여성민우회 등 24개 종교·사회·여성단체들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여성인권 짓밟은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교여성공동체 신미영 씨는 "최근 여성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오남용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집회 참석자들을 강제로 연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반인도적이고 굴욕적으로 대우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몸수색의 경우,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를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종로·구로·종암·의정부 경찰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앞으로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 관련, △고발운동 △책임자 징계조치 △제도적 장치와 법령 정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3일(목)

제 21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병원 노동자들이 직권중재제도의 울가미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어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직권중재제도 때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이는 곧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노조 간부들은 구속, 가압류, 고소·고발 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차 위원장은 "병원 경영진들이 이같은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12일로 파업 21일째를 맞은 가톨릭 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이다. 의료원 측은 불성실한 교섭으로 노조의 파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파업 돌입후엔 '불법파업'을 빌미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차 위원장은 말한다. 애초 노조가 요구했던 것은 △임금 인상 △공정한 인사승진기준 마련 △사학연금의 본인부담금 축소 △파업과

관련한 불이익 및 징계금지. 그러나 의료원 측은 파업이 예고된 23일 새벽까지 아무런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

다가, 새벽 5시 반쯤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본교섭을 못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나아가 파업 첫날 아침부터 거의 매일 같이 "어떠한 파업도 불법이며 근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해 인사상·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노조원들을 협박했다. (=>2면으로 이어짐)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시된 채, 소위 우등학생이라 불리는 소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 인권법적 해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 헌법·교육법)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확실적 평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유보다 평등을 강조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는 "학교선택의 본질을 교육선택권으로 본다면 개별적인 학교의 선택보다는 각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 선택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자질에 따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상화 교수(건국대 법학) 또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학벌구조 속에서 고교 비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계층·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하고, "교육의 목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고교평준화를 찬성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개선하고 일류·이류·삼류로 나뉘어져 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 등에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됐다. 이후 일부지역에서 평준화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2000년에는 평준화 정책이 해제됐던 군산과 이리에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정책이 재도입됐고, 평준화가 해제된 춘천이나 비평준화 지역인 포항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에서도 다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전교조는 "평준화 제도가 해제되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무한입시경쟁이 이루어지고 사교육이 더욱 팽창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교육 문제의 본질은 학력, 학벌 구조와 확립적 입시교육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영원)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지난해 위헌으로 확인된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및 게임물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등급분류 보류제도'란 사전에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급분류 보류가 계속되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된다.

이는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아래 영등위)가 발표한 '온라인 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에 대해 정보통신·문화단체들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강화대책'은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이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아래 음비법) 제20조를 근거로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음비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비디오물·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해 영등위의 분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영등위는 온라인게임물 외에 분리형게임물과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등급분류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음비법에는 영등위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0조 4항). 심지어 도박, 경마 등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불가 결정까지도 할 수 있게 했다(20조 3항). 또 등급을 받지 않고 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

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못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이상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다.

특히 등급분류 보류제도는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대해 "등급분류보류의 횡수제한이 설정

또 의료원 측은 약간의 임금인상 외 사화연금이나 인사 관련 문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던니 파업 나흘째부터는 △노노동·무임금 △노조간부 징계 등을 덧붙이며 대화의 싹을 잘라버렸다.

차 위원장은 "이는 대부분 다른 병원들이 파업 전날 밤샘 협상을 통해 원만한 노사협상 타결을 이룬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보건 의료 산업노조에 따르면, 90여 개 사업장 중 가톨릭 중앙의료원 등 6개 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이 파업 전날 밤 내지는 파업 이틀 내에 타결을 봤다.

병원 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27명이 고소·고발당해 소환장이 발부됐다. 의료원 측은 '의료원 소식'이란 유인물을 통해 "외부 집행부의 주도로 우리 병원과 일터가 파괴되고 있다. 그들을 몰아내고 현업으로 복귀하라"며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파업을 불순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처럼 매도했다.

또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파업 이탈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강남성모병원노조의 이숙희 상황실장은 혀를 내둘렀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아버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조합원의 조카가 산부인과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는 등 사

되어 있지 않아 등급분류보류기간의 상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겉으로는 '보류'의 형식을 띄지만 영등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무한정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금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등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때 인터넷 공대위는 '사전등급분류제도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고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온라인게임물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범용]

(=>1면 '병원노동자' 기사에서 이어짐)

레는 끊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업무에 복귀한 사람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지난 10일엔 72명의 조합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됐고,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료원 측은 공권력 투입까지 경찰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차 위원장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사람과 평화 등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전근대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위원장은 "지금로서는 노조 탄압에 저항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구속 등 희생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직권중재 회부시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올해 초 구속 기소된 가스노조 박상욱 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이것이 병원노조의 파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법원은 "조정기간은 분쟁을 사전 조정해 쟁의발생을 막으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쟁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닌 만큼 '직권중재 회부시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

선거 관계로 6월 14일자는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5일(토)

제 21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은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최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사랑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이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아침 10시 45분 경 경기도 양주군 56번 지방도에서 미군 장갑차가 갓길 위를 걸어가던 신모 양 등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소속된 미2사단공병대(캠프하우즈)는 지난해 발생한 고전동록 씨 고압선 감전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부대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는 너비 3m67cm의 장갑차가 3m40cm 너비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면서 갓길 위를 걸어가던 신 양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법적근절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피할 공간조차 없는 좁은 길을 미군 탱크와 장갑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떠한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일어난 필연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또 운동본부 고유경 간사는 "사람도 함께 다니는 길이란 점에 대한 주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보통 군사훈련은 사전에 철저한 지형조사 등을 거치고 탱크 등의 군용 차량은 차폭이 일반 차량보다 넓은 만큼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는 특별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③항은 "차의 너비가 ... 차로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되"며 "다만 관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동두천·과주 등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에선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미군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과연 미군 측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매년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는 400건이 넘는다. 올해 3월 미군 탱크가 길가의 농기계를 부수고 지나간 일이 있으며 앞서 지난해 11월엔 경기도 포천군 87번 국도에서 견인 중이던 미2사단 소속 C-55탱크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트럭과 승용차 등 3대를 타고 넘어 9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미군당국은 이례적으로 사건 당일 미8군사령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으며 14일 오후 1시께 미2사단 참모장 등이 병원 영안실을 방문했다. 또한 13일 한국 정부는 한미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2면에서 계속)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두 명의 귀중한 목숨이 어이없는 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군대에 의해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외면한 군대에 의해, 그것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외국 군대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되었다. 주한미군이 설치한 고압선에 감전돼 팔·다리를 절단한 채 1년 가까이 투병하던 전동록 씨가 한뼉한 삶을 마감한지 얼마 안돼서 일어난 일기에 우리의 탄식은 길고도 깊기만 하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긴급 구제마저도 구걸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소녀의 죽음은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고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하물며 다른 나라도 아닌 제 국가에게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론을 수습하는데 급급하는게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최대한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그늘 아래 숨어 국민들에게 '알아서 조심하라'고만 할 것인가? 미군당국에게 경고한다. 입만 열면 설교하는 인권과 평화를 이번만은 몸으로 보이길 바란다. 시민의 안전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면서도 여유롭기 그지없는 그대들의 안하무인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자유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두 어린 소녀와 그 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뚫" 책임회피 여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들의 피해사례가 올라져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사는 김강필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 상태다. 강필 씨는 지난 10일 동사무소를 방문,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투표시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붙인 증명서는 그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을 보여주며 발급을 거부했다. <본지 6월 4일자 참조>

하지만 강필 씨는 선거 당일 어떻게든 투표를 해 보고자 동사무소를 재차 방문, 주민등록표의 복사 혹은 대여를 요구했다. 그도 안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소까지 동행해 신원증명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으며, 거절사유나 확인서를 써 주지도 않았다. 결국 강필 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같은날 또 다른 지문날인 거부자인 김성민 씨는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울산 북구 양정동에 사는 성민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거담당 공무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담당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표를 투표소까지 가지고 와서 성민 씨의 신분확인을 해 준 것이다.

이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필 씨에게 알려졌다. 강필 씨는 이 내용을 인쇄해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다. 강필 씨는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를 보여주며 투표소까지 동행을 요구했다. 하

지만 그 직원은 '행정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강필 씨의 참정권은 끝내 보장받지 못했다.

한편, 홈페이지에는 울산 북구 양정동 이외에도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몇 건 더 올라와 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사는 이상우 씨는 옛 주민등록증으로, '울지마'라는 아이디어의 거부자는 기한이 만료된 여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새처럼'이란 아이디어의 거부자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미리 만들어와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해주었다고 밝혔다.

대체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과 백충엽 씨는 "직원들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동들을 한 것 같다"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위의 유효·무효 여부는 아직 따져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투표시 신원증명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뚫"이라며 여전히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현재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당했던 피해사례를 접수(finger@jinbo.net)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거부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데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사례들을 분류해 중앙선관위와 행자부의 혼선에서 벗어난 책임의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범용)

(⇒1면에서 이어짐)

대책회의를 연 후 "유족들에게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고 간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간사는 "미군의 공식사고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여론을 무마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사고 책임자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군 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파협정 아래서는 미군의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주영)

만화사랑방

이동수



찬미예수? 창피예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8일(화)

제 21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징벌 중이던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외부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배 씨의 자살이 "교도소 측의 과도한 징벌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압박과 모멸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발생한 죽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교도소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배 씨는 죽기 직전까지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중이었고,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배 씨가 지난 4월 타 수용자와 폭력을 주고받아 2개월의 '금지' 징벌을 받은 이후 또 다시 교도관을 폭행하고 사동을 청소하는 다른 수용자를 식기로 때려 각각 2개월씩 모두 4개월간의 금치가 추가돼 오는 10월까지 징벌이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구 사용은 배 씨가 수용자에게 식기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착용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6개월에 달하는 연속적인 징벌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또한 계구 사용 역시 소란을 억제하기보다 징벌용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정당국은 배 씨의 죽음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자살일

이 관행적으로 연속해서 금지 징벌을 주고 있다"며 "아무리 정당한 징벌처분이라 할지라도 연속해서 금치를 집행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금치는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된 위반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항정신성약품의 반입이나 술에 만취돼 있는 등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금지 기간 역시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 4주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집행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허용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도주나 중대한 물리적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만 45일이 넘지 않는 기간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금지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1일 1시간 있을 만큼 무서운 징벌인데, 교정당국

것이라는데 동조하면서도 "연속 징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도소측은 "도의상의 책임은 모르겠으나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징벌조치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지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의 외부교통이 완전히 차단됨은 물론 독서·운동·작업 등의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대해 과노현 방송대 법학교수는 "금치는 감옥 안의 감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무서운 징벌인데, 교정당국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을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문제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어 이만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온라인게임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계속 무관심한 게 업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영등위 게임을 비판했다. 반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옥성일 대표는 "(온라인게임의) 피케이(PK, Player Killing) 등은 청소년들을 전사로 키우고 있다"고 "청소년들은 게임산업의 희생양"이라며 심의기준의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박상우 영등위원은 "창작의 자유를 외부의 잣대로 막는 것은 부당하지"만, "창작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산업일 때는 다르다"며 사전심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은 △위헌관결을 받은 등급분류제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의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며 차별적인 잣대들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창작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검열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다. (범용)

○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중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택(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택(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이었으나, 실제 대송택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조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에 대해 진정했다. 그 결과 노동사무소는 '대송택(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내지 민법상 완전 도급으로 이를 시정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대한송유관공사는 '불법파견이라고 하니 더이상 못하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주)대송택과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TKP 노동자 89명 전원을 해고했다.

캐리어, 인사이트코리아(SK) 등 불법파견이 이뤄지던 사업장에서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늘 반복돼 온 이야기다. 불법을 고발한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해고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대한송유관공사와 같은 사용자업주는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다. 파견·용역형태(간접고용)의 노동은 단지 중간착취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 사용자인 사용자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를 눈감고 있다. 사용자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 한다.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들까지 정부와 사용자들의 사기행각에 공범을 자처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파견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니까 적정말라고, 불법파견은 엄단해야지 음 걱정마' 이렇게 사기쳐서 만든 근로자파견법 아닌가? 그렇다면 불법파견을 사용한 대한송유관공사와 같은 사용자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용자로서 전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원래 직접고용하는 것 외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불법으로 파견사용을 했으니, 적발되면 당연히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불법파견이 실질적으로 규제될 것이다. 저명한 그분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는 해괴한 방안을 들고 나오다니, 그건 사용자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이라는 당연한 해결책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송택(주) 노조와 함께 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들은 노조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노조가 괜한 진정을 해서 우리가 해고됐으니 너무 부당하다고.....' 노동3권에서 배제되고 생존권이 벼랑 끝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로 들린다.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1. 미군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해야!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고 전동록 씨, 장례 치러...미2사단 공병대장 등 관련 책임자 형사 고소 계획 (6.10) / 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 (6.1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 사고 재발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고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 (6.14)

2. 직권중재조항 왓,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지지 (6.10) /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 돌입 (6.10) →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계속 단식농성 (6.12) / 민주노총, "택시·병원노조 등 77곳 6만여명 파업 중" 집계 (6.11) / 성모병원 등 보건산업의료노조 파업 장기화...병원 측 직권중재조항 무기로 교섭 회피, 노조 간부 14명 체포영장 발부된 것으로 확인 (6.12)

3. 지문날인 거부하면 국민도 아닌가?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연대회의(준)', "노동자·장애인·재소자·재외국민·지문날인거부자·18-19세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요구 (6.11) /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거부자, 신원증명 안돼 투표권 행사 못해 (6.13)

4. 탈북의 물결...어디서부터 어떻게?
탈북자 9명,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와 한국행 요구 (6.11) / 중국정부, 모든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에 대해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중국쪽에 모두 넘길 것을 다시 공식 요구 (6.12) / 중국, 한국총영사관으로 들어간 탈북자 원아무개 씨 등 2명 강제로 풀어내 (6.13) / 탈북자 '강제연행' 한·중 공방 ... 정부는 중국에 재발방지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대사관서 요청했다' 주장 (6.14)

5. 비디오·게임물, '표현의 자유' 새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 "인터넷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 "등급분류 보류제 시행은 위험"이라는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에 제출 (6.11) → 영등위,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열어 (6/14)

6. 기타 : 국립보건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 열어...에이즈 감염인, 에이즈검사 및 치료비용 전액지원 촉구 (6.10) / 새만금지역 어민, 변산 해창산 채석 공사 반대 농성 벌이다 현대건설 직원으로부터 폭행 당해 (6.10)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소수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중심으로 비평준화 지지 논의 주 이뤄 실망 안겨 (6.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19일(수)

제 21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대학입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탈락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 씨는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2002학년도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한 후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탈락하자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구가톨릭대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에서 동점자들은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된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 수능종합등급 1등급인 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정씨는 나이가 탈락의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피진정기관인 대구가톨릭대는 '연소자는 연장자에 비해 사회적 경험과 수학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점자 발생시 연소자 우선합격 원칙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대학의 자율사항이며 △입시요강에 명시해 모든 응시생들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연소자가 연장자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가정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며, "전국대학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연소자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

더라도 ... 그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의 대학의 자율성은 평등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 이상 그 사전 공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노정환 씨는 "앞으로 각 대학은 입학시

험 등에서 연소자 우선이라는 기준 자체를 쉽게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자를 뽑는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진정인 정씨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가톨릭대 입학관리과의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어렵다"며 피해구제조치의 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행정사무관도 "입학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 자율권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총장이 자기 권한으로 (탈락자를) 입학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용)

클릭! 인권정보자료 · 직장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매뉴얼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펴낸 곳 : 서울여성노동조합(전화 365-6594) / 36쪽 / 2002년

1999년 창립한 서울여성노조는 그동안 상담해 온 성폭력·성희롱 사례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미덕은 그간 나온 단행본이나 자료집보다 일하는 여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여성노조는 직장내 성폭력을 "성적 자율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로 정의하며,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나 언동은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의 유형으로 △환경형: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 △조건형: 취업, 승진, 임금인상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보복형: 성적 언동이나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승진 탈락, 부당 인사 등 고용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 외 데이트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데이트 강요, 성적 서비스 요구, 스토킹,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습 교재로 활용하기 좋은 자료다. (최은아)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증가가 몇 년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적 시각은 18일 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주최한 「불안정노동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방향」 토론회와 앞서 7일 민변 등이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 관련 토론회에서 나타났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확대 및 복지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장기근속계약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근속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실제 일한 기간은 1년이 넘고 별일이 없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7일 토론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나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장기근속 계약직 역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야 한다.

또한 현재 노사정위는 기간제(계약직)·단시간·파견제·특수고용노동 등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기간제 고용'과 관련, 노사정위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진익 조직2국장은 18일 토론회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까지 계약직화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파견·용역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양성화시켜 간접고용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사정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을 계속 인정하는 전제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파견제의 본질적 속

성인 중간착취 및 인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사정위는 △'준근로자' 개념 도입 방안 △개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사회보험관련법 등 개별법의 적용 확장 방안 △노동3권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사무국장은 "준근로자' 개념 도입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차별이 정당화되는 노동자군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기업들은 노동법을 다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씨는 "전반적으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전제로 보호방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비정규직화(노동유연화)를 법제도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영)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조약 2차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지난 14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래 아동권조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조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5년마다 아동권리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94년에 최초 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권리 진전을 위한 정부 활동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되며, 유엔은 그러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했던 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부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아동권 조약의 홍보와 교육 노력의 부족 △아동관련 지표의 개발과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 현실에 대해 침묵한 반면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쳐, 아동 권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고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기초보건과 복지 등 8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실태보고와 민간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권조약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민간단체의 로라 버그만 씨는 이번 민간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며, 위원회가 오는 10월 9일 한국에 관한 회기 전 실무부와 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가 초청되며, 위원회가 2003년 1월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사항을 도출할 목적으로 열린다.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0일(목)

제 21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성명]

헌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벗어난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 △직원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공정 문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는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이해부족에서 벗어난 일로 폄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는 지금껏 어떠한 잘못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은 국무총리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답변을 하는가 하면, 위원회의 의사공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의사공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비공개하도록 되어있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울 뿐이다. 또한 직원채용의 불공정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채용에 있어, 인사자문기구규정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는 등 시종 메마른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답변 속에서 기존 국가기구 관료들의 고답적인 태도를 거듭 확인하게 될 뿐, 온 국민의 여망을 안고 3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 만들어진 새로운 국가기구의 모습을 감지할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름과 역할에 걸맞는 축복 대신 불신을 얻기에 이른 이유를 여전히 애써 외면하려는 인권위원회 관료들의 태도에 우리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정 과정을 한결같이 밀실에서 진행한 법무부에 대해 분노했던 우리는 법 제정 운동을 함께 했던 일부 민간단체 인사들이 인권위원회 창립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밀실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오늘날의 관료주의와 효율주의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임태되는 과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그렇게 태어난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린 자세로 가장 약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열망해 왔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의 이와 같은 열망에서 멀리 벗어나 관료주의적 독선에 빠져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거부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와 무관한 차원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을 묵묵히 벌여나갈 것을 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과 재력의 힘을 받고 인권단체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인권단체를 길들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인권운동가의 긍지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2002. 6. 19 인권운동사랑방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박해나 폭력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난처를 구하는 난민의 숫자는 전세계 2천2백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9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명. 그러나 그 중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단 한명 뿐이다.

2000년 10월 남편과 함께 한국정부에 난민신청 신청을 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D씨는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인이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돼 버렸다. 옷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의료든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이는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며 인권적 고려를 결여한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신청기한이란 임의적 요건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애초 60일에서 1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1년 기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는 시도가 있다"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난민신청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난민신청신청 접수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오랜 심사기간이 신청인들을 괴롭게 한다. 현재 난민신청신청에 대한 심사시간은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며, 길게는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김 간사는 "이것이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난민신청인

들에게 제공하는 물질지원 및 정책적 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청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좋은벗들'의 강여경 씨는 "숙소, 생활비, 의료, 일자리 및 교육 등 난민신청신청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것들은 많은데, 충분한 예산이 없어 적은 수의 신청인들에게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지원밖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래는 정부가 법·제도를 마련

해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입증 책임도 문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일반적인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당 난민신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장복희 교수는 "박해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박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다"며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면 심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출신국의 상황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 구금

19일 오후 1시 45분 경 서울동부지원 앞.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전투경찰대원들은 학생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움막 답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사람을 이렇게 막는 법이 어디 있냐"며 학생들이 격하게 항의했지만, 이종대 전투경찰대 중대장, 김수남 동부경찰서 경비과장 등 현장 지휘자들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따름이었다. 법원출입을 막는 경찰측의 입장은 "좁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한 학생들이 다시 법원으로 몰려왔고, 그들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부릴 것이 예상되므로 출입시킬 수 없다. 지금 모여 있는 것도 불법시위를 하는 것이다"는 것. 이날 학생들에 대한 출입통제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

10여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재판방청을 막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경찰에 떠밀린 끝에 원치 않던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한 사복형사는 "학생들을 계속 '고착'해두다가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라"는 지시를 무전기로 전달했다. '연행' 사유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 결국 재판을 방청하러 온 학생들을 노상구금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 그것을 빌미 삼아 '불법시위 개최'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시간 뒤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학생들은 경찰측에 "돌아가라 테니,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종대 전투경찰대 중대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답변할 책임이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태양씨의 변호인단과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학생들을 둘러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로부터 20여분 후 김수남 동부경찰서 경비과장이 메가폰을 들고 나타났다. "여러분을 둘러보낼 테니, 앞으로는 불법시위를 하지 마십시오..." 마치 선처를 베푸는 듯한 경찰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선 "도대체 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냐"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재판방청 기회를 앗아간 경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산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동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반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1일(금)

제 21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고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터미널 부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던 박모 씨는 그날 아침 인근 식당에서 장기투숙객 옥모 씨와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식사 후 여인숙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 아주머니와 시비가 붙었다. 싸움이 격해지자 옆에 있던 옥씨가 싸움을 말렸고, 이 과정에서 박씨에게 대드는 이웃집 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오산파출소 경찰들은 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파출소로 연행해 갔다.

뒤늦게 파출소로 간 박씨가 수갑을 차고 있는 옥씨를 보면서 사건은 더욱 악화됐다. 박씨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싸우는 틈에, 싸움을 말리지만 했던 옥씨가 수갑을 차고 연행된 줄 미처 몰랐던 것. 황당한 마음에 박씨는 "이 사람은 범죄자도, 사기꾼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며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에는 박씨마저 뒤로 수갑을 채우고 폭언까지 퍼부으며 박씨의 항의를 제압했다.

결국 박씨는 화성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마쳤지만, 그날 오후 파출소를 재차 방문해 자신의 억울함을 항의했다. 수갑이 채워지고 폭언을 듣고 폭행에 가까운 제압을 당한 일을 잡자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완력으로 박씨를 파출소 밖으로 끌어냈다.

하는 수 없이 여인숙으로 돌아온 박씨는 허벅지며 겨드랑이며 온몸에 피멍이 들었음을 발견했다. 파출소에서 경찰에 떠밀려 벽에 부딪힌 허리 부분도 쭈서오기 시작했다. 수갑이 채워졌던 손목 부근은 퉁퉁 부어 올랐다. 박씨는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에게는 경찰의 폭언에 의해 받은 상처가 더 컸다. "씨발년, 죽여버릴라!", "한번만 더 오면 죽인다"...

이에 대해 오산파출소 측은 "그 아주머니가 파출소에 와서도 상대방 아주머니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상대방 아주머니) 남편의 단추를 잡아 찢기도 했다"며 박씨의 항의를 '난동'으로 표현했다. 경찰의 폭언에 대해서도 "그

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또한 옥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의 목살을 잡고 반항하니, 현행범 체포 고지도 하고 미란다 원칙도 이야기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씨는 "파출소에서는 옥씨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했을 뿐 (이웃집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 남편은 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옥씨 또한 "경찰이 오자마자 수갑을 채웠고 수갑채울 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박씨는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하소연해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화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의 형식적인 조사뿐이었다. 화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박씨 등 피해 당사자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은 채 오산파출소 쪽에서 제출한 경위서를 근거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경찰서 내에서 경찰에 의해 피해를 당할 때, (⇒ 2면으로 이어짐)

만화사랑방

이동수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실병원에 예산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사제도는 교직원인 체격검사를 담당하고 위촉된 학교의사가 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검사의 경우 담당할 의사를 동원하기 어려워 전교생을 검진하지 못하고 담임교사 등을 통해 지병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만 의사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현실을 두고 학교 앞편에서 쏟아졌던 비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응답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을 초등학교 1년생, 4년생, 중학교 1년생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다.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진 체질검사를 3년에 한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1백억원 이상의 예산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지난 5월 반대의 견서를 내 '학교보건법 개정의 근거가 된 보고서는 간기능·혈당·콜레스테롤·심전도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위 항목의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고, 더군다나 아동이 어른들과 같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체검사는 의료접근성이 약했던 51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우선 존속시킬지 여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현 제도에 대한 평가 없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5백억이 넘는 예산을 사적인 의료기관에게 넘겨주겠다는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국립보건원도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집단검진을

질병 발생률이 가장 낮고 건강한 집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조명연씨는 '관계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이 없다'며 '국립보건원이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아직 검진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법령 정비만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이미 사전 공청회는 끝났으며 의료단체의 의견청취가 남아 있으나 관련 사회단체와의 협의일정은 없는 상태.

이외에 종합검진 후 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내실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내 빈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로건강복지센터의 박혜경 대표는 '종합검진체제의 도입은 환영할만하지만 검진 후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종합건강지원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의 우옥영 보건위원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지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나 무엇보다 보건교육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인식시키고 검진 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지원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1면 '경찰' 기사에서 이어짐)
권한남용 논란이 경찰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범용]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보건의료단체 일단 환영, "빠른 시일 내 보험적용해야"

국립보건원이 올 7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정부가 바이러스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에이즈 감염인들이 1회 20만원 선에 이르는 적지 않은 비용을 매번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에 검사비용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보시 5월 18일자, 6월 11일자 참조>

정부가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전남 여수에서 한 여성에 이즈 감염인이 성매매를 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립보건원의 오운성 사무관은 "24일 각 시·도의 에이즈 관련 의료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에이즈 감염인들이 직접 국립보건원을 찾지 않고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또 "바이러스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언제쯤 확정될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되리라 본다"고만 답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염병 관련 진료비·검사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된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에이즈 감염인들의 모임인 'LoveOne(러브원)'의 박광서 씨는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립보건원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는 건 다행이나, 체혈 및 검사 결과 통보 등의 과정에서 일선 진료기관들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해진 씨는 "바이러스 검사비용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시일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2일(토)

제 21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한일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간 전후 피해보상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적인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일협정 당시 양국의 정확한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던지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군인동원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문서 공개 촉구를 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0월 당시 이정빈 외교교통상부 장관은 "한일 양국 정부는 파징병·징용자의 배상 등 양국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일단락 지었다"면서도, "다만, 한일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제판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청구권 행사는 한일협정에 의해 불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일본 재판부는 개인청구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일협정으로) 한국정부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보호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본국이 외교사절을 통해 상대국에게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이런 논리로 지금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70여건의 재판과정에서 한일협정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김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한국정부의 잘못인지 일본정부의 잘못인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일협정 외교문서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면에서 계속)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상업화된 '섹스'와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혹은 독재정권의 대중에 대한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면서 대중의 탈정치화를 대규모로 진행시켜왔다. 지금 우리는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수만 명 단위로 전국 주요 거리를 메우며 열광하는 빨간 티셔츠의 물결은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노동자·노점상의 생존권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우리는 '붉은 악마' 현상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붉은 악마' 현상을 두고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의 망발이 그칠 줄을 모른다.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니, '6월항쟁에 나타난 민중 에너지의 재현'이라니,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과시했다는 따위 발언은 지식인의 진정한 소명을 벗어 던진 추악한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히 말하건대 '붉은 악마' 현상에는 넘실거리는 국가주의와 맹목적 애국심이 있을 뿐이다. 정의에 대한 열망이 아닌 승리에 대한 열광이 있을 뿐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과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이다. '붉은 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이다.

'붉은 악마' 현상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지배세력이든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대중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대중동원은 필수적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그 동원은 민주인사, 언론, 국민에 대한 강제와 공포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통치가 비판세력의 대규모 체제내화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 대중동원은 탄탄한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한 거대 매스컴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대 매체가 국민에게 국가주의를 부추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하겠는가?

16강 진출로 인한 경제적 부수효과가 1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코리아 에너지에 의한 '국민통합'의 효과까지 해서 선진국 진입이 눈앞에 있다고 법석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 속에 국가주의의 유희와 힘겹게 싸우면서 인권을 실현해 나가야 할 우리는 월드컵과 '붉은 악마'가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10년 이상 정체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더이상 부추기지 말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필승'이 아닌 '인권'이다.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재능교육 사측이 노조 활동의 관행을 트집잡으며 교섭을 지연 내지 거부해, 재능교육교사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이 위기에 처해있다.

21일은 노조와 사측 간의 8차 실무 교섭이 예정된 날이다. 그러나 노조 쪽 교섭위원들은 회사 정문 앞에서 가로막았다. 유득규 재능교사노조 부위원장장은 "사측은 '오늘 교섭은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날 노조의 집회와 노조 교섭위원들의 체결권 문제를 교섭 거부의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회사와 노조는 지난 달 24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화·금요일, 주2회 교섭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번번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교섭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조합비 및 간부 급여 가압류 철회 △부당해고 철회 △2002년 임금·단체협약 갱신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지난 해 노조의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동조합비와 노조 간부 13명의 급여 50%가 매달 가압류되고 있는 형편. 또 사측은 노조간부 한명이 회의로부터 걷은 회비를 조금 늦게 입금시킨 것을 공금횡령이라며 문제삼아 해고시킨 바 있다.

여민희 노조 7지부장은 "사측이 교섭 초기엔 가압류나 부당해고 철회 건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4차 교섭 때부터 21일 8차에 이르기까지는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체결권을 위임받았다는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제대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조위원장이 사측과의 잠정합의 후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사측과의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7년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갖는 것으로 개약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진익 조직2국장은 "이는 다른 사업장들에선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주영]

(⇒1면에서 이어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법과 외교문서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서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일협정 체결 후 37년이 지나도록 관련 기록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한국정부가 문서 공개를 계속 회피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임을 선포했다. [범용]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셸'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 인권기구인 '아프리카 인간과 민중의 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다국적 석유회사 '셸'의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의 오고니 족이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권규약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이지리아 최대 유전지역인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셸(영국, 네덜란드), 셰브론, 모빌, 텍사코(이상 미국)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석유를 생산해 큰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제 주인인 민중들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해치고 석유자원도 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회권 행동센터 등 인권단체는 96년 3월 그 지역의 오고니 민중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했고, 6년이 지난 후 결정 내용을 받게 됐다.

국영석유회사와 셸 콘소시엄은 석유를 생산하면서 독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물, 공기, 토양이 오염되고 오고니 민중들은 호흡계·신경계 질환, 암, 출산장애 등 높은 발병율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지리아 군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을 동원해 석유회사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더군다나 켈 사로워와 등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오고니 민중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군을 동원해 오고니 마을을 공격, 파괴를 일삼았다. 이같은 내용은 '셸'과 국가안보대책위 사이에 주고받은 짧은 글, 군 책임자의 육성인 담긴 비디오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 오염으로 오고니 민중들이 농사를 짓거나 낚시를 하는 것도 어려운 터에, 군부는 있는 곡식까지 없애고 농장의 동물도 죽여 민중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게 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친 후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프리카 헌장의 건강권(16조)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24조)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석유회사의 개발을 적절히 규제하고 감시하지 않아 '셸'이 오고니 민중의 석유자원을 착취해 왔다며 부와 자연자원에 대한 민중의 처분권(헌장 21조)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정부가 오고니 민중의 생존권·먹을 권리·주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오고니 민중들에 대한 공격 중단 △보안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조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재정착 지원 △토지와 강의 종합 정화사업 △석유개발의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석유 개발 및 규제 관련 의사결정예의 주민 참여 보장 등을 나이지리아 정부에 요청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5일(화)

제 21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월드컵4강 전일, 때아닌 공권력 투입

사복경찰 180명,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 시도

파업 한 달을 넘기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 24일 오전 대규모 사복경찰이 투입돼 노조간부를 연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경찰의 연행시도는 무산됐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오전 8시40분경 사복경찰 80여명은 전투경찰 4백여 명과 함께 경희의료원 본관로비에 진입해, 조은숙 지부장 등 노조간부 2명을 체포하려 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고 이중 임신부도 다수 있지만,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격렬히 저항했다. 결국 경찰들은 40여 분만에 철수했다.

거의 같은 시간 강남성모병원에도 경찰력이 투입됐다. 오전 9시경 사복경찰 1백여 명이 노조사무실까지 들어오는 등 병원 곳곳을 훑고 다녔다. 이때 전투경찰 4백여 명이 병원로비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출근하는 직원들도 로비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경찰들은 조합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철수하고 말았다. 현재 강남성모병원에는 강남, 여의도, 의정부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3개지부가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병원 측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대량징계, 체포영장 발부, 조합원 이간질 복귀공작, 손해배상청구, 임금가압류 등 노조파괴를 노린 탄압으로 파업을 장기화시키더니

이제는 공권력 투입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킨 병원 쪽이 ... 지금이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노사자율 교섭으로 타결해야 할 임단협 교섭에 경찰병력이 끼어들어 노정 정면대결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도발한 저의가 의

심스럽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관할 경찰서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복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며, "서울시경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월드컵 4강전이 열리는) 25일 병원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희의료원과 가톨릭계 병원 5곳 등 파업이 진행되는 병원 8곳의 사태는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노조를 손보겠다는 사용자들의 비뚤어진 노조관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경 보건의료노조 염기용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노조 사무실에서 혼자 있다가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3명에게 강제연행되기도 했다. [범용]

7월 4일 '피해자 유족 증언대회' 열려

피해자들 직접 증언, 민간인학살 여론확산 시도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에서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해자 유족 증언대회'가 열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새사회연대 등 6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첫 증언대회여서 주목된다.

'유족증언대회'의 본마당은 모두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포항 미군 함포사격 학살 △거제 경찰서 수장 사례 △마산형무소 학살 △거창 보도연맹 학살 △남원 대강면 감석마을 국군에 의한 학살 등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이 증언된다. 반면 2부에서는 △4·3특별법 제정 이후 △60년대 유족회 활동 △충북 영동 노근리 한미합동조사 이후 △문경 석달마을 헌법소원 경과 등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지역의 활동경과가 보고된다.

'유족증언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원회」(상임대표 이해동 목사 등) 신해영 간사는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묻혀져 있어서 사회의제로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해서 사회의제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행사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신 간사는 또 "현재 월드컵 때문에 다른 사안은 세상에 없는 일인 듯 취급당한다"며, "언론의 관심이 너무 없고 사회단체들도 이 문제를 과거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토론했기도 했다.

예초 '유족증언대회'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4강전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 [범용]

○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 한 젊은 검사의 항변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젊은 검사 한 사람과 동석하게 됐다.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검사가 만났다 보니, 둘 사이엔 자연스레 '인권'과 '수사'에 관한 한담이 오고 갔다.

부임한지 갓 2년을 넘겨 진주에서 근무하는 이 젊은 검사는 "요즘 '인권' 때문에 수사하기가 적잖이 힘들다"며 나름대로의 고초를 토로하기 시작했다.

"조사하다가 '당신'이라는 말 한 마디 잘못 튀어나가면, 곧바로 피의자 입에서 '고발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요.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통신감청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청영장이라도 받을라치면, 그 사이에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고 피의자의 핸드폰번호도 바뀌어 버리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벽에 짚어가며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젊은 검사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형성되다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수사기관과 구급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적지않다는 이야기다. 듣다보니, 있을 법한 일들이고, 그 고충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검사의 불만이 '인권'으로 향한 것은 분명 방향착오였다.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수사편의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 합리적 수사의 여지는 확장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한 인권활동가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교도관을 못살게 구는 재소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벌미를 제공하는 것은 교도관"이라며,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인간적으로 처우하고 법에 따라 처리할수록 그러한 현상을 줄어든다"고 말한다. 나는 이 인권활동가의 문제해결 방향에 동의한다.

한담이 무르익어 가면서, 젊은 검사는 썩어문드러진 부장검사와 맞장 뜬 경험도 이야기하고, 검찰보다 더 부패한 지방법원과 호족들 간의 커넥션에 분노하기도 했다. 또 수십억씩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전의(戰意)'를 불태우는 그의 모습에서 나름의 순수한 열정도 엿볼 수 있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그 젊은 검사에게서 '인권활동가'의 시각까지 기대하는 게 순진한 생각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창조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주간인권호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노조원, 노사정위에서 12일간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단협 체결시 조합원 총회 앞섰다"는 문서를 노조에 요구하며 교섭 지연(6.21)

2.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비판(6.21)

3. 뒤에선 무기 팔며 평화 운운
영국,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양 당사자에게 최근까지 무기 판매한 사실 드러나(6.20)/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 유엔의 무기금수조처 발효기간 중 밀로세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게 군수장비를 제공한 사실 드러나(6.20)

4. 우발적 사고로 얼렁설렁 넘어가려고?
한미합동조사반, 여중생 2명 숨진 미군 차량 사고는 운전병이 전차장의 정지명령 듣지 못해 일어났다고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6.20)/ 여학생 1백여명, 의정부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숨진 동료 여학생 추모 시위 벌여(6.20)

5. 줄 잇는 탈북자들
탈북여성 1명 또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6.21)/ 탈북자 26명, 23일 베이징 떠나 한국 도착(6.24)

6. 난민지원 인색, 한국은 대표선수
민변·좋은벗들 등, 한국 난민정책에 관한 토론회(6.19)/ '난민의 날' 맞아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선진국들이 난민지원에 인색하다" 비판(6.20)

7. 기타 : 보건복지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국립보건원에서 무료 실시 방침 밝혀(6.17)/ 국가인권위, 대학 신입생 모집에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 내려(6.18)/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려(6.19)/ 인권운동사랑방,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 거부 선언(6.1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 대일청구권 확인위해 한국정부에 65년 '한일협정'의 외교문서를 공개 촉구(6.22)

○ 주요 통계
유엔무역개발회의, 세계 49개국 최저개발국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6.1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6일(수)

제 21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제'는 불법...파업 34일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 아래 민택연맹) 소속 인천지역본부 33개 사업장이 '택시월급제'를 요구하며 25일 현재 파업 34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의 봉급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사측이 사납금제의 변형인 업적금제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번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납금제란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액의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납금제에 의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입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사납금제 아래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의 과속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과도동에 따른 건강악화가 필연적이며, 승차거부, 합승 등 택시서비스의 질 하락도 막기 어렵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은 90년대 초 사납금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94년 8월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으며, 97년 9월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가 전격 실시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은 '일반택시 노동자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소속 운송사업자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민택연맹에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들이 당일 수입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후 납부총액의 50%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가

감누진형 월급제'다.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의욕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계의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택연맹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의 약 20% 정도만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불법인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사납금제의 변형인 업적금제가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업적금제는 사납금제를 때보다 다소 낮추는 대신 초과수입을 노사가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다. 하지만 업적금제는 사납

금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온존시키면서도 노동의욕까지 저하시키는 실효성없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민택연맹 기우석 기획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사납금을 납부하면서) 초과수입의 일부를 왜 회사에 내야 하나'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많은 사업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업적금제를 채택했다고 서울시에 보고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인천의 택시업계는 지난 2001년 5월 일방적인 교섭중단 이후 지난달 24일 파업돌입시까지 1년간 단 1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조차 불참한 바 있다. 민택연맹의 요구사항은 이미 법에도 명시된 전액월급제이고 택시업계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인천시청의 특별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범용)

☞ 책임기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펴낸 곳 : 소나무/ 펴낸이 : 도초가 예츠로/ 역은이 : 박홍규/ 314쪽 / 200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을 일컬어 '중군위안부' 혹은 '정신대' 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본인 변호사 도초가 예츠로 씨는 이들 여성을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는 다분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이며, 피해 여성이 겪은 강요된 성노예의 진실을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도초가 예츠로 씨는 성노예로서 한국 여성의 실상을 1992년부터 유엔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촉구해 왔다. 이 책은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온 지난 10여 년 간의 기록의 발자취들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이 문제가 국제인권 무대에서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과 현대형 강제노동의 관점으로 다루어져 온 데는 그의 숨은 노력이 배어있다.

또한 굵직한 유엔 인권문서에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의 참상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게 국제 인권법적 책임을 묻는 권고를 낼 수 있었던 힘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유엔 인권 메카니즘을 활용한 실무법률가들,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 책은 유엔 등 국제인권절차를 실천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담은 보고서로 국제 인권기구 절차의 실체를 알고, 이를 활용하려는 인권운동가나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최은아)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25일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일반노조·평등노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소속 활동가들이 이날 경총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일반노조 유기만 집행위원은 "낮게 책정되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저임금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들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평균 47만4천6백원(시간당 2천1백원)이다.

유 집행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서 기본급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낮은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겨우 먹고살기 위해 잔업·철야를 1백~1백50시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상시위탁집배원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에 턱걸이하는 50만1천원이며,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은 한달 1백9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외에 1백~2백시간에 달하는 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하위 20% 계층의 임금 수준은 97년 22.3에서 지난해 18.6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저임노동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액은 월 61만2백원(시간당 2천7백원).

하지만 그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상무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기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경우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사용자 측은 월 48만5천9백원~49만4천4백88원(시간당 2천1백50~2천1백88원)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2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하면 노동부장관은 이를 8월께 고시한다. 이에 농성자들은 28일까지 경총 앞 천막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일 아침 6시30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찾아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농성단은 전기·보일러 관리나 경비 일을 하는 감시단속 노동자와 여성용역 노동자들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최저임금제도 개선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작지우지

교육부, '조국애·질서익식' 부각...2학기 삽입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학기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표지와 내용에 월드컵 개막식 사진, 붉은악마 응원, 월드컵 공동개최 사실 등을 신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우영 연구관은 "월드컵을 통해 국민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조국애를 느낀 점, 외국과 비교되는 질서익식 등은 좋은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아직 교과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교과개정 방향만 결정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권교사모임의 송영옥 교사는 "월드컵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금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송 교사는 "월드컵이 큰 행사라는 사실만으로 한두 줄 사회교과서에 새롭게 소개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의 반대군 정책국장은 "개정내용을 알 수 없어 의도를 파악할 수 없지만 교과과정 중에 교과내용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중심으로 집필을 하기 때문에 교과방향에 대해 외부에서 의견을 개진하기엔 근본적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우영 연구관은 "교과서에 비교육적인 자문화중심적인 민족주의나 민족우월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하며, "민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과서 배포 후 문제제기 하라"고 답변했다. 당장 2학기부터 쓰일 6학년 사회교과서의 경우, 7월말에서 8월경 학교현장에 배포되고 나서야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각 교과서는 교과서별 교육과정에 따라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교사 등이 집필한 후 교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된다. 발행된 교과서는 몇몇 시범학교를 통해 1년간 사용된 후 평가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제도적 문제를 낳고 있다. [김보영]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연행

25일 새벽 1시 10분 경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과 김순섭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이 농성 중이던 서울 명동성당에서 경찰에 기습적으로 연행됐다. 이 위원장 등은 농성장을 방문한 발전노조 간부들을 배웅하고 천막농성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명동성당 들머리를 올라가던 중 나타난 사복경찰 10여명과 심한 몸싸움 끝에 끝내 경찰서로 연행됐다.

발전노조는 '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4월 2일까지 38일 간의 파업을 벌였으며, 이 위원장 등 발전노조 지도부는 그 이후에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원직복직, 가입료 해제,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1백21일째 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7일(목)

제 21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2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3년 군에서 사망한 한희철 씨 사인을 자살로 규명했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했다.

83년 당시 군복무 중이던 한 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배 중인 신모 씨 등을 도운 바 있다. 그런데 같은해 12월 초 신씨가 보안사에 의해 검거되면서 한씨의 행적이 발각됐고, 한씨는 곧바로 보안사에 연행돼 5일간 집중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부대로 복귀한 한씨는 복귀 바로 다음 날 경계근무 중 자살했다.

사건 당시 군 당국은 한씨가 현실을 비판한 나머지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유가족들은 보안부대에 의한 고문으로 타살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해 왔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한씨는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입대전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결국 한씨는 어쩔 수 없이 운동권 동료들에 대해 진술한 것을 자책했으며, 또 다시 보안사에 의해 불려가 프락치를 강요받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보안사의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항거의 표현"이라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 "보안사의 ... 감내하기 어려운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좌절감과 두려움,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현 의문사법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의문사로 인정받기 위해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녹화사업을 단행한 보안사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으로 규정하고 자살임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희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가혹행위 전모와 가해자 등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문사위는 87년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에서 사망한 노철승 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헌병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됐다는 점을 밝혔다.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군 당국에 의해 흔히 조작되는 군대 내 사망사건의 전형을 드러낸 점은 성과로 지적됐다. [법용]

미군, 사과하랬더니 물대포 쏘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1차 범국민대회 열려

26일 오후 4시 의정부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최근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제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자통련·전국연합·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5백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한·미당국이 이번 참사를 거액의 돈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국민대책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 당국은 두 가정에 각각 4억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고 더이상 이 사건을 문제삼지 말라고 유가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부시 미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공개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건 관련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19일 한·미 당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반대편 차로로 탱크가 지나갔는지 여부 △여중생 두명을 사건 직전 봤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여러차례 말이 바뀌어 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집회가 끝난 후, 저녁 6시 경 범국민대책위의 대표단은 미2사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미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미군 및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심하게 붙었고, 미군 측은 촬영 중이던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 한유진 기자를 연행했고 저녁 7시 10분 경에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물대포까지 쏘았다. 이 때문에 취재 중이던 기자들의 카메라 등 기자재가 망가졌다. 또 미군에 연행됐던 두 기자는 의정부경찰서로 이송됐다.

한편, 유족들과 범국민대책위는 27일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등 6명의 미군 관계자를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 또 한 범국민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넘겨 줄 것을 주한미군 측에 요구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지난 22일자 논평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논평>의 본래 취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질타와 비판, 또는 우리에게 대한 단순한 인식공격적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번 <논평> 발표를 계기로 '붉은 악마' 현상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마련된 점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초 논평에서 표명된 저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면상의 한계로 논평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논거들을 보강하여 제시함과 아울러, 이번 논평의 내용에 대해 여러 분들이 제기하신 비판과 질의에 답함으로써 좀더 생산적인 토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우리의 비판 대상은 거리응원을 즐기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축구 사랑이라는 개인적 취향으로 모인 동호인 조직으로서의 '붉은 악마', 그리고 그저 한관 결판까지 놀아보기 위해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들이 <논평>이 비판하고자 한 대상은 아닙니다. 고단한 삶, 지루한 일상, 더러운 정치권이 쏟아내는 각종 비리소식에 지친 시민들이 월드컵과 거리응원을 축제로서 즐기거나 하는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붉은 악마 현상이 진정으로 '순수한' 자발성에만 기초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논평>은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될 것을 종용하고 '대-한국'을 외치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그러한 '붉은 악마 현상'을 부추기고 거리에서 생산되는 자생적 문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해나가거나 하는 '의도된 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 기획자들은 다른 아닌 자본과 권력과 언론이며, 그에 동조하여 추악한 아부를 서슴지 않는 지식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그 '순수한' 열기가 자본과 권력이 의도하는 방

향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칭송하시는 그 '해방의 에너지'가 오히려 '위로부터의 동원 메커니즘'인 파시즘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힘과 이 현상을 통해 생산되는 반인권적 담론들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출구는 국가주의의 망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드컵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대항전이기에 때문에 국가주의를 고취시키는 요소를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강렬하게 부추기는 것은 바로 언론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나카타 선수가 '기미가요'(일본의 국가)를 제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우익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왔으며, 바로 이러한 순치 과정을 거쳐 기미가요를 따라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론은 각종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적 수사를 남발하면서, 스포츠와 열띤 응원이 이루어내는 집단적 일체감을 국가주의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축구는 "총성없는 전쟁"이 되고, 한국대표팀 선수들은 어느새 축구선수가 아니라 "태극전사"가 되며, 독일과 한국의 준결승전은 "독일 폭격기와 국산 요격기의 대격돌"이 되고, 한국-스페인전은 "막강 무적함대 스페인호를 격침시킨 광주대첩"으로 명명되며, 한국의 4강진출은 "남부유럽을 점령"한 것이 됩니다. 또한 언론은 한국팀의 선전이 "12번째 선수가 함께 뛰기 때문"이라고 거듭 칭송하면서, 5천만 국민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될 것을, '태극전사'들과 함께 될 것을 종용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한 '하나됨'인지, 가슴뭉클한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대-한국'이라는 구호가 과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열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붉은 용광로' 속에 녹아들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기간에 한사코 '노사평화'를 깨뜨리는 한심한 노동자나 즐기라는 축구는 즐기지 않고 생존권 보장하라며 때리는 노

점상들, 혹시 오심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말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국가통합을 해치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존엄과 권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 현실 구조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마당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호명하고 있는 국가주의라는 망령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광기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복'과 '승리'가 가져다주는 환희에 도취되고, '필승'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흐름은 지나친 국가주의와 파시즘적 정서와 몰이성에 가속 페달을 달아줍니다. 오락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나라들은 어느새 '우리의 승리'를 도둑질하려는 상종 못할 '적국'으로 매도되고, 한국의 편을 든 나라들은 자연스레 '우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지탄받아온 국제축구연맹(FIFA)은 한국팀의 '4강 진출 음모설'을 일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새 가장 공신력있는 기구로서 추앙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처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 혹 중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 아니냐"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우려했던, 인권과 화합할 수 없는 맹목적 애국심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자본-권력-언론의 삼위일체, 그들은 왜 붉은 악마 현상을 '기획'하는가?

언론이 이처럼 '붉은 악마 현상'을 조장하고 국가주의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상업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각 방송사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수백억대의 중계료를 지불하는 대신, 막대한 광고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각 방송사는 개막 이전부터 월드컵 총력체제에 돌입하여 16강 진출을 온 국민의 숙원으로 만들어내고,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붉은 악마 현상'을 자극하고, 지금도 각종 묘기대행진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SK 텔레콤을 비롯한 자본 역시 '4천만이 붉은 악마가 되라'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거리응원 마당을 제공함으로써 간접광고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과 언론이 국가주의의 기적이 연합하여 월드컵 과잉 열기를 주도해내는 근본 동력입니다.

이러한 붉은 악마 현상은 국가권력과 우리 사회의 보수지배세력들의 이해에도 봉사합니다. 물론 지배세력들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공포정치와 강제명령에 의해 국민들을 사주하거나 직접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한 만큼 지배세력의 대중통치술도 더더욱 세련되고 교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억눌려있는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와 현실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해방과 사회 변혁의 에너지로 승화되지 않도록,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집단적 환희를 체험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도록 유도합니다. '스포츠는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역전의 드라마와 축구영웅들이 가져다주는 감동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지루하고 진흙탕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무관심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생산·강화되는 국가주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비판세력들을 소수로 몰아부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에 지배세력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월드컵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또 다른 이유이며, 시청앞 광장을 붉은 악마들에게 선뜻 내주는 이유이며, 그러면서도 질서 캠페인을 끊임없이 벌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언론사 데스크에는 수십 수백, 아니 수천 건의 주요한 사건들이 보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희의료원과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월드컵 보도에 밀려 참담한 외면을 당해야 했으며, 축구장과 거리와 인터넷에 넘실댔던 국민들의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두 여중생의 죽음은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사안들이 정지되어 있는 셈입니다. 월드컵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관심영역 또한,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움틀거리는 역동적인 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응원에 참여했다고 믿는 시민들도 과연 자신이 이러한 조건으로

부터 자유로운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승리'가 아니라 경기 자체를, 축구가 아닌 축제의 마당을 즐기 위해 거리응원을 나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수많은' 열광들이 '하나의' 의도된 열광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의 대립하고 있는 관계들이 '하나라는 신화' 속에 모두 함몰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4. 지식인들은 낯뜨거운 아부를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붉은 악마 현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진보의 색깔까지 덧씌우려는 지식인들의 태도는 가히 낮아 뜨거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식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유식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공적인 언론의 지면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양식'을 환기시킬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국가통합 이데올로기를 선동하고, 민족적 우월감을 자극하며, "붉은 악마의 핏속에는 민족과 국가라는 유전 인자가 자리잡고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논평>에 대한 유감(?)을 "빨갱이들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라는 욕설로 퍼부어 대는 현실에서, 레드 콤플렉스를 빨간색'에 대한 혐오와 곧바로 등치시키고 붉은 옷의 물결을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 단언하는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의 인식 수준은 가히 천진스러울 정도입니다.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지금의 '붉은 악마 현상'을 칭송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지금 거리에서 발현된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진보와 해방의 에너지로 '질적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없이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온 국민에게 붉은 옷을 입을 것을 격려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월색 옷은 학생답지 못하므로 안된다'는 전근대적 교칙을 앞장서 바꿀 것인지, 한국은 살 곳이 못된다며 이 땅을 떠나는 대대적 이민현상은 사라질 것인지, '아시아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한국이 우리와 함께 응원했던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추방을 멈출 것인지, 시청 앞

광장을 선뜻 내주었던 국가가 1인 시위까지 금지하려는 집시법 개정을 그만둘 것인지, 지금의 반미감정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지금의 '하나됨'의 환희가 파업 노동자들과 장애인들과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고통에 기꺼이 연대하는 진정한 '하나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권력과 자본과 언론이 부추기는 '국익'이나 '민족적 에너지'의 환상은 우리의 이런 고민에 결코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외쳤던 그때, 광주와 6월항쟁의 거리에 '자발적'으로 나선던 그 '순수한' 열정들은 그들이 희구하는 그 가치만으로 군사독재에 신음하는 다른 제3세계 민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 넘실대는 '타는 목마름으로 4강으로 가자'와 같은 '필승'의 구호들 속에서는 우리 사회의 억눌린 노동자와 민중은 물론, 다른 나라의 민중들과 기꺼이 연대하려는, 자국의 이해가 아니라 인류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열린 가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 현상'에 모두가 몰입해 있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통합 이데올로기가 떠리를 틀고 들어왔고 있으며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후퇴와 인권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후퇴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에 불고있는 극우파시스트 세력들의 광풍으로부터 한국은 예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구는 축구일 뿐'이라는 주장에 우리가 탄지를 거는 이유이며, '축구를 축구로서 즐기자' 하는 분들도 작금의 현실에 비판적 개입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국 세계최강'을 연호하는 필승의 열광도, '온 국민이 하나'라는 신화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파시즘의 발호를 경계하는 인권의 감수성과 실천입니다.

2002년 6월 26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불온통신’ 조항 위헌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동성애자사이트 폐쇄, 군대반대사이트 이용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검열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는 27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집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했으며, 하경철,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터넷공대위)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

표하면서 “이번 판결이 정통윤의 조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 제검토로 이어져야 하며, 정통윤은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공대위의 장여경 씨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주체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정통윤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헌재의 결정이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제검토와 인터넷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조]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고소

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 2면으로 이어짐)

만화사랑방

이동수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두고 쏟아낸 백혈병 환자들의 질곡이었다. 27일 오후 1시경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한국노바티스(주) (아래 노바티스) 사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글리벡 약가인하를 주장하며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곳.

환자들과 활동가들은 사실경호원들의 저지를 헤치고 전자잠금장치로 굳게 닫힌 유리문을 거세게 흔들며 사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거친 몸싸움에 때때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노바티스를 향한 고성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아수라장이길 1시간. 하지만 더 이

상의 투쟁은 환자들에게 무리라는 판단 아래, 이들은 이날 투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끝내 사장과의 면담을 이루지 못한 환자들과 활동가들은 ‘레키’로 자신들의 주장을 노바티스 유리문에 남겼다. “약가인하”, “이윤보다 생명”,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이날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은 노바티스 쪽에서 제공했다. 12시경 사장과의 면담하기 위해 노바티스 건물을 방문한 환자들과 활동가들은 먼저 건물 로비에서 사실경호원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사실경호원들은 ‘환자들하고만 면담하겠다’는 사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활동가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심지어 기자들조차 취재를 거부당했다.

이에 환자들은 그 자리에 탈색 주지

않아 기자단과의 동행을 주장했고, 활동가들은 즉석집회를 열어 규탄발언을 했다. 이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인순 부회장은 사장실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온 환자들에게 힘이 못돼 정말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건물 로비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이들은 계단을 통해 기습적으로 사장실까지 올라갔다. 사장실은 그 건물 16층. 환자들과 활동가들 모두가 사장실 앞으로 몰려들자, 노바티스는 ‘전원 면담은 불가능하다’며 대표단 구성을 요구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환자, 활동가, 기자 등이 포함된 9명의 대표단이 구성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사가 사장이 없다’며 노바티스는 면담이 불가능함을 통보했다. 이때부터 환자들과 활동가들의 분노는 견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1시경 이들은 노바티스 건물 앞에서 ‘살인기업 노바티스에 대한 글리벡 약가 인하 요구 환자·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자금 투입, 세금혜택 등) 공공적 도움을 통해 노바티스는 전세계 글리벡 시판 8개월만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신약 개발비 등으로 약가 인하기 어렵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또 “브라질에서는 정부와 노바티스가 협상을 통해 작년 9월에 6개월간 무상공급과 글리벡 1캡슐당 16,000원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노바티스는 글리벡 1캡슐당 2만3천45원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루 4캡슐 기준으로 환자 1명당 약가는 월 2백76만원 정도다. [범용]

(⇒ 1면 ‘여중생’ 기사에서 이어짐)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주영]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

27일 한국의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며 세계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스위스, 미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26개 나라 37개 도시에서 각각 노총과 산별노조원들이 각각 주재 한국 공관 앞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기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르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 정지용 대사를 만나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4년 6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 수는 무려 7백78명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6백32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다. 또한 현재도 52명이 구속 수감 중이며 75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이밖에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분천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국제공동행동의 날인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묘에서도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오봉섭 부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 전제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파업이란 원래 생산을 멈추는 행위인데,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도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노동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2년 6월 29일(토)

제 21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28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근, 아래 최저임금위)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의 '8.3% 인상안'을 받아들여 월 51만4천150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은 물론 실질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도 미치지 못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교섭이었다"라고 평했다. 지난해 12.6% 인상과 지지난해 16.6%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노쪽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올해는 '사쪽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경총 요구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유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애초 노동계는 월 61만2백원을, 경총은 월 49만1천88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정책실장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이 얼마 '인상'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 '현실화'됐냐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많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의 1/2이며, OECD 가입국은 통상임금의 2/3다. 반면 이

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앞두고 25일부터 전북일반노조, 경인지역평등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여성연맹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경총 앞 노숙투쟁을 전개해 왔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으로 구성된 불안정노동철폐공동투쟁에서는 지원단을 꾸려 이들의 투쟁에 동참해왔다. (=2면에서 계속)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의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싸운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는 지적재산권을 방패삼아 꾀팍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4일 정부와의 약값 협상에서 2만3천45원을 최저가격으로 못박고 이게 아니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환자들은 하루에 4알 내지 8알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노바티스 요구대로라면 1인당 한달 약값만 월276만원에서 553만원이다. 보험적용을 한다면 월83만원을 약값으로 털어 넣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약값을 부담하기란 불가능하다. 글리벡은 기존의 백혈병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지만, 결국 다국적기업의 끝없는 탐욕 탓에 사 먹을 돈 있는 사람들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미국·스위스·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약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브라질에선 글리벡을 6개월 간 무상공급하고 이후 1알 당 1만6천원에 판매하기로 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노바티스가 글리벡 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을테니, 그 이상의 수익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시판 8개월만에 노바티스는 이미 약 1천7백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려 최소한 임상실험에 든 비용을 회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글리벡 개발에 많은 비용을 낸 건 노바티스가 아니라 미국국립암연구소, 오레곤 암센터 등 공공기관이란 점은 더 얘기 않겠다. 한심한 건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정부교시조차 거부해온 노바티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더니, 최근엔 노바티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보험제정을 염려해 만성기 환자의 글리벡 복용에 대해선 보험적용도 하지 않는 정부가 선진7개국 수준으로 약값을 맞추는 건 무슨 모순인가.

지난 해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에 함께 했던 환자 중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백혈병 환자들은 "약이 없어 죽을 순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순 없지 않냐"라며 정부와 노바티스를 향해 절규하고 있다. 노바티스와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건 죽음의 흥정을 단장 중단하라. 환자들이 먹을 수 없는 건 더이상 약이 아니다.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말대로 채택은 자율이라 할지라도, 이번 예시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내건 교육부의 입장이 담긴 것이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것이 던지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공교육 내실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민주주의의 강화와 학생인권의 신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침해받았을 경우의 구제방법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예시안에서는 그런 면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예시안 제12조에서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시설물 애호와 낙서금지'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정작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쾌적한 환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빠져있다. 특히 실업고 예시안의 제30조 '현장실습 준수사항'에서는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져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고 있다. 실습 중에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권한 없는 학생회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회의 권한이란 사실상 없다. 애초부터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고(제36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제39조). '회'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생활지도협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시안에 '정당활동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현행법의 참정권 제한 연령이 낮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식당원이 아니라 하여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이 출현한다고 할 때 정당원이 될 수 없다하여 녹색당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이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말 큰사전은 정치활동을 '정치에 관계하는 모든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예시안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체벌은 당연 허용

예시안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체벌 허용 방침을 뒷받침하듯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때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체벌이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체벌을 당연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

하라 했으나, 체벌은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연 교육부가 예시한 절차를 다 밟아서 체벌을 할 교사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예시안의 세세한 규정이 "구차하기까지 하다"며 "체벌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교사의 권위는 체벌 허용이 아니라 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올바른 교원정책수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시콜콜 간섭하는 '자율'

예시안은 "자주적" 또는 "스스로"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학생 생활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하라거나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생회장, 부회장, 지도부를 제외한 학생이 2명씩 일주일간 하라",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는 등 그 시시콜콜한 지시와 자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10월 인권단체가 발표한 '244개 중·고교 교칙 분석'보고서가 전국 대적인 교칙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러 학부모·교사·학생단체들이 전국 대적인 교칙을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런 흐름들과 같이 갈 수 없을까. (류은숙)

(=>1면에서 '최저임금' 기사 이어짐)

이날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47만6천4백원은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4만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노사교섭할 때 그 정도로 임금이 책정된다"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전북일반노조는 전북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롯데매그넷 등에서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수많은 용역·과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이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과연 월 51만원으로 생활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참담함과 분노를 표했다. (범용)